정책연구
2020-06

DSI

민선 7기 후반기 미래도시 대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연구

황 혜 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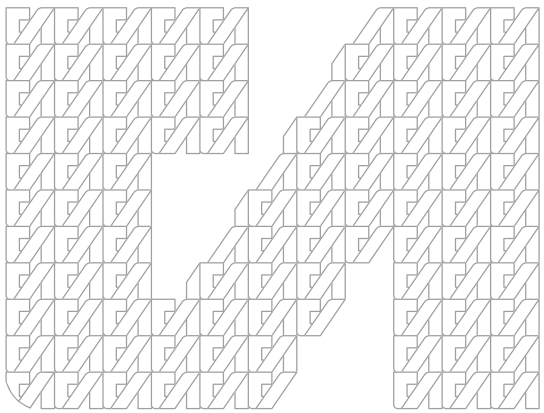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20-06

DSI

민선 7기 후반기 미래도시 대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연구

황혜란 외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총괄 연구책임		• 황혜란 / 미래전략실 선임연구위원
부 문 별 연 구 책 임	경제·산업·과학부문	• 강영주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도시공간 부문	• 임병호 /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교통부문	• 이정범 /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문	• 양성욱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여성·가족부문	• 류유선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체부문	• 유병선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시민자치 부문	• 최길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문화예술부문	• 한상헌 /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관광체육부문	• 윤설민 / 미래전략실 연구위원
	환경부문	• 이재근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안전부문	• 이형복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정책연구 2020-06

민선7기 후반기 미래도시 대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연구

발행인 박 재 묵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신진기획인쇄사 (전화 : 042-638-7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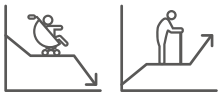
요 약

Ⅰ 지역 내·외 정책환경의 변화

1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

글로벌 미래 메가트렌드

- 국내외 6대 미래연구 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글로벌 미래 트렌드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메가트랜드 도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도시화 도시문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보건복지		지속가능 환경	

-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는 다음과 같이 향후 경제·사회·정치 각 부문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이 필요함

경제	사회	기술	보건·복지
기본소득-지역화폐	비대면접촉	디지털전환	공공의료체계
유통(온라인쇼핑)	노동형태 변화	비대면/가상화기술	개인보건/예방의학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일가정양립	의료바이오산업	안전사회

2 국내 정책환경 변화

중앙정부 정책환경 변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또한 변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별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경제산업	4차산업혁명·포용경제 위기관리	도시공간교통	도시성장·스마트화 (초)광역화
보건복지	사회적 돌봄체계 포용적 복지	문화관광	생활문화·웰니스(Wellness) 스마트스포츠
여성가족	젠더갈등 해소 일·가정 양립	공동체 시민자치	공유공간·문화 시민주권
환경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성장시스템 전환	안전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스마트 안전시스템

3 대전의 현재와 도전과제

(경제·산업·과학) 우수한 미래성장성 vs. 규모경제 미흡

-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우수한 미래성장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규모경제 확보의 한계에 의해 지역경제 성장에 지체현상 발생
  * 벤처창업률('17, 14.8%) 특광역시 3위, 벤처캐피털 신규투자('17, 전국대비 5.3%) 특광역시 3위 등 성장자원은 우수하나 벤처기업수 ('17, 1,321개) 전체 8위, 신생기업 생존율 ('16, 25.7%)로 특광역시 최하위

(공간·교통) 신성장거점 확충 가능성 vs. 광역 지위 약화

-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 증가로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신성장거점 확충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 충청광역권 내에서 세종시 성장 등으로 광역지위 약화 추세이나 광역교통이나 생활권 수요 등 광역권 내 거점도시로서의 잠재수요는 증가
- 대전-세종 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세종, 청주, 공주 등 광역통행권과의 이원화된 교통운영 등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

(문화·관광) 우수한 기반 vs. 특색 부재

- 대전은 문화 기반 시설과 문화 자원 차원에서 매우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특성화가 미흡. 관광 부문에서도 특화 거점형 관광 자원의 부재로 인해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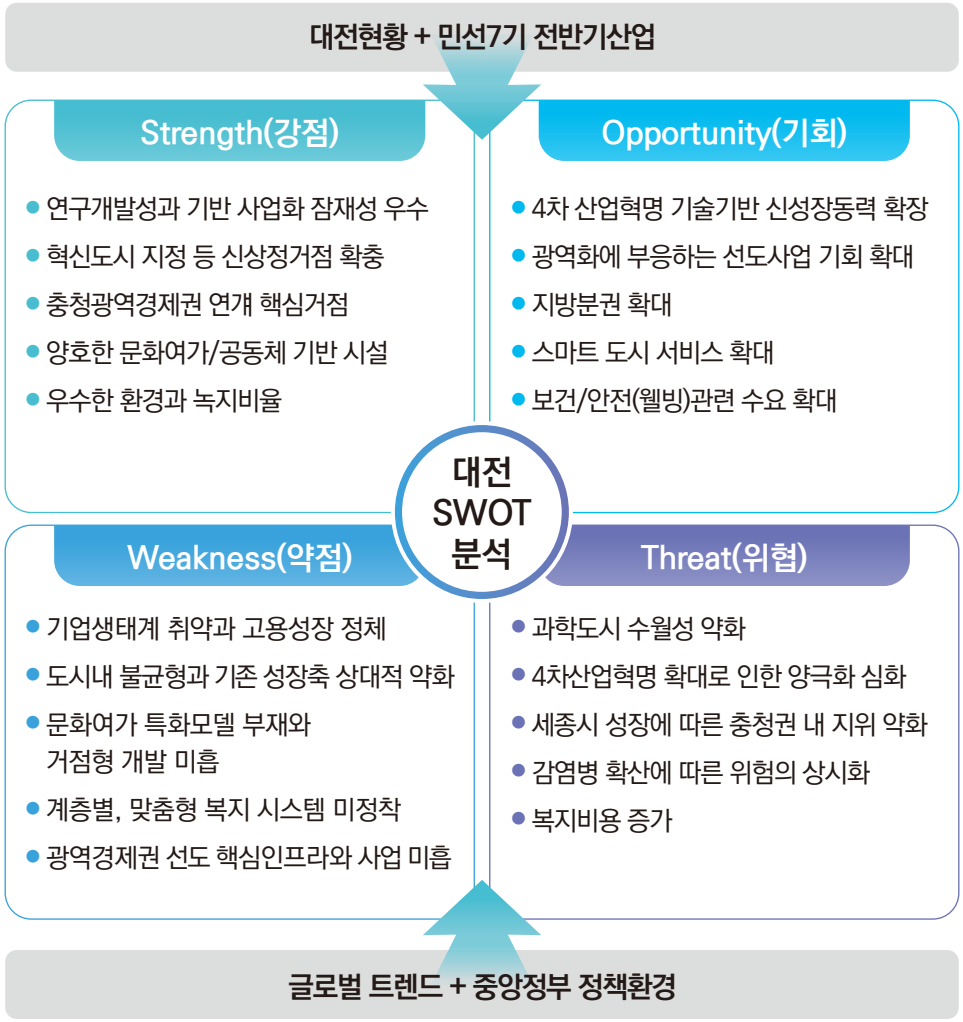
(복지·여성) 양호한 환경 vs. 계층별·맞춤형 대응 시스템 미흡

- 복지·여성·공동체 분야에서도 양호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원화되는 복지·여성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계층별 맞춤형 수요 대응 시스템은 미흡
  *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 수요와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할 계층별 복지·보건시스템 미정착
  * 성평등 환경은 양호하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전국6위), 관리자 비율성비(전국12위) 등 여성체감 지위는 낮으며, 안전과 가족분야 성평등 수준에서 하위권

4 대전 SWOT 분석과 전략방향

대전 SWOT 분석

- 글로벌트렌드와 중앙정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회와 위협(OT), 대전현황과 민선 7기 전반기 시작된 사업을 고려한 강점과 약점(SW)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SWOT 분석에 근거한 전략방향 도출

- SWOT분석에 근거하여 6대 전략방향성 도출

민선 7기 후반기 6대 전략방향성

① 대덕특구 혁신자원 연계
② 신성장 거점 확보
③ 광역화 선도
④ 계층별·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⑤ 문화·여가 특성화 모델 발굴
⑥ 스마트 솔루션 기반 도시경쟁력

S-O전략(감정-기회)

- 풍부한 R&D자원 연계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
- 혁신도시 지정 계기로 신성장거점 확충
- 광역화 선도사업 확보로 충청권 핵심거점 지위 공고화

S-T전략(감정-위협)

-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벨트 연계한 혁신플랫폼 도시 도약
- 연구개발 자원 연계한 대전형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 우수한 환경자원과 도심녹지 활용한 웰빙안심도시 이미지 정립

W-O전략(약점-기회)

-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서비스업 고부가화
- 원도심 중심의 신성정거점 확충으로 지역내 균형발전
- ST 기반의 문화여가 특화모델 구축
- 광역사업 확대 계기로 광역교총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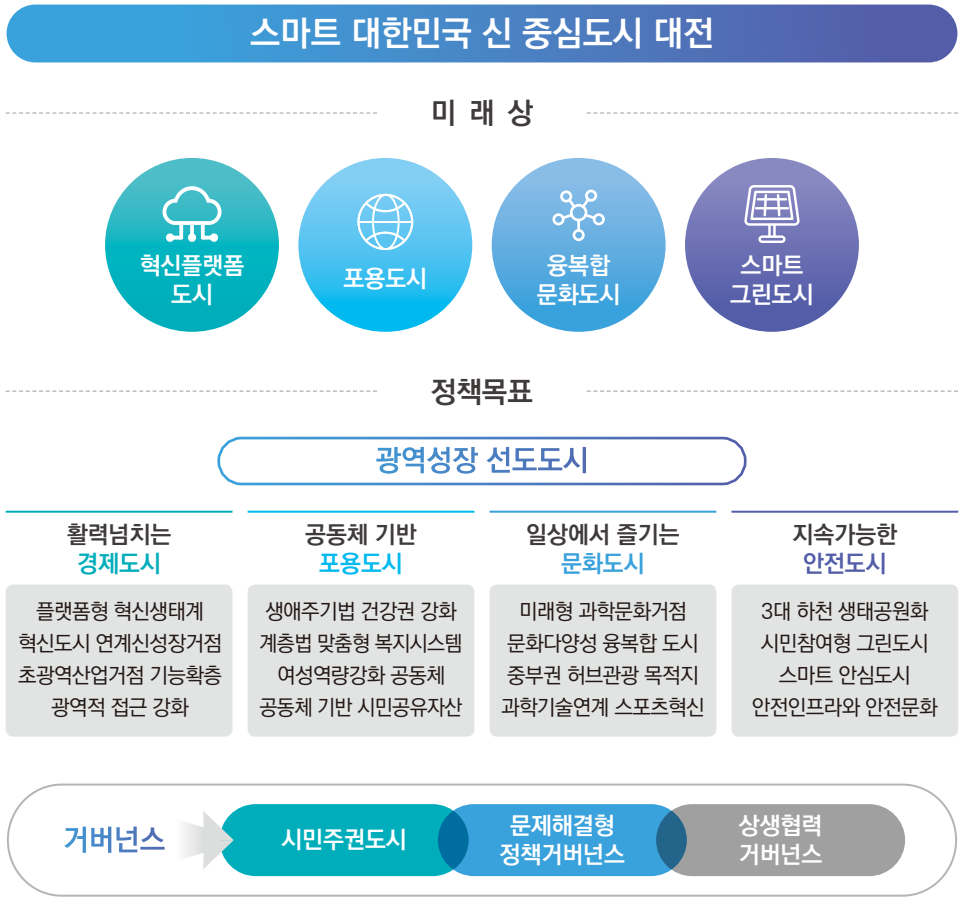
W-T전략(약점-위협)

-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고용확대
-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정착
- 충청권 연계협력 사업 선도기획

II 민선 7기 후반기 미래대전 비전과 정책아젠다

민선 7기 후반기 미래대전 비전과 정책목표

- (비전) 스마트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
- (5대 정책목표)
  - 광역성장선도 도시 : 광역선도 통한 거점도시 지위 재구축
  -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 혁신플랫폼형 과학도시 경쟁력 강화
  - 공동체 기반 포용도시 :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도시 : 특화 자원에 기반한 대전형 문화여가 모델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 스마트 기술 활용한 친환경 안심도시 모델 구축



민선 7기 후반기 미래 대전 정책목표별 아젠다

1.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플랫폼형 혁신생태계 고도화	혁신자원을 고부가화하여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형 혁신생태계로 도약
혁신도시 연계 신성장 거점 확충	혁신도시 지정 연계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신성장 거점 확충
초광역산업거점 기능 확충	초광역 거점 기능 확충을 통해 충청권 중학도시로서의 지위 공고화
광역적 접근성 강화	교통허브 기능 확충을 통한 광역교통 중심지 재확보와 시내 교통 접근 용이성 확대

2. 공동체 기반 포용도시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감염병 예방을 포함, 출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의료 시스템 정착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별 복지 수요에 대응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 역량강화 공동체 확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형 공동체 공유공간, 네트워킹 등 확대
공동체 기반 시민공유자산 확대	공유공간, 공유주방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공유공간과 활동을 통한 시민공유 자산의 확대

3.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도시

미래형 과학-문화 거점 구상	국가대표 과학도시 위상에 부응한 과학-문화-예술 간 융합으로 미래형 과학도시 신거점 구상
문화 다양성 융복합도시	문화 예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적 도시로서의 대전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융복합 도시를 구현
중부권 허브관광 목적지	대전의 강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관광자원의 점, 선, 면 기능 강화를 통해 중부권 허브 관광 목적지로 도약
과학기술 연계 스포츠 혁신	과학도시 기반을 연계하고 스포츠 분야R&D 투자 확대를 통해 대전형 스포츠 혁신모델을 구축

4.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친환경 물순환 선도 녹색도시	하천을 중심으로 한 물순환 관리체계 완성을 통해 물순환 선도도시 달성과 도심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살고싶은 생태환경도시 조성
시민참여형 그린시티	폐기물 순환, 미세먼지, 악취 등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민이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생활환경 실천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그린시티 추구
디지털 트윈 스마트 안심도시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통한 스마트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안심도시 추구
안전인프라 확충과 안전문화 고취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거점 교육기관 확충 등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Ⅲ 정책목표별 추진 과제

1 광역선도 도시

1.1 「초광역 슈퍼 사이언스 대세밸리」 조성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과학도시를 조성하고 광역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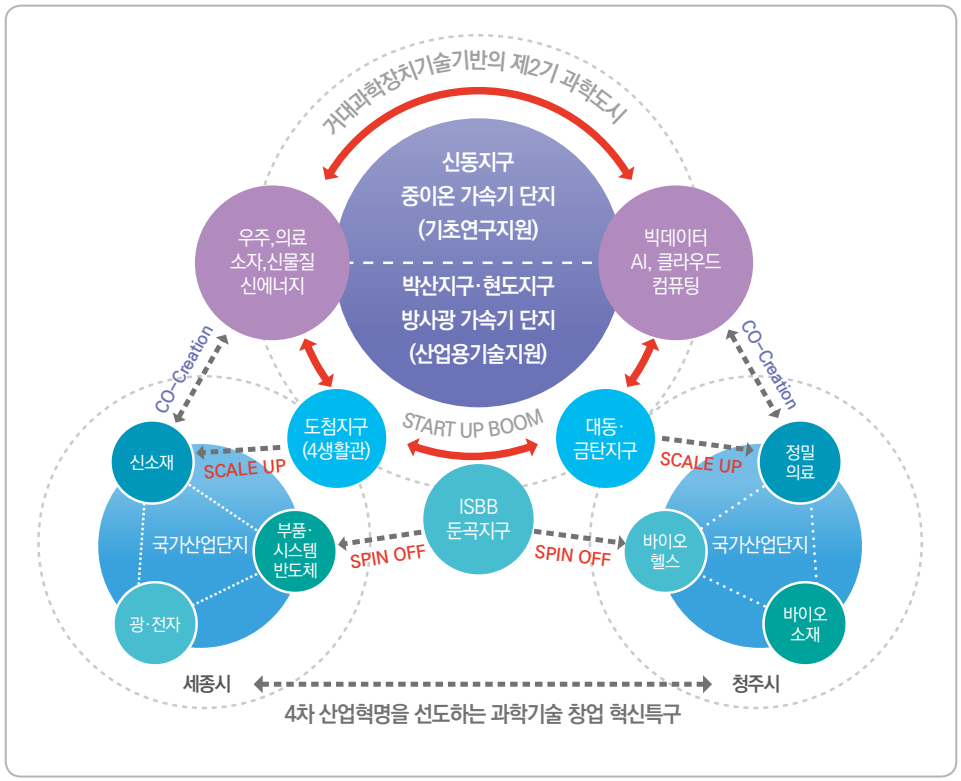
추진 목적

- 중앙정부 정책의 광역화 지향과 세종시의 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충청광역경제권 내에서 대전이 핵심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광역 사업 개발 필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가시화에 따라 대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연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
- 4차산업혁명 선도 등 국가혁신거점 권역으로서 대전-세종-오송오창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초광역 신 경제축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추진 내용

- 가속기 기반 국제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
  - 산업활용도가 높은 중소형 가속기 추가건설 및 방사광 가속기 광역연계
  - 가속기 기반 협업 및 국제협력 문화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과학기반 기업 집적과 기업의 가속기 활용을 위한 지원 기능 확충
  -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할 연구장비산업* 육성

    * 연구장비산업은 R&D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연구관련 서비스 및 연구장비 등을 지원하는 R&D 연동 산업활동 (주문연구, 연구기획관리, 고급연구장비)을 포괄



[그림] 대세밸리 내 네트워크형의 제2기 과학도시 연합 체계 개념도(안)

- 신동·대동·둔곡지구(대전)-오창·청주(충북)-세종을 연결하는 충청광역 연합체계 구축

- 신동·둔곡 자족성 확충과 대동·금탄 포함한 자족기능 확충
  - ①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②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③ 상업 및 업무기능 ④ 과학문화 시설 ⑤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단독·공동주택단지 및 연구개발자 레지 던스 등이 입지하는 신도시로 조성
- 지역 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 지역 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망 재구축으로 광역경제권 거점 경쟁력 확보(대전 제2순환망), 광역철도(KTX) 연결망 고려



해 외 사 례

- (스웨덴 룬트 사이언스 빌리지) 룬트사이언스빌리지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 북유럽 메디콘 밸리의 핵심적 허브 역할 담당



- 산업용 및 다양한 혁신주체와 협업을 위해 개방, 가속기 기반 프로젝트 지원,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 등 가속기기반 혁신활동의 플랫폼 기능 담당

1.2 충청권 광역 허브시설 ‘드론산업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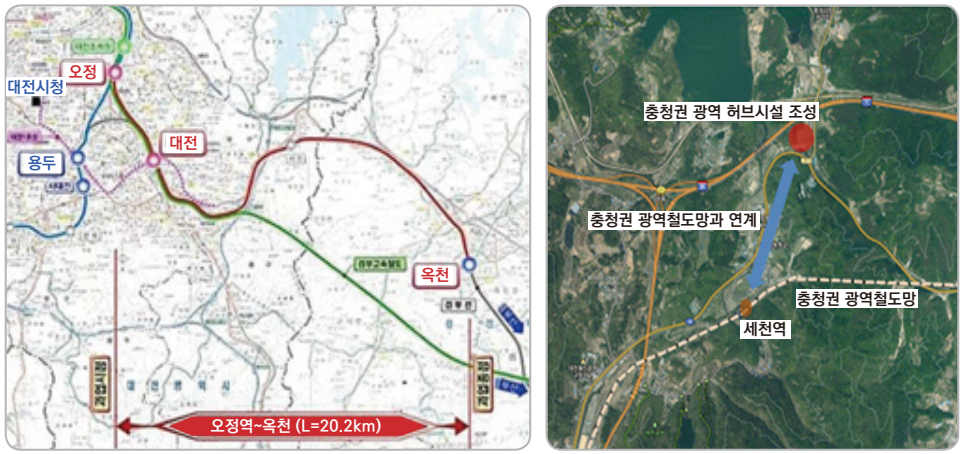
충청권 광역 허브시설로 드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촉진하고 충청권 상생을 선도하겠습니다.

추진 목적

- 충청권 광역철도망에서 대두되고 있는 옥천방향으로 대전에서 필요로 하는 광역허브시설을 조성하여 대전의 4차산업혁명특별시 추진을 촉진하고 대전 내 균형발전에 기여
- 충청 광역철도망 (옥천 연장구간, 광역 및 지역접근성 양호)을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배치할 필요성 증가

추진 내용

- **드론특구 지정 및 드론 산업단지 조성**
  -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드론특구 지정
  - 드론시스템 상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드론 산업단지 조성
- **드론산업단지 연계 테마파크 조성**
  - 드론 연계 키즈테마파크, 테마형 청소년 수련원 등



자료 : 대전광역시 도시정책과 내부자료(2020)

1.3 '교통허브 대전' 르네상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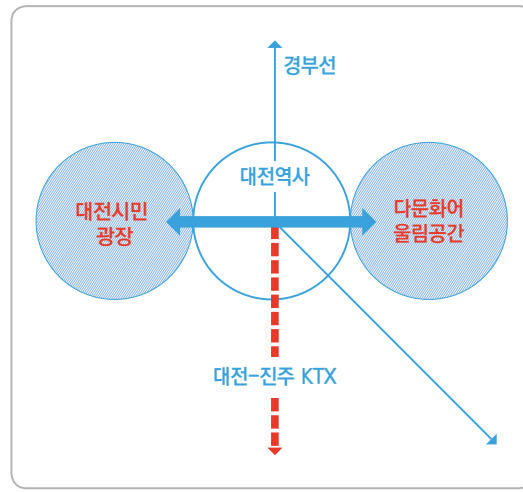
대전역 기능강화와 지역 내·외 교통 허브 기능 확충을 통해 교통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추진 목적

- 과거 전국 교통의 허브였던 대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획이 필요
- 대전역 및 대전역세권은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내 교통 허브로서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진 내용

- **(대전역 르네상스)**
  -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및 혁신도시 지정과 연계, 대전역 기능확충: 고속철도 역세권 기능 강화와 혁신도시 지정관련 지식재산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개발계획 수립, 역 광장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 빌딩, 호텔, 컨벤션센터, 연구시설 등 집적



- 대전시민광장 (대전역 서광장 전체) 조성
- 다문화 어울림 공간 조성
- 대전-진주 간 KTX노선 신설 : 대전-진주 간 노선 신설 통해 대전역 기능 강화

●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 중부권 및 인근 생활권 주민의 빠른 출국심사와 여행수요 흡수하여 대전역 위상과 기능 강화할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 **(교통허브센터 설치)**

- 대전역을 비롯, 주요 역세권과 교통결절점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주는 교통허브센터 설치
- 공유교통수단인 카셰어링 및 전동 퀵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 모빌리티 이동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한번에 결제하는 MaaS 도입

1.4「대청호 국가정원」광역명품 걷기여행길 조성

대청호 국가정원 지정으로 대청호 명품 걷기여행길을 완성하여 광역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대전시 주변은 산악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확장의 가능성이 낮음. 특히 동측은 보존적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대규모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대청호를 최대한 대전시 발전에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대청호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대청호 걷기여행길을 광역형 관광장소로 명품화하여 충청권의 부족한 거점형 관광자원 조성

추진 내용

- **(대청호 국가정원 지정 추진)** 현재 대청호 인근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규제 속에서 대전시 또는 청주시 등 광역적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 **(대청호 명품 걷기여행길 추진)** 대청호 명품 걷기여행길 조성을통한 충청권 거점형 관광자원화 추진
  - 대전 동구~대덕구~청주~청원~옥천에 이르는 대청호 걷기여행길 구간별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 설치 및 마라톤코스 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

1.5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 개최

대전-세종 시민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대전과 세종은 양호한 공공체육시설 보유에도 불구하고 국제 혹은 국내를 대표할 스포츠 이벤트를 보유하거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
- 유치경쟁이 치열한 메이저 스포츠보다 틈새 분야인 뉴스포츠* 분야를 활용하여 (가칭)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를 대전과 세종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기획이 필요

> ▶ 뉴스포츠 : 메이저 스포츠를 쉽고 안전하게 변형하거나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변형하여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 특히 뉴스포츠는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의 성격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스포츠 문화를 진작

추진 내용

- **(1단계 : 진단)** 뉴스포츠 종목 중 단순 이벤트성을 제외하고, 대중적이면서 지속적인 참여 도모 및 개최가 가능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류
- **(2단계 : 개발)** 실내·외 개최 환경을 토대로 종목별 뉴스포츠 대회 발굴
- **(3단계 : 개최)** 격년제(예 : 홀수년 대전 개최 시 대세 뉴스포츠 대회 → 짝수년 세종 개최 시 세대 뉴스포츠 대회)로 개최하여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

2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2.1 의료바이오 메카 조성

규제자유구역 지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계하여 대전이 의료바이오 메카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지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업체를 비롯해 지역내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
- 규제자유구역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완료 등 상황변화에 따른 산업 발전 강화
-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IT산업을 중심으로 이업종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 융복합산업 육성 필요
  - '대전시는 18년 스포츠융복합도시 비전선포 실시'(18.4.26)하였으나,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이 '21년 종료
  -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레벨업을 위해 스포츠 산업과 의료바이오 첨단기술을 연계한 의료바이오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필요

추진 내용

- **의료바이오 인력양성 혁신플랫폼 구축**(교육부 공모 대학연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연계)
- **가속기 연계 의료바이오 기술플랫폼 구축**
-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바이오메디컬 기업 성장 촉진 및 사업화지원/기능성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
  - 바이오메디컬 기업육성(매년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 5~10개 육성(5년간) / 지역내 산업 시설 및 공간 확보(입주공간, 시설이용공간 등) /

우수 기업 성장촉진(R&D연계·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 등)

-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바이오기능성소재 기업 지원(외국어 홍보물(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 / 글로벌 온라인 판매 지원(이베이, 큐텐 등)/ 통역 및 번역 교육 및 지원 /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제작 지원 / 해외 바이오 전시회 및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의료바이오 연계 신융복합산업 육성**(의료·스포츠 융복합 기업 성장지원)
  - 의료바이오-스포츠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스포츠융복합 예비창업자 발굴 및 실전창업교육
  - 스포츠융복합 기업 지원 사업(마케팅, 인증, 특허, 수출, 시제품제작 등)
  - 해외박람회 전시 및 참관, 부트캠프를 통한 신시장개척
  - 스포츠융복합 기업 투자 확대
- **바이오 이업종 콜라보 지원**
  - 바이오 동종기업간 협업 지원 및 타 주력산업분야(무선통신, 로봇지능화, 화학소재 등)와의 이업종 콜라보레이션지원(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마케팅지원)

동종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창출 사례

(바이오)+(바이오) 협업으로 신규 아이템 발굴

이업종 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창출 사례

(바이오)+(무선통신)+(전문제조업)+(전문 마케팅 기업)
협업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2.2 원도심 혁신도시 연계 '대전 드림 스타트업 밸리' 조성

원도심 '대전 드림(Dream)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혁신도시 지정을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할 계기가 마련되었음. 대전의 강점인 지식재산 등 미래 혁신 성장을 지원할 산업군을 중심으로 특화된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
- 전국적 접근성이 우수하나 현재 낙후된 도시인프라로 인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전 드림(Dream)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

추진 내용

① **(「대전 드림 스타트업 밸리」 조성)**

-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원도심 혁신도시(국토부) 사업을 연계한 원도심 '제2 스타트업 파크'를 지식서비스 특화 단지로 조성
- 스타트업허브, 네트워킹 공간, 문화시설 개선, 컨벤션 기능, 기업입주 및 주거시설 보완

② **(지식서비스 광역거점 조성)**

-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연계하여 대전이 특화한 지식재산서비스를 비롯, 미래 혁신성장을 추동할 지식서비스산업군을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광역거점을 조성
- 지식서비스 기업/기관입주, 지원, 금융연계 등 원스톱 지원사업 추진

▶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식서비스 관련 기관 유치 : 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2.3 데이터-AI 기반 4차산업혁명 혁신플랫폼 구축

데이터와 AI 산업 육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비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의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플랫폼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혁신시스템을 고도화
- AI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공동연구 기능과 연구성과 사업화 관련 지식 데이터 구축과 허브 기능 등 출연연구기관 집적 연구단지의 새로운 성장모형 기획 필요

추진 내용

- **AI 융합 클러스터 구축** : AI 인력교육 허브기능(KAIST) + 데이터 (KISDI) + 출연연 AI 관련 융복합 공동연구 거점 구축
- **데이터 전주기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생성과 수집 플랫폼 구축 (도시데이터, 연구개발데이터, (시민)마이데이터)과 데이터 가공/활용 지원
- 중장기적으로 연구데이터와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된 지식구축과 허브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연구개발 데이터 허브'로 성장

※ 핀란드 '오타니에미' 클러스터 사례

- ▶ 오타니에미 클러스터는 VTT 등 핀란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글로벌 IT기업, 대학 등이 집적되어 핀란드 R&D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 혁신클러스터
- ▶ IT를 중심으로 디자인+경영+공학 간 융복합 연구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비
- ▶ 기술사업화 관련 지식데이터 플랫폼으로 기능, 공공기관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테스트, 프로토타입 제작, 시장연구와 결합, 사업화 단계까지 고부가화

3 공동체 기반 포용도시

3.1 시민참여형 건강재단 설립

시민참여형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감염병 걱정없고 시민이 건강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사업 목적

-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계층 간 건강격차 심화 및 신종 감염병 등 건강위협요인의 증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균형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공하는 조직체와 보건의료기관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연계와 협력 체계가 중요

추진 내용

- **(전문적 시민건강 거버넌스)** 대전의 건강문제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전문적 인프라 구축과 광역단위의 협력적 지원 체계 및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대전시민 건강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 자원 간 네트워크, 건강 빅데이터 구축, 건강 콘텐츠 개발 및 공유, 대전의 건강 브랜드 특화 시민참여 사업 추진 (예,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사업 등)
- **(「대전시민재난대응지원단」 설치·운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수립,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응강화,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시장직속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대전시민재난대응지원단」을 시장직속 거버넌스로 추진

3.2 집찾사 : 장애인 주택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장애인가구 구성의 변화와 연령분포의 변화에 비추어 점차 장애인 1인 가구 증가가 예상되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가구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검토가 필요
  *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의 동거가구 구성은 친족 가구가 79.1%로 가장 많지만 1인 가구 또한 19.2%로 상당 비율 차지

추진 내용

- 주요 대상 : 대전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

▶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 장애인 주택 :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주택 제공
- 장애인 주택 수요와 공급 현황을 위한 수요조사
  -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 법·제도·행정적 운영 여건 및 실태 분석
  - 공급 가능한 지원주택의 규모와 장애인 수요를 위한 현황조사
- 지원주택 공급 계획 수립 및 목표 물량 확보
  - 공급 가능 주택의 규모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공급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주택 선정자 혹은 일반주택 거주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주거 관련 지원(주택알선, 주택서비스 신청), 생활지원(가사, 식사, 금전 관리 등 지원), 관계지원(심리상담, 자조모임 연계 등), 안전 지원(긴급상황, 인권침해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인 독립생활 도모

3.3「대전 가족행복재단」 설립

여성과 어린이, 청년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목적

- 다양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와 대전에 거주하는 글로벌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거점 지원기관과 공간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

추진 내용

- **대전 성평등 지원 센터**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능, 여성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네트워크간 교류 강화, 예술·문화·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공간 기능 수행
- **청년 여성 글로벌 컨텍트 센터** : 글로벌 (다문화) 청년 여성이 대전에서 활동, 교류, 역량강화 할 수 있는 조직, 공간, 인프라 제공

※ 청년여성 글로벌 컨택센터 기능

- ▶ 공 유 공 간 : 일자리, 취미, 교육 등 다양한 소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 ▶ 교 육 공 간 : 다양한 청년여성 이슈와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기획 및 사업
- ▶ 도시공간팀 : 대전이라는 도시를 청년여성이 활용하는 법
- ▶ 문화축제팀 : 지금 청년의 문화와 축제를 청년여성이 대전에서 상상하고 기획하기
- ▶ 정 책 발 굴 : 청년여성 스스로가 정책 발굴, 지역 여성 일자리, 직장내 성희롱 방지 정책, 청소년 청년여성 노동권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청년 후견인 정책
- ▶ 글로벌 네트워크 : 국내외 청년여성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 캡이어 프로그램 : 대전에 정착하는 청년여성 대상, 장기적 생애기획과 비전을 계획할 수 있는 3~6개월 가량의 기간 보장

- **대전 어린이 행복지원센터** : 대전 지역 어린이 복지와 성장 관련 정책연구와 심리상담 지원, 장애어린이 보호지원체계, 부모 교육 등의 기능 수행

4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도시

4.1 도안 미래 과학문화 융합클러스터 조성

대전이 미래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사업 목적

- 도안은 북측으로 세종시 남측으로 논산·전북으로 이어지는 대전의 미래발전축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시 내부지역 중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대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공간임
- 대전의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지향적 과학문화 융합클러스터로서 구상이 필요

추진 내용

- 도안지역 개발구상에서 고려할 점은, 북측 대덕특구의 과학적 기능(4차산업혁명 연계기능), 도심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도심적 기능, 주변 도시(계룡 등)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등임
- 이러한 다양한 기능 및 입지적 역할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과학-문화-예술이 융합한 과학문화 융합클러스터 조성
- **「4차산업혁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첨단 연구개발, 딥테크 기업집적, 인큐베이팅, 산학연 연계 등을 위한 연구개발중심형 집적단지 조성
  * 대규모 연구단지는 도안 2·3단계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



- 「Science Art Space」 **조성** : 과학, 우주, 기술, 문화, 예술 등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NASA 한국 박물관, 대덕연구단지의 역사와 성과물 전시하는 과학도시 전시관 등 운영
- **(도안 TG신설)** 도안 신도시 및 신규개발지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북측에 도안 TG를 신설하여 도안 신도시 및 도안 미래과학융복합클러스터, 학하, 용계 지구 등의 교통 수요 해결



스페인 예술과학단지



미 휴스턴 우주과학박물관

4.2 삶을 치유하는 「문화예술 보건소」 조성사업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업 목적

- 국가적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대전에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대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인 '꿈꾸는 예술터'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공간의 확충은 부진

추진 내용

-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치료 기능을 수행할 **「문화예술 보건소」** 조성
-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전형 아난딸로* 조성** :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모델 구축
- 예술치유공간 "예술보건소" 조성 : 유휴시설을 대전 예술치유센터 "대전 예술보건소"로 재생.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및 육성, 예술치유 콘텐츠 확산, 시민문화예술 향유 등 예술치유 및 시민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





*핀란드 헬싱키 아난딸로 (Annantalo)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1886년 세워진 폐교를 활용

4.3 「밀토피아(밀가루 체험파크)」 조성사업

밀가루 테마파트를 조성해서 누구나 들러보고 싶은 중부권 거점 관광 목적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대전이 중부권 관광 허브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관광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
- 국내여행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음식 관광(즉, 식도락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높다는 것임(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2020). 대전시는 식도락 여행지 하위권(56.3점, 17개 광역시 중 14위)으로, 대전의 먹거리로 빵(1위)과 칼국수(2위)가 우선순위로 뽑힘(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2020.3.4.)

추진 내용

- (가칭)「밀토피아」 조성 : 대전의 음식 자원 특징으로 거론되는 빵이나 칼국수 등의 공통점을 관광 자원화한 밀가루 테마파크 조성



Mill City Museum,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도톤보리 코나몬, 일본 오사카

- 교육 공간 : 밀가루를 활용한 직업(예 : 제빵원, 제과원, 피자조리사 등) 체험(사례 : 세계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
- 체험 공간 : 밀가루 캐릭터와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빵/칼국수), 촉감 놀이교실, 밀가루 던지기 등
- 전시/관람 공간 : 밀가루 활용한 음식 생산공정 견학, 밀가루아트 공연
- 음식 공간 :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 판매(푸드코트), 전국 유명 빵집과 칼국수 가게를 활용한 음식 판매 (밀가루 음식 편집샵)

4.4 대전형「스포츠랩」조성 사업

과학기술을 결합한 스포츠 혁신을 통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 목적

- 대전의 현재 스포츠 관련 상황(예 :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인력 양성 및 관리 부족, DB 구축 결여)을 고려하였을 때 중심이 되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
- 지역의 체계적 스포츠 시스템 관리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자원과 결합, 스포츠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획, 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

추진 내용

- **AR/VR 적용 경기시설 조성** : 스포츠 산업에 4차산업 혁명 기술 성과를 결합하여 스마트 스포츠 활동 및 관람 인프라 기획과 적용
- **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 산업 분야 구성원 교육,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지도자/선수 발굴·육성** :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DB 구축·관리** : 대전시 스포츠 현황 파악, 정확한 진단 분석 등
- **스포츠마케팅** :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개발 (예 : 뉴스포츠 [New Sports][1] 국제 대회), 국제교류 활성화, 지역 내 프로스포츠 활성화
- **연구** : 대전시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을 통한 연구 지원

1) 올림픽 또는 국제경기의 메이저 스포츠(예 : 축구, 야구 등)가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를 대표하는 용어로(에이블뉴스, 2014.9.26.), 기존의 대중적 스포츠 종목을 결합 또는 변형시켜 행하는 새로운 스포츠(예 : 미니골프, 플라잉디스크, 스피드민턴, 족구, 풋살 등)를 의미함

5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5.1 대전 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대전의 자랑인 3대 하천을 생태하천화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심하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대전광역시는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를 중심으로 총 346.15 km에 달하는 116개의 하천이 주요 환경 자원임. 도시의 매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대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하천의 재평가 및 관리방안이 필요함

추진 내용

- **(공간별 하천관리 체계 구축과 환경개선)**
  - 생태계, 시민들의 동선, 일반현황 등을 고려, 활동하는 도심하천, 함께하는 행복하천, 배려하는 생태하천의 3가지 공간분리와 관리체계 구축

▶ 도심 불투수층 감소를 통한 투수능력 확보, 중수도 및 하수처리장 유출수 이용 등을 통한 하천수량 확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불명오염원의 모니터링 및 제거, 합류식하수관거의 월류수 제어, 도로 오염물질의 유출 제어, 갑천가동보 등 하천지장물의 관리방안 개선

- **(활동하는 도심하천 공간)**
  - 활동하는 도심하천 공간 : 시민들의 활동시설로 캠핑장, 수상무대, 자연학습장, 마라톤코스, 물놀이장, 친수계단, 세월교 등의 도입
  - 함께하는 행복하천 공간 : 산책로, 관찰데크 등의 소극적 하천활동을 하며 생태계를 보호 및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하천공간의 마련
  - 배려하는 생태하천 공간 : 보호받아야 하는 생태계를 배려하는 생태하천 공간, 감돌고기, 미호종개, 수달, 맹꽁이 등과 같이 보호종이 서식하는 하천공간의 접근 최소화 및 서식환경 마련
- **(3대 하천 Waterfront 생태개발)** 3대하천 상류구간은 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보존하고 하류 및 도심 통과구간에 대해 레저문화 공간 개발
  - 대덕구 대전산단 하천변 (약 8만m2) 둔치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설정하여 레저스포츠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개발

5.2 시민참여형 스마트 생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시민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스마트 생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 해외 주요 도시들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 추구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음
- 스마트 기술을 적용, 시민들이 참여하여 생활 환경 개선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의 비전을 실현

추진 내용

- 스마트 폐기물 순환 프로젝트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확대, 자원순환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대 및 신기술 적용
- 재활용품 공유 및 재사용 기반구축 :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나눔장터, 재활용품 공방, 상설 플리마켓 등 확대와 앱을 통한 실시간 재활용(사용)품 정보제공
- 악취없는 상쾌한 대전 프로젝트 : 악취 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적 악취개선대책을 추진, 악취영향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개선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시민대표, 관련부서, 사업장(대표) 등으로 구성 악취저감 방안 모색

5.3 「24시간 시민안심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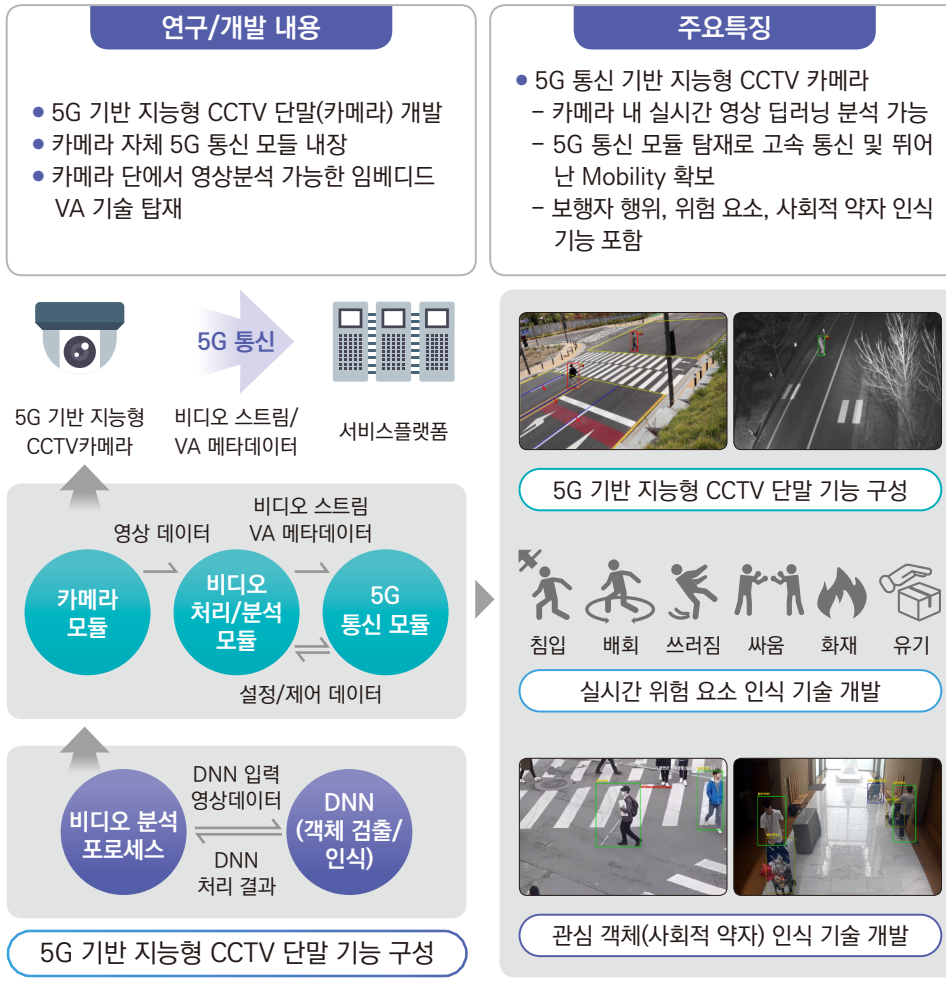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대전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범죄, 화재, 자살, 생활안전에서 4등급을 받아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범죄의 경우는 야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LED조명 및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여 야간환경 개선 필요

추진 내용

- 무선 CCTV기반 지능형 야간도로 안전지원 서비스 : 신규 가로등 및 CCTV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 5G기반의 지능형 CCTV를 기존 도로변 기구물에 설치하여 야간의 도로 보행자 안전 확보 지원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5G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주변의 보행자, 차량 및 환경센서 기반 상황감시
  - 모바일 엣지구간에서 지능형 CCTV를 통한 야간도로의 안전을 위한 지원서비스
  - 무단횡단 보행 : 무단횡단 보행자를 실시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시인성 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 표시, 차로 바닥에 무단횡단 보행자 위험 알림, 주변 사이니지를 통해 전방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 알림
  - 사회적 약자의 횡단 보행 : 보행자 숫자, 보행자 속성을 인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 확보를 위한 정보 표시 제공
  - 지능형 CCTV를 통한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대처 : 영상 및 센서기반 특정 객체 출현 및 위험 상황감시, 위험 상황인지 시 관제모니터에 위험상황 정보제공, 위험 상황인지에 따른 5대 연계서비스 이벤트 제공

● 서비스 주요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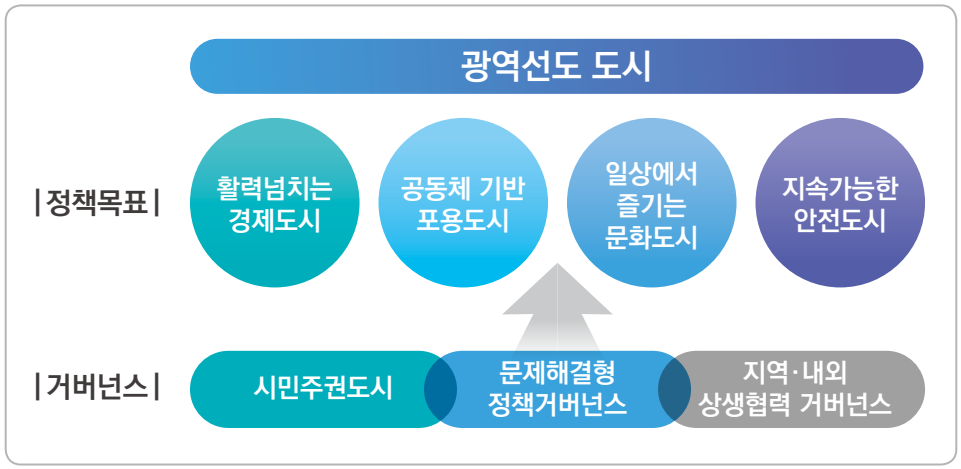
- 시티 센서 : 이동형 5G 지능형 CCTV : 지능형 CCTV, 지능형 환경정보 센서, 스마트횡단보도(그림자 표시기), 사이니지
- 네트워크 인프라 : 5G기반 대용량/저지연 전송 및 제어 기술
- 지능형 분석 기술 : 관심객체인식, 상황분석, 주변 환경정보 분석, 보행자 속성인식
- 무선 CCTV 연동 야간 도로 안전 서비스 제어 : 위험상황 인지, 상황에 따른 조치명령 및 위험알림 재현장치 표출, 위험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처를 위한 자동 연계서비스



Ⅳ 추진 체계

▶ 미래도시 대전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미래도시 대전」추진 거버넌스 정립 방향성



시민주권 도시

- 민선 7기 정책기조인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위한 시정 전반의 시민 참여와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정부 구현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지향형) 정책역량 강화

- 도시문제가 과거 칸막이형 정책실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정책부서 간 협력과 조정 시스템 구축,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해결형 정책활동 수행

지역 내·외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 대전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광역차원에서의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전 도시경쟁력 강화

V 부문별 미래상

경제·산업·과학분야



대한민국 혁신플랫폼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2030년 창업기업수 (제조업기준) 3,500개 사 달성(개)	2,400개	3,045개	3,488개
신생기업 5년 생존율 30% 이상 달성(%)	26.5%	29.4%	31.1%
벤처 캐피털 신규투자 5,000억원 달성(억원)	1,827억원	3,846억원	5,000억원
기술료 징수액 1,2000억원 달성(억원)	731억원	991억원	1,180억원



일자리 걱정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고용률 65% 달성(%)	58.6%	62.5%	64.9%
청년실업률 2% 감축(%)	9.0%	7.7%	7.0%
1인당 GRDP 43,000 달러 달성($)	24,430$	35,301$	43,564$

도시공간·교통 부문



골고루 잘 사는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도시재생사업 추진(개소)	5개	15개	30개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호)	10,230호	15,000호	20,000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확대(개소)	-	15개	30개



대중교통으로 대전도심에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대중교통분담률 33% 달성(%)	25.35%	30.30%	33.0%



이용자가 즐겁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자전거 분담률 6% 달성(%)	2.39%	4.0%	6.0%
버스이용객 중 노인이용객 비율(%)	1.6%	5.0%	10.0%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85명	32명	25명

보건·복지부문



감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 공공의료체계로 감염병 걱정없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공공산후조리 지원율	당해연도 출생아수 ×30%	당해연도 출생아수 ×35%	당해연도 출생아수 ×40%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당해연도 출생아수 ×30%	당해연도 출생아수 ×35%	당해연도 출생아수 ×40%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계층별, 수요별로 돌봄서비스 정착시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용자수(명)	1,525명	1,560명	1,580명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명)	700명	1,100명	1,300명

여성·공동체 부문



여성의 안전한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여성고용률 65% 달성	49.9%	57.0%	65.0%
여성관리직 비율 25% 달성	11.8%	17.0%	25.0%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60%로 감소	89.5%	70.0%	60.0%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빈집, 유휴공유재산등을 활용한 시민공유공간 200개소 확충 (개)	-	100개소	200개소
마을의제 및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리빙랩	-	10개	20개
사회적경제 기업전용 투자펀드 300억원 조성	-	100억원	300억원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350개 확충	100개	200개	350개

문화·관광·스포츠분야

시민 누구나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인구 심만명 당 문화시설수(개)	3.66개	4.72개	5.54개
인구 천명 당 문화 기반시설	0.03개 (전국0.07개)	0.07개	0.1개
인구 만명 당 생활문화 시설	1.7개	2.0개	2.5개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대전 방문 외래 관광객 수 (명)	226,708명	250,000명	300,000명
내국인 관광객 수 (명, 숙박+당일여행)	3,552,490명	4,000,000명	4,500,000명
공공스포츠 시설 (m2/15세이상 시민)	1.72개	2.0개	2.3개

환경·안전 분야

맑은 물과 공기, 풍부한 녹지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미세먼지 농도	PM 2.5 21㎍/m3	PM 2.5 16㎍/m3	PM 2.5 15㎍/m3
하천관리(갑천말단 수질)	2.9㎎/L	2.6㎎/L	2.0㎎/L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 17.5m2	1인당 공원면적 18.5m2	1인당 공원면적 19.0m2

자원이 순환되는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율	65.%	75.%	80.0%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확충을 통해 안심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도시침수 대응) 노후관의 교체 및 보수	26.0%	50.0%	75.0%
(사회재난 대응)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율	79.1%	85.0%	90.0%
(자살예방) 자살률	22.5%	20.0%	17.0%
(지진대응)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5.7%	70.2%	80.0%

디지털 트윈 (가상) 기술을 통한 사전위험관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재난영상감시장치 확대구축	126개소	322개소	420개소

참고 분야별 정책아젠다별 과제 목록

분야	정책 아젠다	정책 과제
경제 산업 혁신	창업벤처 육성	'스타트업 2020' 창업벤처 육성
	혁신도시 연계 발전	혁신도시 연계 '제2 대덕밸리' 조성
	초광역 산업거점기능 확충	'Heart of Korea'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4차산업혁명특별시 도약 추진	'디지털트윈 시티' 대전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산업 육성	'의료바이오 메카' 조성
도시 공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대전국제과학도시』 건설
	대전시의 광역적 접근성 강화	『대전역 대개조사업(대전역 신르네상스)』
	대전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거점 선정 및 구상	『도안 미래 과학·문화융합도시』 조성
	대전시 관광활성화를 유인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발굴	『대청호국가정원』 지정
교통	트램도시 대전 완성	「트램도시 대전」 네트워망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교통 허브센터」 조성
		「승용차만 쏙~ 스마트 교통관리」
		「자율주행 POD 셔틀」 사업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재난상황 신속대응」 방재도로망 구축
		「안전은 높게 속도는 낮게」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보건 복지	감염병 및 재난심리지원 등 예방적 건강권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심 대전」추진
	지역사회 건강보장 확대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시민 참여형 건강재단 설립」추진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	「대전형 찾복(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0+세대 내돌(내가 돌봄) 사업」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Right Now(바로바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	「집찾사 : 장애인 주택 지원 사업」 추진

분야	정책 아젠다	정책 과제
여성 가족	다양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대전 성평등 지원 플랫폼 조성
	일상이 평화로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과학기술 플러스 여성안전 모니터링센터 설립
	청년여성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	청년 여성 글로벌 컨택트 센터 조성
	가족 너머 가족정책, 가구정책으로 전환!	대전 재생산센터 설립
	아동정책 강화	「대전 어린이 행복재단」 설립
공동체	인권존중 주권행사 공동체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공동체 완성
		3·8민주의거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학생인권조례 제정
	평등지향 공동체	두레밥 청년 공유주방 공동체
		보편적 아동복지정책 확대
	신뢰·배려·공존 공동체	다문화공동체 축제 개최
시민 자치	시민주권도시 구현	자치제의 기본적 제도 마련 :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제정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촉진을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구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전시-연구개발특구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인프라 활용 방안
		대전시-자운대 간 협력체계 강화
문화 예술	마음껏 창작하고 풍성히 활동하는 문화 예술 창작 환경 조성	삶을 치유하는 '문화 예술 보건소'
	다함께 누리고 일상이 즐거운 문화 향유 도시 정착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우아한 도서관
	근현대 지식문화와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융복합도시 기반 확대	대전의 특색을 정립하는 '대전학연구센터' 운영
		공동체가 만드는 독립 문화 활성화
	미래지향적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대전 도약	정책별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대전문화영향평가'
관광 체육	장소매력 증대 통한 중부권 허브 관광목적지 도약	「밀가루 테마파크」 조성
		「대전관광 FanEx 12선」 사업
		「대전형 굿즈랩」 조성
		「명예의 (대)전당」 조성
		「폐(유휴)공간 체험관광자원화」 사업
		「갑천변 교통관광자원화」 사업
		「충청권 관광 연합」조성

분야	정책 아젠다	정책 과제
관광 체육	과학도시 기반을 결합한 대전형 스포츠 선도모델 구축	「대전형 스포츠랩」 조성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 개최
환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대전	먼지 먹는 하마 플랜 확대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
	살고 싶은 생태환경도시 조성	주민친화형 맑은물재생센터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악취환경 개선으로 상쾌한 대전 만들기
		촉촉한 친환경 물순환선도도시의 조성
		자연 속 생태도시 만들기
		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자원이 순환하는 스마트환경 (폐기물 유출 제로 도시) 조성	스마트 폐기물 순환 프로젝트 완성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 도시의 조성
		광역형 자원순환센터 조성
안전	선제적 예방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24시간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고밀도 도시공간의 화재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방헬기 도입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키는 시민안전 교육거점기관 도입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다운 스마트안전 관리체계 구축	도심지 침수 대응 시민안전 서비스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G 드론기반 화재현장 지원 및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
	안전행정 제고를 위한 거점 확충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난협력체계 구축
		시민안전 공간조성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시민지원센터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사업 도입
		시민의 안전과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대전광역시 안전통합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차 례

1장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구성 ····· 13
1. 연구의 필요성 ····· 13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13

2장 민선 7기 후반기 정책환경의 변화 ····· 17
1. 글로벌 메가 트랜드 변화 ····· 17
2.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 22
3. 대전의 현황 ····· 25
4.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새로운 정책수요 ····· 31

3장 미래도시 대전의 정책 아젠다와 과제 ····· 47
1. 대전의 SWOT 분석 ····· 47
2.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 아젠다 ····· 54
3. 핵심 정책 과제 ····· 58

4장 대전의 분야별 미래상 목표와 추진체계 ····· 83
1. 2030 분야별 대전의 미래상 ····· 83
2. 민선 7기 후반기 미래 대전 추진 거버넌스 ····· 90

5장 경제·산업·과학 부문 ····· 107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107
2. 경제산업과학부문 정책 아젠다 ····· 110
3. 경제산업과학부문 정책 과제 ····· 112

6장 도시공간 부문 ····· 123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123
2. 도시공간 부문 정책 아젠다 ····· 125
3. 도시공간 부문 정책 과제 ····· 126

7장 교통 부문 ····· 137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137
2. 교통 부문 정책 아젠다 ····· 139
3. 교통 부문 정책 과제 ····· 140

8장 보건·복지 부문 ····· 149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149
2. 보건·복지 부문 정책 아젠다 ····· 152
3. 보건·복지 부문 정책 과제 ····· 154

9장 여성가족 부문 ····· 169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169
2. 여성가족 부문 정책 아젠다 ····· 174
3. 여성가족 부문 정책 과제 ····· 175

10장 공동체 부문 ····· 185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185
2. 공동체 부문 정책 아젠다 ····· 186
3. 공동체 부문 정책 과제 ····· 188

11장 시민자치 부문 ····· 199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199
2. 시민자치 부문 정책 아젠다 ····· 201
3. 시민자치 부문 정책 과제 ····· 202

12장 문화·예술 부문 ····· 221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221
2. 문화예술 부문 정책 아젠다 ····· 223
3. 문화예술 부문 정책 과제 ····· 225

13장 관광·체육 부문 ····· 233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233
2. 관광·체육 부문 정책 아젠다 ····· 236
3. 관광·체육 부문 정책 과제 ····· 237

14장 환경 부문 ····· 255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255
2. 환경 부문 정책 아젠다 ····· 258
3. 환경 부문 정책 과제 ····· 261

15장 안전 부문 ····· 279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279
2. 안전 부문 정책 아젠다 ····· 283
3. 안전 부문 정책 과제 ····· 286

참고문헌 ····· 309

표 차례

[표 2-1] STEEP분류별 메가트렌드 분석 요약 ····· 18
[표 2-2] 코로나 19 이후 예상되는 정책환경의 변화 ····· 20
[표 2-3] 국내 정책환경 변화의 주요내용과 핵심키워드 ····· 24
[표 2-4] 부문별 대전의 현황 ····· 30
[표 2-5]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혁신성장 ··· 32
[표 2-6]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문화도시 ··· 32
[표 2-7]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균형발전 ··· 33
[표 2-8]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그린시티 ··· 34
[표 2-9]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 ····· 35
[표 2-10]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
경제산업과학분야 ····· 37
[표 2-11]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공간분야 ··· 38
[표 2-12]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교통분야 38
[표 2-13]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
보건·복지분야 ····· 39
[표 2-14]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
여성·가족분야 ····· 40
[표 2-15]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
문화·예술분야 ····· 40
[표 2-16]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
관광·체육분야 ····· 41
[표 2-17]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환경 분야 ·· 41
[표 2-18] 민선 7기 안전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안전분야 ·· 42
[표 2-19]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
시민자치 분야 ····· 42
[표 2-20]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
공동체 분야 ····· 43

[표 3-1] 민선 7기 후반기 이후 대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 48
[표 3-2] 대전 현황분석과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을 종합 고려한 대전의 강점과 약점 ····· 49
[표 3-3] 민선 7기 후반기 분야별 주요 정책아젠다 ····· 57
[표 3-4] 정책목표별 정책아젠다와 핵심정책과제_종합 ····· 58
[표 3-5] 민선 7기 후반기 분야별 주요 정책아젠다와 정책과제 ····· 77
[표 4-1]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주요 업무 ····· 100
[표 5-1] 민선 7기 경제/산업/과학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109
[표 6-1] 도시계획 관련 주요 사업 ····· 123
[표 6-2] 민선 7기 전반기 주요사업의 효과 및 향후 정책수요 ····· 124
[표 6-3] 자연공원 지정기준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 ····· 132
[표 7-1] 민선 7기 교통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138
[표 8-1] 민선 7기 보건·복지분야 전반기 주요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및 향후 정책수요 ····· 152
[표 9-1] 민선 7기 여성가족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172
[표 10-1] 민선 7기 공동체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185
[표 11-1] 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과정 사례 ····· 207
[표 11-2]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주요 업무 ····· 212
[표 12-1] 민선 7기 문화·예술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223
[표 13-1] 민선 7기 관광·체육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235
[표 13-2] 대전의 스포츠 관련 조직 현황 ····· 239
[표 13-3]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테마 및 지역 ····· 250
[표 14-1] 민선 7기 환경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257
[표 14-2]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농도 및 나쁨이상 일수 ····· 258
[표 14-3] 대전광역시 생태계변화 관찰 조사대상지 현황 ····· 260
[표 15-1] 민선 7기 안전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 283
[표 15-2] 2017 ~ 2019 특·광역시 지역안전지수 현황 ····· 286

그림 차례

[그림 2-1]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에 영향을 미칠 6대 메가트렌드 ····· 21
[그림 2-2] 대전광역시 2020년 시정방향 ····· 31
[그림 2-3]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을 분석하여 도출한 정책목표와 도시미래상 ·· 36
[그림 3-1] 대전 SWOT 분석 종합 ····· 50
[그림 3-2] 대전 SWOT 분석 종합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 51
[그림 3-3] 6대 전략방향과 5대 정책목표 간 연계 ····· 53
[그림 3-4] 민선 7기 후반기 4대 정책영역별 정책 아젠다 ····· 54
[그림 3-5] 대세밸리 내 네트워크형의 제2기 과학도시 연합 체계 개념도(안) ·· 60
[그림 4-1]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 모형 ····· 95
[그림 4-2] 지역정책지식생태계 개념도 ····· 98
[그림 6-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비전 ····· 126
[그림 6-2] 대전국제과학도시 구상 ····· 127
[그림 6-3]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 128
[그림 6-4] 대전역세권 발전구상 ····· 129
[그림 6-5] 도안신도시의 공간적 여건 ····· 130
[그림 6-6] 대전 도안 미래 과학·문화의 융합도시 개념 ····· 131
[그림 6-7] 전국의 국립공원 분포 ····· 133
[그림 11-1]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모형 ····· 211
[그림 11-2] 행복도시권 광역철도 설치 계획(안) ····· 213
[그림 11-3] 철도산업(문화)메카 조성 개념도 ····· 215
[그림 13-1] (가칭) 「대전관광 FanEx 12선」 사업의 단계별 접근도 ····· 242
[그림 13-2] 대전의 굿즈 디자인 개발 사례 ····· 242
[그림 13-3] 대전의 영문 표기(DAEJEON) 활용 예시 ····· 243
[그림 13-4]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예시 ····· 246
[그림 13-5] 갑천변 주변 교통관광자원화 사업 배치도 ····· 248
[그림 13-6] 갑천변 주변 교통관광자원화 사업 배치도 ····· 250

[그림 14-1] 싱가포르 베독 뉴워터 팩토리 비지터 센터 ····· 263
[그림 14-2] 지하화 하수처리장 - 용인 레스피아 ····· 263
[그림 14-3] 덴마크 코펜하겐 폐기물 에너지발전소 ····· 264
[그림 14-4] 미국 펠라델피아 스마트 쓰레기통 ····· 264
[그림 14-5] 대전광역시 먼지 먹는 분진흡입차 ····· 266
[그림 14-6]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시행 - 독일 ····· 266
[그림 14-7] 악취해결 촉구 기자회견 ····· 269
[그림 14-8] 오수관 악취 발생 ····· 269
[그림 14-9] 런던 Bedzed, 탄소중립 복합개발단지 ····· 270
[그림 14-10] 대전광역시, 태양광 에너지 설치 ····· 270
[그림 14-11] 스톡홀름, 도심 속 충분한 녹지공간 ····· 273
[그림 14-12]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주거공간 속 녹지 ····· 273
[그림 14-13] 갑천, 생태계와 함께하는 행복하천 ····· 274
[그림 14-14] 유성천, 시민들이 활동하는 도심하천 ····· 274
[그림 15-1] 5G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 288
[그림 15-2] 도시침수 시민안전 서비스 플랫폼 ····· 295
[그림 15-3]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297
[그림 15-4] 디지털트윈 통합 플랫폼 ····· 297
[그림 15-5] 5G 기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증시스템 ····· 298
[그림 15-6]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융합 신기술 사업화 및 상용화 전략 ·· 299
[그림 15-7] 공공시설물 안전 관제 지원 서비스 구성도 ····· 301
[그림 15-8] 5G 드론 통한 공공시설물 관제 적용 분야 ····· 302
[그림 15-9] 후쿠오카 케고공원과 위치하여 있는 안전안심센터 모습 ····· 305

DSI

민선 7기 후반기 미래도시 대전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Ⅰ. 총 괄 편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장

1장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

○ 민선 7기 이후 진행된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선 7기 후반기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사회적 충격,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화 지향성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진전,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대전광역시 민선 7기 후반기 정책방향 조정 및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함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아젠다와 정책과제 발굴**

○ 민선 7기 전반기에 전개했던 사업이 추진되거나 가시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후반기에 새롭게 추진하거나 아젠다로 제시할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전개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기반하여 민선 7기 후반기 제시할 정책아젠다 및 정책과제의 발굴

2) 연구의 구성

○ 본 보고서는 1부인 총괄편과 2부 부문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괄편**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환경의 변화 파악

-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
-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 대전 현황분석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새로운 정책수요

○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아젠다와 과제

- 대전의 SWOT 분석
-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아젠다
- 핵심 정책과제

□ **부문편**

○ 세부 부문은 다음과 같이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

- 경제·산업·과학, 도시공간, 교통, 보건·복지, 여성·가족, 공동체, 문화·예술, 관광·체육, 환경, 안전, 시민자치

DSI

민선 7기 후반기 정책환경의 변화

1. 글로벌 메가트랜드 변화
2.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3. 대전의 현황
4.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새로운 정책수요

2장

2장 민선 7기 후반기 정책환경의 변화

1. 글로벌 메가트랜드 변화

□ **미래 메가트랜드 STEEP 분석**

○ 미래 메가트랜드를 예측한 국내·외 6개 기관의 분석결과를 STEEP[1] 방법론을 통해 메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음

○ 이와 같은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래 메가트랜드는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적 경제성장률의 저하
-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 심화
- 노동, 교육, 경제, 기술 등 다차원에서의 양극화 심화
- 개인주의 심화와 다원주의, 여성의 지위 향상, 도시문화 중심의 확산
- 글로벌 상호의존성 증가와 더불어 분쟁과 갈등의 심화
- 자원 수요 증가로 인한 글로벌 갈등 심화와 자원/환경 기술 개발 촉진
- ICT 기반의 융·복합화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의 급속화 및 사회-경제적 적용 확대
- 보건, 환경, 자원 등 수요 차원의 기술개발 요구 증대와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의 활성화

1) 미래예측 6개 기관에는 National Intellgeince Council(NIC, US), European Strategy and Policy Analysis System(ESPAS, EU), PMO(핀란드) 등 해외기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기획위원회이 포함. 메타분석을 위한 STEEP 분류틀은 사회(S), 기술(T), 경제(E), 환경(E), 정치(P)의 5개 프레임워크를 의미

[표 2-1] STEEP분류별 메가트렌드 분석 요약

분야	메가트렌드	트렌드 및 내용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인구감소
		• 도시인구의 증가
		• 개도국 인구의 증가와 해외이민
		• 다문화가정 확산
	양극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 부의 불균등 심화
		• 교육기회의 양극화
		• 기술적 양극화
		• 젠더 갈등 심화
	관계망	• 온라인상의 관계 형성 활성화
		• 개인주의와 다원화 동시 진행
		• 사회와의 단절 또는 사회적 결속력 약화
	여성의 지위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여성 내부의 다양성 확대 및 격차 확대
	도시의 변화	• 도시문화 확대
		• 메가시티, 스마트시티의 등장
	가치관 및 문화	• 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
		• 다원주의와 개인주의 동시 심화
		• 건강, 삶의 질 등에 대한 관심 증대
	교육	• 교육이수율 상승
		• 평생교육서비스 활성화
		•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경제활동 차이
		• 교육기관규모의 축소와 역할변화
경제	경제구조의 변화	•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경제 성장
		• 생산의 국제화
	소비가치의 변화	•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장
		• 제품의 서비스적 가치 증대
	노동시장의 변화	• 고급인력 유치 경쟁 심화
		• 개도국 출신 숙련직의 해외진출
		• 다양한 노동형태의 공급
		• 저임금노동자의 취업경쟁 심화
	고령화와 경제	• 사회복지예산 부담 심화
		• 경기침체
		• 노인 대상 문화, 오락산업 및 교육프로그램 성장
기술	첨단기술의 융복합화	• IT, BT, NT, CT 중심 기술 간 융복합화
		• 기존 산업과 신기술 결합을 통한 신개념의 제품군 부상
		• 연구개발의 대형화로 협력연구 증가
	지식기반사회 형성	• 지식집약형 산업의 성장
		• 무형자산과 지식자본의 중요성 확대

분야	메가트렌드	트렌드 및 내용
	ICT중심의 기술혁신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개발 가속화
		• 가상현실과 현실 간의 경계 모호
		•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확대
	기술발달의 부작용	• 인간소외, 인간정체성 상실
		• 로봇에 대한 통제력 상실
		• 사생활 침해
	수요자 측면의 기술발달	• 보건의료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제품/서비스 공급 활성화
		• 환경문제 대응 기술개발
		• 자원부족, 대체에너지, 인력 등 사회문제해결 대응기술개발
환경	환경문제	• 지구온난화
		• 북극지역의 활용성
		• 열대 우림의 사막화
		• 물, 공기, 토양 등 오염
		• 생태계 불균형 및 생물 다양성 감소
		•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자원고갈	• 자원 활용의 효율성 강조
		• 식수 부족
		• 식량부족
		• 세계경제의 성장(개도국 중심)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 신재생/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
	질병	• 환경문제로 인한 질병 발생률 증가
		• 신종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정치	국제정치의 변화	• 비정부기관의 영향력 확대
		• 비서방권 국가의 영향력 확대
		• 국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 다자구상
	분쟁과 갈등	• 자원확보 관련 분쟁 심화
		• 이념적 갈등 심화
		• 보호(무역)주의
		• 국지전 심화
		• 사이버테러 심화
		• 무기거래 및 테러문제 악화
		• 민족주의 심화
	정치구조 및 환경의 변화	•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 확대
		• 개인 중심의 정치참여 양상 확대
		• 토론과 비평, 직간접적 정치참여 활성화
		• 정보독점 약화에 의한 권력 표준화

자료: 황혜란 (2018)에서 요약, 수정

□ **새로운 변수 : 코로나 19**

○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19는 현재까지 인류가 맞이한 전염병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글로벌 수준에서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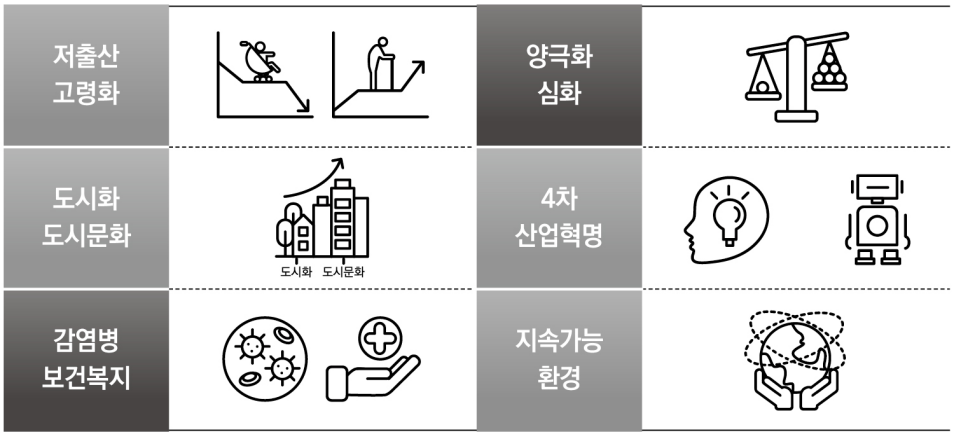
○ 코로나 종식의 기간에 따라 향후 사회경제적 충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종식 기간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2] 코로나 19 이후 예상되는 정책환경의 변화

부문	예상되는 정책환경 변화
경제	경제침체에 따른 재정정책 (기본소득 포함) 논의 확대
	유통구조 개편 가속화: 무인점포, 온라인 쇼핑, 택배 증가
	공유경제/공유공간 위축
	지역화폐 활성화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위축: Deglobalization
기술	4차산업혁명 기술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개인화/가상화 기술 확대
사회	비대면 접촉의 필요성 증가
	재택근무 등 노동 형태의 변화
	감시정보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 증가
	위험 사회 대비 시민사회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교육형태 변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필요성 증대
보건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수요 증가
	개인보건에 대한 수요 증가

□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에 영향 미칠 메가트렌드**

○ 국내·외 6대 미래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최근 코로나를 포함한 미래 비전 관련 변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6대 메가트렌드를 도출



[그림 2-1]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에 영향을 미칠 6대 메가트렌드

2.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1) 경제·산업·과학

□ **4차산업혁명 기술패러다임 기반 혁신성장**

○ 4차산업혁명 기술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 일자리 및 성장동력 확보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로 분야별 혁신과제 선정, 추진 중

□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확대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시스템**

○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경제 및 공유 경제 확대로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시스템 확충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2) 공간·교통

□ **도시재활성화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 주거정비 위에 양질의 일자리, 경제·생산 자원 접근성 확충 등 도시성장 관리 통해 도시경쟁력 확충

□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부응하는 스마트도시 공간전략**

○ 4차산업혁명 성장잠재성 발현을 위한 복합 컴팩트 공간전략과 스마트 도시화 지향

○ 4차산업혁명 기술 연동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 **광역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구**

○ 인구감소추세와 저성장 대응을 위한 광역화 기반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의 대응

3) 복지·보건·여성·가족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 맞춤형 사회보장과 의료공공성 확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등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시스템 구현

□ **성평등한 사회문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

○ 성평등한 사회문화 정립을 통한 젠더갈등의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

4) 문화·예술·관광·스포츠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체육**

○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본권에 입각한 생활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체육 시설 및 문화 확대

5) 환경·안전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시스템과 지속가능 성장 체계 정립**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 폐기물 관리 체계에서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체계로 전환

□ **복합·대형화 재난·안전사고 대응 위한 통합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사고의 복합화와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 관리

6) 시민자치·공동체

□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주민주권 구현**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포괄이양과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확대

○ 주민참여권 보장과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공동체 기반 사회문제해결**

○ 시민공유 공간과 공동체 지원 민관협치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시스템

[표 2-3] 국내 정책환경 변화의 주요내용과 핵심키워드

분야	주요 내용	핵심키워드
경제· 산업·과학	4차산업혁명 기술패러다임 기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확대 판데믹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침체	4차산업혁명기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위기관리 탄력재정
도시계획	도시성장관리, 에너지절약형 도시공간구조 스마트도시화	도시성장관리 컴팩트, 스마트도시
광역	광역화 통한 균형발전	광역중심 균형발전
교통	4차산업혁명 연계 교통패러다임 변화 광역교통수요 증가	광역교통, 스마트교통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문화기본권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생활문화
관광· 스포츠	힐링 치유등 웰니스(Wellness) 관광, 4차산업혁명 기술과 스포츠 기술의 결합	웰니스관광, 스마트스포츠
복지·보건	사회적 돌봄 및 부양 수요 증대 고용복지연계형 일자리 수요 고령화, 전염병 등 공공의료 수요 증가	사회적 돌봄체계 포용적 복지
여성·가족	젠더 갈등 심화, 성불평등의 지속, 일가정양립	젠더갈등, 일가정양립
공동체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문제해결, 공유공간과 문화	공유문화 기반 사회문제해결
자치·분권	주민주권, 지방분권	지방분권, 주민주권
환경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순환적 폐자원 이용	순환시스템
안전	안전사고의 복잡대형화, 불확실성증가 통합적 과학적 대응 필요성 증가	스마트안전시스템

자료: 저자 정리

3. 대전의 현황

1) 경제·산업·과학

□ **양호한 미래성장성 vs. 규모 경제 한계**

○ **(양호한 제조업 성장률)** 대전 제조업의 '07~'17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수 1.92%, 종사자수 2.51%, 출하액 6.85%, 부가가치 7.35%로 전국 대비 높은 편

○ **(제조업의 규모한계)** 대전의 2016년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6,065,442백만원(총 부가가치액의 18.13%, 전국 대비 29.47%)으로 낮음

○ **(벤처생태계 양호한 성장세)** 대전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는 2017년 1,250억원(전국 대비 5.3%, 특광역시 3위). 2019년 3월 기준 대전의 액셀러레이터는 14개(전국 9.4%, 전국 2위)

○ **(창업률에 비해 규모 한계와 취약한 신생기업 생존율)** 대전의 2017년 창업률 14.8%(전국 15.1%), 특광역시 3위. 벤처기업 수 1,321개(17개 시도 중 8위), 2016년도 대전의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5.7% (특광역시 최하위)

□ **높은 연구개발 집약도 vs. 지역 내 아닌 전국적 확산구조**

○ **(연구개발투자 밀집도·연구인력의 증가)** GRDP대비 연구개발투자 밀집도는 2017년 20.63%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 대전의 연구개발인력은 2017년 50,724명(전국 7.80%), 전국 시도 중 3위로 비중이 높음

○ **(사업화 성과 증가)** 특허출원은 2017년 10,734건(2007년 9,10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대덕특구의 연구소 기업은 2017년 148개로, 2006년에 비해 74배 증가.'05 ~ '16년 연평균 성장률은 18.83%로 상승

○ **(전국적 확산구조)** 그러나 대덕 내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특허와 사업화 성과는 지역 내 활용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조

□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성장률**

○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인력 감소 및 지역기업의 구인난 가속화. 대전의 구인배수는 2017년 0.34(전국 0.59)로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동시에 대전 고용률은 특광역시 5위, 2018년 58.7%(전국 60.7%)로 낮아 전형적인 일자리 미스매치의 양상

○ **(청·장년층의 심각한 실업률)** 대전의 실업률은 2018년 4.2%(특광역시 2위), 청년층 실업률은 2018년 9.0%(특광역시 3위), 장년층 실업률은 3.3%(특광역시 1위)

2) 공간·교통

□ **인구의 지속감소와 고령화 추세와 가구 구조의 다양화 진행**

○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전시의 인구감소는 저출산시대 자연적 감소 외 세종시로 전출에 기인함.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전출자는 2018년 22,180명(2012년 8,907명)으로 증가. 대전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2017년 11.9%) 및 지역별 고령화 격차가 심화

○ **(가구 구조의 다양화)** 2017년 1인 가구 비중은 31.5%(2010년 15.2%)로 지속적으로 증가. 2030년 1인 가구 비중은 35.6%에 이를 것으로 추정. 대전시 거주 외국인 수는 2017년 20,534명(2010년 11,701명)으로 증가 추세. 대전시 다문화가정 수는 2017년 기준 6,323가구(약 1.1%)

□ **중심시가지 쇠퇴 지속과 도시성장 핵심 축 약화**

○ **(도시내 불균형과 도시정비사업 부진)** 인구감소 및 교외와, 신시가지로의 인구이동으로 원도심 주거환경 낙후현상 심화.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소 미진 (기본계획 120개소 중 약 60%가 추진 중)

○ **(도시성장 핵심 축 약화)** 대덕특구 등 첨단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인프라 불구하고 도시성장 견인 기능 미흡하여 도시성장의 핵심 축 약화

□ **대중교통 분담률 지속 감소와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 증가**

○ **(대중교통 분담률 지속 감소)** 승용/승합차 통행량 비중이 42.8%, 승용차를 제외한 택시, 버스, 철도,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및 지속가능성 감소

○ **(광역교통 수요 증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도시의 성장으로 국도 1호선 및 구즉로 축으로 국한 된 대전-세종간 도로 등 광역 교통 수요 증가와 세종, 청주, 공주 등 광역통행권과의 이원화된 교통운영으로 인한 시민불편 증가

3) 복지·보건·여성·가족

□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와 사회적 약자의 높은 빈곤율**

○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와 계층별 맞춤형 복지 미흡)** 노년층, 산모, 장애인 돌봄 및 부양 수요 증가하나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 미정착

○ **(소득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약자의 높은 빈곤율)** 계층별 소득불평등 심화, 노인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장애인의 높은 상대빈곤율과 낮은 고용율 등 사회적 약가 계층의 빈곤율 증가 대책 필요

○ **(사회적 약자 차별 및 학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포력 등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 미흡

□ **취약한 공공의료 기능**

○ **(공공의료기능 취약)** 대전시 전체 의료기관 120개소 중 공공의료기관은 7개소(5.8%) 로 높은 '보건의료시설'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신건강 취약성)** 전체 자살 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책으로써 일반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

□ **양호한 성평등 환경 vs. 여성 경제활동의 격차 상존**

○ **(양호한 성평등 환경)** 대전광역시는 2013년 이래 성평등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문화·정보(전국 1위), 경제활동(2위), 의사결정과 복지 (4위), 보건(5위)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여성 지위에 대한 착시현상)** 높은 성평등 지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5급이상 공무원 비율성비 (7위), 관리자 비율성비(12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위), 성별임금 격차 (5위) 등임

○ **(안전과 가족에 대한 낮은 성평등)** 안전과 가족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13위)로 지역사회의 물리적·심리적 안전에 대한 정책 시급. 가족 관계만족도와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16위), 그리고 육아휴직자 성비 (11위)로 가족정책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요구됨

○ **(여성 교육, 네트워크 활동 지원 및 담론 형성 공간의 부재)**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통합할 콘트롤타워 부재. 지역 여성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요구를 정책적으로 기획할 물적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 양성 필요

4) 문화·예술·관광·스포츠

☐ **우수한 문화시설 기반 vs. 문화적 특성화 및 생활문화 여건 빈곤**

○ **(우수한 문화 시설 기반과 높은 문화 향유 욕구)**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시설 수 서울 제외 광역시 2위(2017년). 대전시민의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86.3%(전국 81.5%), 문화공간 이용시간은 82.0시간(전국 66.2시간)

○ **(문화 자원 특성화 빈곤과 생활문화 여건 부족)** 근대문화 유산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특성화 빈약.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 필요

☐ **전반적인 관광 경쟁력 부족**

○ **(저조한 관광객과 관광경쟁력 부족)** 대전의 외래 관광객은 전국의 1.7%에 불과. 교통 편의 등 환경쾌적도(595점/전국 578점)는 높으나 자원풍족도(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는 527점(전국 575점)로 전국대비 취약

☐ **체육예산의 비효율성 vs. 스포츠 산업 규모 성장**

○ **(부족한 체육예산과 시설 및 비효율성)** 대전시의 체육예산은 서울 제외

광역시 4위(2017년)이며, 공공체육시설은 광역시 중 5위(506개소, 2,225,222㎡, 2017년). 기초단체의 체육예산이 매우 열악. 비효율적인 체육예산(공공체육시설위탁비 등, 전체 예산의 약 23%) 발생

○ **(스포츠산업규모의 성장)** 대전시의 스포츠산업규모는 1조 4580억 원으로 광역시 중 3위. 스포츠서비스업 (7,340억), 스포츠용품업(4,090억), 스포츠시설업(3,150억) 순으로 구성

5) 환경·안전

□ **우수한 환경과 녹지비율 vs. 폐기물 재활용 미흡**

○ **(우수한 환경)** 대전은 온실가스 배출량,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우수한 환경 여건을 보유. 주요 하천 지점의 수질 또한 갑천 하류의 하수처리장 고도화, 하수관로및 비점유출의 개선으로 호전

○ **(녹지율 상승)** 대전광역시 2017년 도심권 녹지 전체 면적 37,944천㎡, 녹지율 12.19%(전년대비 508㎡ (1.3%)) 증가

○ **(폐기물 재활용 미흡)** 대전광역시의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량 0.929 kg/일/인(특광역시 평균 0.859 kg/일/인)이 높은 편임. 폐기물 처리방법 중 매립 17.4%, 소각 17.4%로 재활용 비율은 65.2%에 머물렀음

□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증가와 낮은 도시안전 경쟁력**

○ **(자연재난 증가와 도시인프라 확충 필요성)** 대전시의 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율 2017년 55.7%. 하수관 중 64%가 노후 하수관.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 증가에 따른 도시인프라 확충 필요

○ **(사회적 재난 증가에 따른 구조수요 증가)** 인구대비 화재발생건수 (7건/만명) 광역시 3위. 2017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7,767명('14년 5,899명)으로 지속 증가. 인구대비 구조건수는 60.8건/만명(전국 1위 세종 192.2건/만명, 2위 서울 145.1건/만명)으로 전국 최하위. 화재피해 감소와 골든타임인 신고에서 7분이내 현장도착률이 79.1%(광역시 4위)

6) 시민자치·공동체

□ **자치분권 패러다임 변화 대응 필요성 증가**

○ **(자치분권 패러다임 변화와 대전광역시 대응 필요성)** 주민자치, 주민주권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 등 자치분권 패러다임에의 대응 필요성 증가

□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사회문제해결 필요성 증가**

○ **(민선 7기 시정비전 구현과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해결 필요성과 가능성 증가

7) 종합

○ 이상의 부문별 대전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음

[표 2-4] 부문별 대전의 현황

부문	대전의 강점	대전의 약점
경제·산업·과학	■ 우수한 미래 성장성 ■ 벤처 생태계 성장성 양호 ■ 기술사업화 성과 양호	■ 규모경제 미흡 ■ 기업 생존률과 역내 정착 미흡 ■ 일자리 미스매치와 낮은 고용성장
공간·교통	■ 혁신도시 지정 등 신성장거점 확충 가능성 제고 ■ 충청광역권 핵심도시로서의 지위	■ 도시내 불균형과 정비사업 부진 ■ 도시성장 핵심 축 약화 ■ 광역교통 수요 증가 대응 미흡 ■ 낮은 대중교통분담률
복지·보건·여성·가족	■ 양호한 성평등 환경 ■ 공동체 기반 돌봄 경험	■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 공공의료 기능 취약 ■ 여성 경제활동 격차 상존
문화·예술·관광·스포츠	■ 우수한 문화 기반 시설 ■ 스포츠 산업 규모 성장	■ 문화 자원 특성화 부족 ■ 관광경쟁력 부족 ■ 체육예산 미흡
환경·안전	■ 우수한 환경과 녹지비율 ■ 스마트 안전 기반 우수	■ 폐기물 재활용 미흡 ■ 사회적 재난 구조수요 대응 미흡
시민자치·공동체	■ 민선 7기 시민공동체 사업 ■ 시민공동체 경험 축적	■ 지자체 기획능력 미흡

자료: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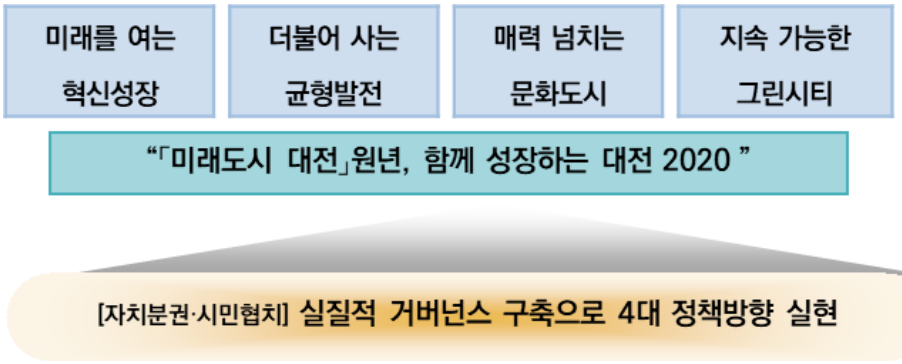
4.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새로운 정책수요

1) 민선 7기 전반기 사업화 새로운 정책수요: 종합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새로운 정책수요**

○ 본 절에서는 민선 7기 전반기에 시작된 사업들을 대전광역시가 2020년 시정방향 ([그림 2-1])으로 제시한 4대 정책분야별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향후 요구되는 정책수요를 정리하였음

- 4대 정책분야: ①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②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③매력 넘치는 문화도시, ④지속가능한 그린시티



[그림 2-2] 대전광역시 2020년 시정방향

○ 이하에서는 4대 분야에 대해 정책 이슈별 민선 7기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수요를 정리하였음 ([표 2-5], [표 2-6], [표 2-7], [표 2-8])

▢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표 2-5]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혁신성장

이슈	주요 정책	향후 정책수요
신성장동력 창출	스타트업 파크	국가혁신클러스터·혁신도시와 연계된 원도심 제2스타트업파크 조성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초광역 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대전세종 연접지역 신규 산업단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TSP 구축 소재 개발 디딤돌센터 구축
	유전자 의약산업진흥센터	의료바이오 인력양성 플랫폼 가속기 연계 의료바이오 혁신플랫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도시	디지털 트윈 시티 조정 1단계(복지/환경/에너지/교통)
혁신공간 조성	대덕특구 리모델링	국제과학비즈벨트 지역 연계 활성화
	대덕 과학문화의 거리	
	엑스포 재창조	
매력적인 도심주거 환경 조성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대전시 신성장거점 공간개발 구상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광역권 선도	충청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대전의 실질적 광역 접근성 강화 방안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건설	

자료: 저자 정리

▢ 매력넘치는 문화도시

[표 2-6]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문화도시

이슈	주요 정책	향후 정책수요
시민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확대	문화인프라 특화 및 콘텐츠 강화
	산업복합형 다목적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다양한 여가·체육 프로그램 개발
대전 대표 문화자산 브랜드화	이응노 예술도시, 신채호 창작공연	대전형 문화예술관광 자산 구축 문화 클러스터 전략 기획 추진
	3·8민주의거기념관, 신채호 기념관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효문화 뿌리공원	
과학문화관광 도시 브랜드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과학문화 연계 문화거점
	UCLG 총회 개최	중부권 MICE허브 지위 확고화
거점형 관광자원 개발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관광 자원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체험놀이 콘텐츠 확충
	대청호 오백리길 관광 인프라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과학자원 연계 스포테인먼트 기능

자료: 저자 정리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표 2-7]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균형발전

이슈	주요 정책	향후 정책수요
균형발전·사회적경제	혁신도시 지정	대전시 신성장거점 개발구상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	
	중앙로 소셜벤처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확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역세권 개발 통한 지역균형발전 연결
	대중교통 수요관리 패러다임 전환	모빌리티 활성화
건강한 사회	대전의료원	감염병 포함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권 강화 지역사회 건강보장 확대 등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가족안심 치매요양원	
더불어 잘사는 사회	금융소외계층 급전지원 및 금융상담사 배치	계층별·수요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새로시작재단	
	청년내일재단 설립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체계 확충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양성이 평등한 사회	성주류화 기반 정착	성주류화 제도적 기반 확대
	생활속의 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네트워크 및 거점공간 마련
	여성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여성·아동 보호위한 사회안전망구축	SNS 등 여성안심 이용 제도
	안심돌봄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가구정책으로의 전환
	공공어린이집 100개 확충	지역기반 돌봄 공동체 구축
공동체 강화	5개구 공동체 지원센터	행위주체 및 시스템 혁신통한 선도적 공동체 문화 형성
	시민공유공간 100개 조성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시민주권	‘대전시소’ 정책소통 창구 신설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등 제도 보완
	시민주권 도시기반 확대	시민공유공간 확대

자료: 저자 정리

□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표 2-8]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_그린시티

이슈	주요 정책	향후 정책수요
친환경 물순환 도시	친환경 물순환 선도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모니터링, 관리방안 수립
	3대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참여형 그린시티 추진	주민친화형 맑은물 재생센터	시민참여형 스마트 그린시티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수도 대전 추진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도시	
스마트 안전 도시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재난 대응시스템' 재난 데이터 기반 실시간 분석 기술 인프라 디지털 트윈 기술적용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도심침수)	
	지진피해 저감 위한 내진성능 확보	
안전사고 감축 위한 안전인프라	안전지수 향상 등 안전사고 감축 총력	조도개선 등 범죄예방 소방헬기, 시민종합 안전체험관 등 인프라
	안전인프라 환경조성과 문화 확산	

자료: 저자 정리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기대되는 미래상과 정책목표 조정**

○ 이상에서 살펴본 민선 7기 전반기 사업들을 4대 정책부문별로 분류하여 세부영역으로 그룹핑하고 각 세부영역별로 향후 정책수요에 기반한 정책아젠다를 도출하면 다음 [표 2-9]와 같음

○ 또한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새로운 정책수요에 기반한 정책아젠다를 고려할 때 민선 7기 후반기 추구할 정책목표는 다음 [그림]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5대 정책목표: ①활력넘치는 경제도시, ②공동체 기반 포용도시, ③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도시, ④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이상의 4대 정책목표의 메타목표로서 ⑤광역선도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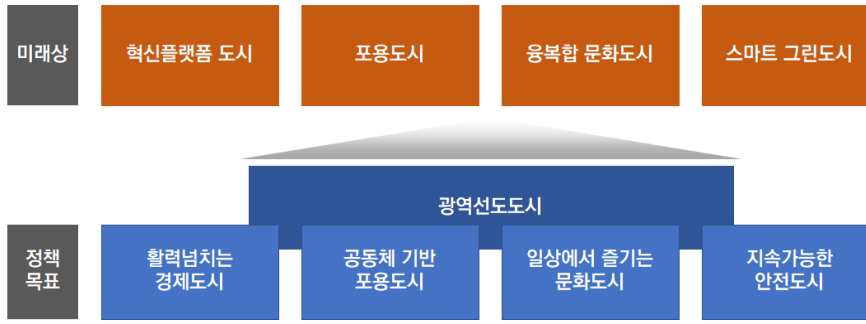
[표 2-9]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

정책부문	세부영역	정책 아젠다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신성장 동력창출	대덕특구-대전지역 간 연계 활성화 기반 마련 기술집약형 벤처 생태계 활성화 기반 고도화
	혁신공간 조성	대덕특구의 혁신플랫폼화
	매력적 도심주거환경	대전 신성장거점 공간개발
	균형발전과 사회적 경제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확충 교통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확충
	광역권 선도	충청광역권 내 대전의 선도적 위상
매력넘치는 문화 도시	시민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시민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
	대전대표 문화자산 브랜드화	대전형 문화예술관광 자산 구축
	과학문화관광 도시 브랜드화	대전특화형 과학문화 연계 문화거점 확보
	거점형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거점 기능 강화 기반 마련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건강한 사회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더불어잘사는 사회	계층별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 대응시스템 구축
	양성이 평등한 사회	성주류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여성역량강화 공동체 기반 구축
	공동체 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확대
	시민주권	시민주권 도시 공간/제도적 인프라 확대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친환경 물순환 도시	친환경 물순환 선도도시 기반 마련
	시민참여형 그린시티 추진	시민참여형 스마트 그린시티 인프라 구축
	스마트 안전 도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사고 감축위한 안전인프라	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 문화 확산

자료: 저자 정리

❍ 이상에서 도출된 세부영역별 정책아젠다를 종합하여 조정된 5대 정책목표와 민선 7기 전반기 전개된 사업에 기반한 대전의 미래상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이 **혁신플랫폼 도시, 포용도시, 융복합 과학문화도시, 스마트 그린도시**로 정리할 수 있음

- 혁신플랫폼 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를 연계,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투입요소들을 고부가화함으로써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의미
- 공동체 기반 포용도시는 지역내 균형발전과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시민공유자산을 개발, 축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의미
- 융복합 문화도시는 과학기술의 적용과 융·복합을 통한 대전형 문화 ·관광· 스포츠 특화모델을 지향함으로써 도시매력도를 높이고 시민이 생활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양질의 문화·여가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
- 스마트 그린도시는 자원 순환에 기반한 환경친화도시로서, 시민이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참여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



[그림 2-3]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을 분석하여 도출한 정책목표와 도시미래상

2) 민선 7기 전반기 사업화 새로운 정책수요: 부문별

□ 경제·산업·과학

[표 2-10]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경제산업과학분야

민선7기전반기 주요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중앙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소셜벤처 육성 기능 확충 및 기반 확대 유망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소셜벤처 발굴에서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IP확보, 제품고도화 등), 입주공간 지원을 통해 소셜벤처 유치 및 창업 활성화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소셜벤처 육성 및 중기부 소셜벤처 특구 지정
스타트업파크 조성	궁동지역 제1스타트업파크 조성 정부사업 공모 우선대상 선정 대상지 조성기반 확보(거점센터 매입) 초기 민간투자기관(VC·AC) 유치 TIPS타운과의 연계 강화 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원도심혁신도시(국토부)와 연계한 원도심 제2스타트업파크 조성
안산 첨단국방산업 단지 조성	시행사 선정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 국방산업 기업 유치 촉진 국방산업 활성화 기반 확충	초광역 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발굴 대전세종 연접지역 산업단지 신규 조성 국방벤처진흥원/국방산업기획평가원 신설 유치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정책기획사업 신규발굴 활성화 출연연/지자체 연계 활성화 기획 지역내 과학기술산업 신규 기획 활성화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TSP 구축 4차산업혁명 소재 개발 디딤돌 센터 구축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수소 안전성 평가 센터 설립 가정용 전력 3050 추진 동력 확보 친환경에너지 도입 시범도시 조성	디지털 트윈 시티 조정 1단계(복지/환경/에너지/교통)
유전자 의약산업진흥센터	바이오유전자 산업육성 기술플랫폼 구축 국가 R&D 예타사업 유치 바이오 규제완화특구 조성	의료바이오 인력양성 혁신 플랫폼 구축 가속기 연계 의료바이오 기술플랫폼 구축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 공간·교통

[표 2-11]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공간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추진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	기존 도심주거환경 개선	대전시 신성장 거점 개발 구상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주민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추진		
엑스포 재창조	엑스포구역 활성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방안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건설	대전시 광역적 접근성 강화 기반조성	대전시의 실질적 광역적 접근성 강화 방안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표 2-12]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교통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2기 트램 건설로 인한 도시철도망의 보완 및 연장	역세권 증가 및 지역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Mobility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	Mobility를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
승용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주차관리, 주차단속 강화 등을 통한 승용차 이용 억제	승용차의 수요관리 중대성 증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이용자의 눈 높이에 맞는 교통환경 구축	교통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

□ **복지·보건·여성·가족**

[표 2-13]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보건·복지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대전의료원 설립	공공의료 체계 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권 보장	감염병 예방 등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권 강화, 지역 사회 건강보장 확대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충남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공급 부족 해소	
금융소외계층 급전지원 및 금융상담사 배치	저소득층의 생활고 해결 및 정보접근성 향상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 체계 구축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설립	은퇴 후 소득공백 완화로 삶의 질 향상	
가족 안심 치매요양원 건립	돌봄의 사회화 기반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통한 돌봄 친화도시 구현	지역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구축 으로 사회안전망 실현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공공성 증진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자립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기반 구축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체계 확충	교육 기회 확대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로 지역사회생활 토대 구축	

[표 2-14]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여성·가족분야

민선7기 전반기 주요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성주류화 기반의 안정적 정착	정책 전 분야의 성평등한 정책증가 시민의 정책만족도 증대 및 지역의 성평등 확산	성주류화 체계적 제도화 지역성평등 확산 위한 여성활동 거점 플랫폼 마련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	지역의 성평등한 문화 확산	청소녀& 청년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공간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로 여성인권보호체계 마련	여성 및 아동의 안전 만족도 상승 및 지역 만족도 증대	sns 및 인터넷상의 혐오·성차별, 성폭력 등 에 대한 안전 이용 제도와 정책
여성역량강화와 여성 공동체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미래세대의 '생존'과 '취향' 공동체 발굴·지원
안심돌봄을 위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정착으로 일·가정양립문화정착	결혼, 가족, 양육으로 집중된 가족정책에서 가구 정책으로 전환 아동정책 강화

☐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표 2-15]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문화·예술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확충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공공도서관별 특화 전략과 생활문화센터의 콘텐츠 강화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시설 운영
대전 대표 예술 브랜드 사업(이응노예술도시, 신채호 창작공연 등)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확산과 대내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대전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관광 자산 구축으로 내외부 관광객 유치
문화적 도시재생과 문화특화지구 조성	문화적 자산 가치 부여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함양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과 결합된 종합적 문화클러스터전략 기획 추진
역사문화 유산 발굴과 자산화(3·8민주의거 기념관, 신채호 기념교육관 등)	대전의 역사정체성 강화와 역사문화관광 자원 특화	대전시 차원의 대전학 연구조직 출범을 통해 지속적 도시정체성연구 기반 마련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과학도시·스마트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먹거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활성화 정책

[표 2-16]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관광·체육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보문산종합관광개발, 대청호오백리길 관광인프라	거점형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 수 증가	관광자원의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체험놀이 콘텐츠 확충
효문화 뿌리공원	2단계 조성을 통해 대전만의 교육자연 관광인프라 확대	대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관광자원 확충
UCLG총회 유치	총회 개최를 통해 중부권 MICE 허브 목적지로 인지도 상승	외국인 관광객 니즈 충족을 위한 대전형 관광기념품 구축
공격적 스포츠 마케팅 강화	스포츠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체계적 관리 강화	S/W와 H/W의 효율적 강화 및 시설 활성화 측면의 다양한 여가·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혁신주체(콘트롤타워) 확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스포테인먼트공간 조성을 통해 복합적 여가관광 활동 확대	
산업복합형 다목적 체육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스포츠 시설 확대를 통해 균형적 시민 여가 향유 증가	

☐ **환경·안전**

[표 2-17]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환경 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친환경 물순환 선도도시	도심의 빗물관리로 인한 자연회복율 개선	물순환 효과 및 관리를 위한 이행방안 구축
주민친화형 맑은물 재생센터 건설	갑천하류 및 금강의 수질 개선 및 기존도심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친화형 환경시설 홍보를 위한 견학프로그램 구축
그린네트워크 센트럴파크 조성	대전광역시 허파 및 휴식공간으로의 중심 역할 수행	도시의 자연화율 증대를 위한 관리방안 지속 수립
3대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전광역시 랜드마크로서 하천의 임무 개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모니터링, 관리방안 수립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전광역시 에너지 자립에 기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지원 방안 및 테스트베드 참여 방안 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수도 대전	대전광역시민이 원하는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완비	안전 및 생활의 질과 관련한 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표 2-18] 민선 7기 안전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안전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안전지수 향상 등 안전사고 감축 총력	안전지수 중·상위권 진입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조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감축을 통한 안전지수 개선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재난관리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	eSOP기반의 '지능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예·경보시스템 보강 5G 기반 드론 활용 소방관제 시스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마련	도심침수 발생시 신속 대피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도심침수에 적합한 재난 데이터 기반 실시간 도시침수 분석 기술
지진 피해 저감을 위한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보강과 지진 대비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진에 강한 도시조성	디지털 트윈 기술적용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마련
안전인프라 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시민안전문화 제고와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차단	고밀도 도시공간의 화재대비를 위한 소방헬기 도입 대전 시민종합안전체험관 건립

☐ 시민자치·공동체

[표 2-19]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시민자치 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혁신도시 지정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신성장동력 창출 자치구간 균형발전 기반 확대	
'대전시소' 시민과의 정책소통 창구강화	숙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등 제도보완
시민주권도시기반 (대전형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민개방형시청사)	시민주권도시 구현	대전광역시 시민청사 등 시민공유 공간 확대

[표 2-20]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 따른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_공동체 분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 수요
5개구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공동체사업 관련 지원·역량강화·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공동체 완성 :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지원' 행위 주체 및 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선도적 공동체 문화 형성
시민공유공간 100개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	
청년내일재단 설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청년사업 기반 구축	
공공어린이집 100개 확충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구축을 통한 보편적 아동복지 구현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	국제도시 위상을 갖춘 다문화 공동체 기반 조성	

DSI

미래도시 대전의 정책 아젠다와 과제

1. 대전의 SWOT 분석
2.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 아젠다
3. 핵심 정책과제

3장

3장 미래도시 대전의 정책 아젠다와 과제

1. 대전의 SWOT 분석

1) 대전을 둘러싼 위기와 기회

□ **민선 7기 후반기 이후 대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 2장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내 정책환경 변화를 종합하여 민선 7기 후반기 이후 대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그룹핑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대전에 미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음

○ 인구구조와 이동, 특히 저출산·고령화라는 매크로 영향변수는 대전에 보건 의료 및 실버산업 수요 확대라는 기회요인과 복지비용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세종시로의 인구 지속유출이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

○ 지역경제 차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창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매크로 변수는 대전에 지식서비스업 부상,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정착 등의 기회요인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 지식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과 창업기업 성장 후 수도권 유출이라는 위협요인도 상존

○ 4차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기술변화 차원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심화나 고급 R&D 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의 위협요인도 상존

○ 도시공간과 교통이라는 차원에서는 광역화와 스마트화가 진전되면서 광역화에 부응하는 선도사업 기회 확대와 스마트 도시서비스 확산이라는 기회요인이 존재하지만 세종시 성장에 따른 대전의 충청권 내 위상 약화라는 위협요인이 동시에 존재

[표 3-1] 민선 7기 후반기 이후 대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영향변수군	영향변수	
	기회요인	위협요인
인구구조와 이동 (저출산·고령화)	보건의료 및 실버산업 수요	복지비용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세종시로의 인구 지속유출
지역경제 (산업구조변화·창업)	지식서비스업의 부상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사회적 경제 기반 확대	지식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 창업기업 성장 후 수도권 유출
기술변화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고급R&D인력의 수도권 집중 양극화 심화
도시공간과 교통 (광역화·스마트화)	광역화에 부응하는 선도사업 기회 확대 스마트 도시서비스 확산	세종시 성장에 따른 충청권내 지위 약화
환경과 안전 (위험사회)	보건/웰빙/안전관련 수요 확대 지속가능성 우위 공공의료관련 중앙정부 지원	감염병의 확산과 경기침체 위험의 상시화
지방자치와 공동체 (지방분권·시민의식)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자율성 공동체 의식 증대	지방비 부담 증가 지자체 자체 기획역량 미스매치

자료: 저자 정리

- ❍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는 위험사회라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 웰빙/안전 관련 수요 증대와 대전의 지속가능성 우위를 활용한 도시 경쟁력 확대라는 기회요인과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의 상시화와 같은 위협요인이 존재
- ❍ 지방자치와 공동체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및 인사권 확대와 시민참여와 공동체의식 확대와 같은 기회요인이 존재하지만 지방비 부담 증가와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 기획 역량과의 미스매치 등의 위협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

2) 대전의 강점과 약점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을 반영한 대전의 강점과 약점

○ 앞에서 검토한 대전의 부문별 현황과 민선 7기 전반기 시작된 사업을 반영하여 대전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음

[표 3-2] 대전 현황분석과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을 종합 고려한 대전의 강점과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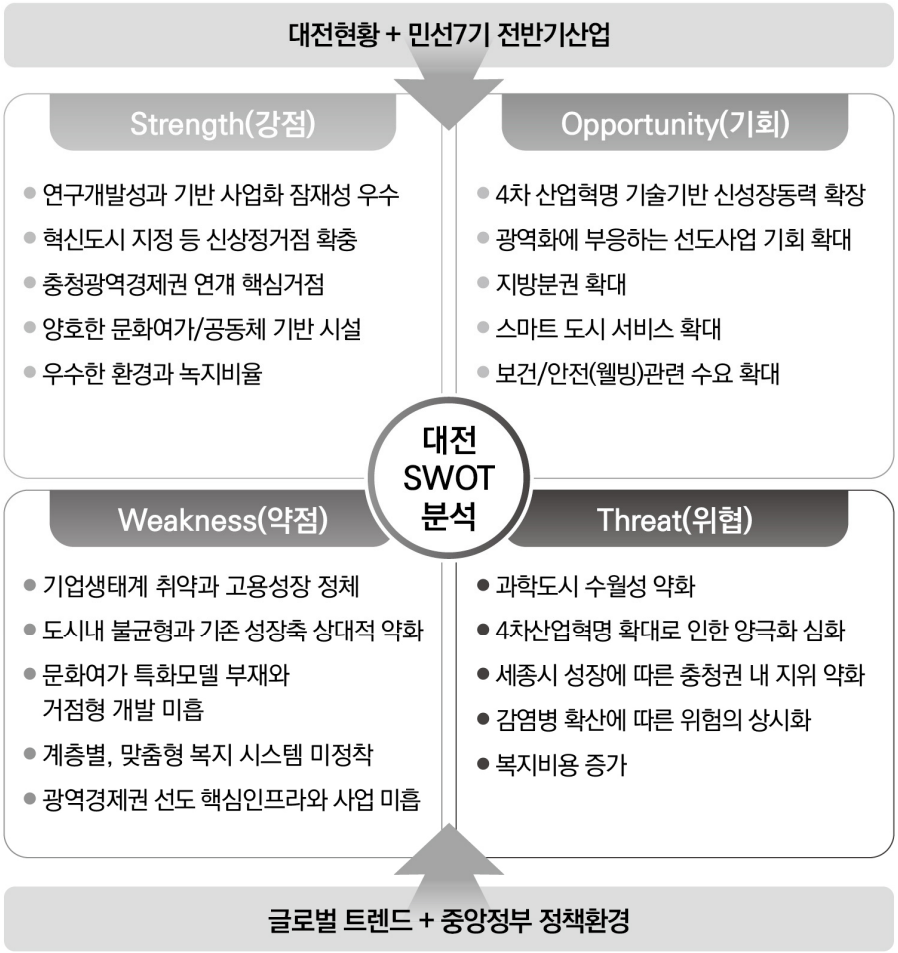
부문	대전의 강점	대전의 약점
경제·산업·과학	• 대덕특구 연계 가능성 • 벤처 생태계 성장성 양호 • 기술사업화 경험 축적	• 규모경제 미흡 • 기업 생존률과 역내 정착 미흡 • 낮은 고용성장
공간·교통	• 혁신도시 지정 등 신성장거점 확충 가능성 제고 • 충청광역권 핵심도시로서의 지위	• 도시내 불균형과 정비사업 부진 • 기존 성장축 상대적 약화 • 광역교통 수요 증가 대응 미흡 • 낮은 대중교통분담률
복지·보건·여성·가족	• 양호한 성평등 환경 • 공동체 기반 돌봄 경험 축적	•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 공공의료 기능 취약 • 여성 경제활동 격차 상존
문화·예술·관광·스포츠	• 양호한 문화·여가 기반 시설 • 스포츠 산업 규모 성장	• 문화·관광 자원 특성화 부족 • 관광경쟁력 부족 • 체육예산 미흡
환경·안전	• 우수한 환경과 녹지비율 • 스마트 안전 기반 우수	• 폐기물 재활용 미흡 • 사회적 재난 구조수요 대응 미흡
시민자치·공동체	• 민선 7기 시민공동체 사업 • 시민공동체 경험 축적	• 지자체 융복합 문제해결형 기획능력 미흡 • 시민공유 기반 미흡

자료: 저자 정리

3) 종합: 대전의 SWOT 분석과 전략방향성 도출

□ 대전의 SWOT 분석

○ 이상에서 분석한 대전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종합하여 대전의 SWOT을 분석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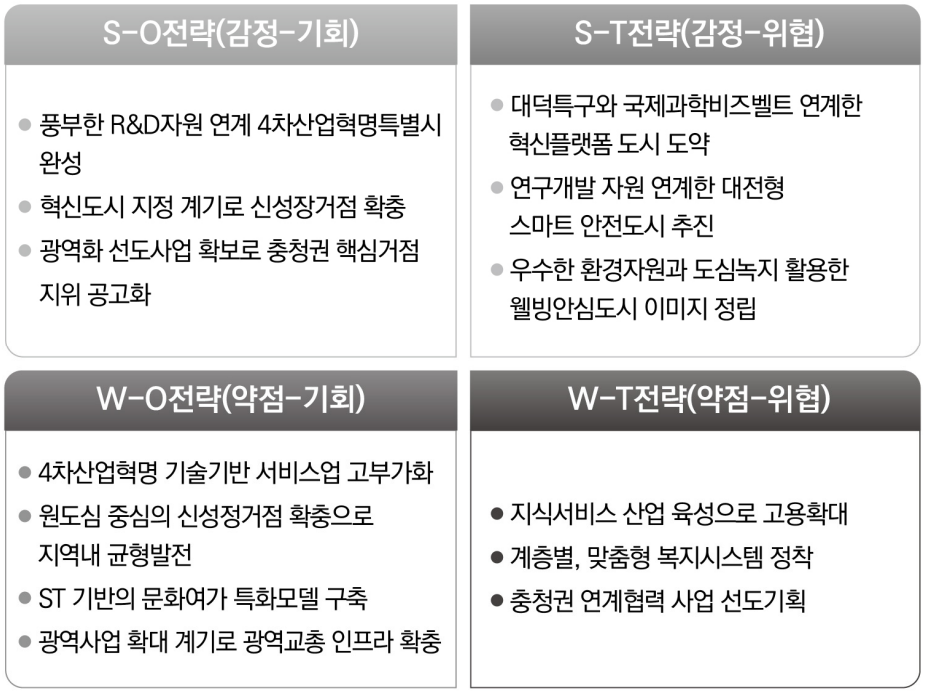
[그림 3-1] 대전 SWOT 분석 종합

○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 도출을 위해 강점-기회, 강점-위협, 약점-기회, 약점-위협을 연계, 방향성을 분석한 것이 다음 [그림 3-2]임

- **S-O (강점-기회) 전략:** 대전이 가진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원도심 등에 신성장거점을 확충; 광역화 추세에 따른 선도사업 확보로 충청권 핵심거점 지위의 공고화

- S-T (강점-위협) 전략: 대전의 자원인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벨트를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과학도시인 혁신플랫폼 도시로의 도약전략; 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대전형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대전의 우수한 환경자원과 도심녹지 등을 활용한 웰빙안심도시 이미지 정립
- W-O (약점-기회) 전략: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업의 고부가화 도모; 원도심 신성장거점 확충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 과학기술 기반의 문화·여가 특화모델 구축; 광역사업의 확대를 계기로 현재 취약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 W-T (약점-위협) 전략: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고용확대 도모; 계층별/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복지예산의 효과적 활용; 충청권 연계협력 사업의 선도적 기획으로 충청 핵심거점 지위 공고화



[그림 3-2] 대전 SWOT 분석 종합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 **대전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성 도출**

○ 이상의 분석을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6대 전략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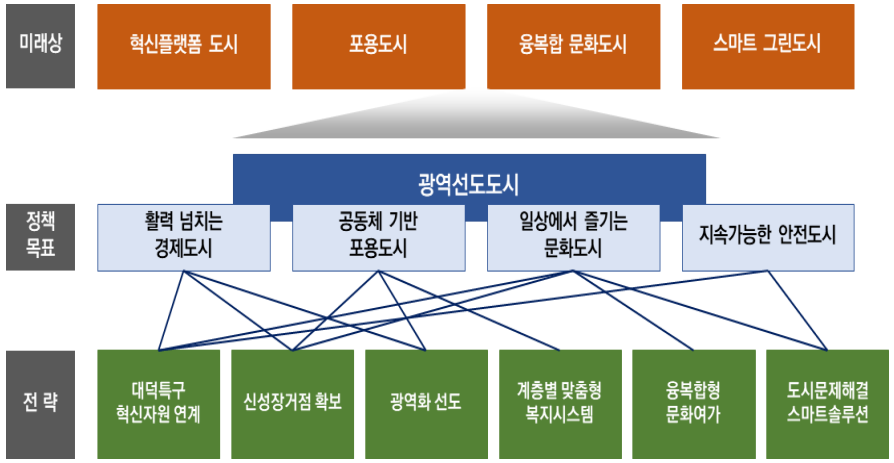
- **대덕특구 등 혁신자원을 연계**하여 과학도시경쟁력 강화
-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신성장거점을 확보**하여 지역내 균형발전 도모
- **광역화 선도**사업으로 충청권 핵심거점 지위 공고화
-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정착
- **대전형(융복합형) 문화여가 특화 모델** 구축
- 도시자원 결합한 **도시문제해결형(스마트 솔루션중심형)** 웰빙안심도시

□ **6대 전략방향성과 정책영역간 연계를 통한 대전의 미래상 구현**

○ 6대 전략방향은 앞에서 분석한 정책영역별 미래상 구현에 다음 [그림 3-3]과 같이 연계될 수 있음

-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영역의 미래상인 '**혁신플랫폼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대전의 강점인 대덕특구/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혁신자원의 연계와 신성장거점의 확보, 광역화 선도사업을 통한 지역 내·외 도시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방향을 설정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영역의 미래상인 **'공동체 기반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거점 확보, 광역화 선도사업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보 등 교통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안심 복지망을 완성
- '매력넘치는 문화도시' 영역의 미래상인 '융복합 과학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대덕특구의 과학기술자원을 연계하고 융복합형 문화여가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대전형 특성화를 추구하고 신성장거점 주거 및 연구단지 확충을 통해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필요
-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영역의 미래상인 '스마트 그린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대덕특구 과학기술 자원을 도시문제해결 스마트 솔루션과 결합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6대 전략방향과 5대 정책목표 간 연계

2.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 아젠다

○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대전의 미래상, 그리고 이의 구현을 위해 도출된 전략방향성을 기초로 민선 7기 후반기 이후 4대 정책영역별로 추구할 대전의 정책 아젠다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3-4]와 같음



[그림 3-4] 민선 7기 후반기 4대 정책영역별 정책 아젠다

☐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 아젠다: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정책목표

○ 플랫폼형 혁신생태계 고도화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에서 제시된 벤처창업생태계 사업을 고도화하여 혁신자원을 고부가화하여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형 혁신생태계로 도약

○ 혁신도시 연계 신성장거점

- 혁신도시 지정을 연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성장 거점의 확충

○ 초광역산업거점 기능확충

- 충청광역권을 포함 초광역산업거점 기능 확충을 통해 충청권 중핵도시로서의 지위 공고화

○ 광역적 접근성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내 교통 허브 기능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 허브 기능 재확보와 시내 교통 접근 용이성 확대

□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 아젠다: '공동체 기반 포용도시'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 감염병 예방을 포함, 출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의료 시스템 정착

○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별 복지 수요에 대응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 역량강화 공동체

-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형 공동체 공유공간, 네트워킹 등 확대

○ 공동체 기반 시민공유자산 확대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공유주방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공유 공간과 활동을 통한 시민공유자산의 확대

□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 아젠다: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도시' 정책목표**

○ 미래형 과학-문화 거점 구상

- 국가대표 과학도시의 위상에 부응하는 과학과 문화, 예술 간 융합으로 미래형 과학도시의 신거점 구상

○ 문화다양성 융복합 도시 구현

- 문화 예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적 도시로서의 대전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융복합 도시를 구현

○ 중부권 허브관광 목적지 도약

- 대전의 강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관광자원의 점, 선, 면 기능 강화를 통해 중부권 허브 관광 목적지로 도약

○ 과학기술연계 스포츠혁신 모델 구축

- 과학도시 기반을 연계하고 스포츠 분야 R&D 투자 확대를 통해 대전형 스포츠 혁신모델을 구축

□ **민선 7기 후반기 대전의 정책 아젠다: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정책목표**

○ 친환경 물순환 선도 녹색도시

- 하천을 중심으로 한 물순환 관리체계 완성을 통해 물순환 선도도시 달성과 도심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살고 싶은 생태환경도시 조성

○ 시민참여형 그린시티

- 폐기물 순환, 미세먼지, 악취 등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민이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생활환경 실천문화를 진작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그린시티 추구

○ 디지털 트윈 스마트 안심도시

-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통한 스마트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안심도시 추구

○ 안전인프라 확충과 안전문화 고취

-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거점 교육기관 확충 등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표 3-3] 민선 7기 후반기 분야별 주요 정책아젠다

분야	정책 아젠다
산업경제과학	창업벤처 육성
	혁신도시 연계 발전
	초광역 산업거점기능 확충
	4차산업혁명특별시 도약 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산업 육성
도시공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대전시의 광역적 접근성 강화
	대전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거점 선정 및 구상
	대전시 관광활성화를 유인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발굴
교통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자
보건·복지	감염병 및 재난심리지원 등 예방적 건강권 강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대전의료원 설립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
여성가족	다양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일상이 평화로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청년여성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
	가족 너머 가족정책, 가구정책으로 전환
	아동정책 강화
공동체	인권존중 주권행사 공동체
	평등지향 공동체
	신뢰·배려·공존 공동체
시민자치	시민주권도시 구현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광·체육	관광: 장소매력 증대를 통해 중부권 허브 관광목적지로 도약
	체육: 과학도시 기반을 통해 대전형 스포츠 선도모델 구축
문화·예술	마음껏 창작하고 풍성히 활동하는 문화 예술 창작 도시 추구
	다함께 누리고 일상이 즐거운 문화 향유 도시 추구
	근현대 지식문화와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융복합도시 지향
	미래지향적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환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대전
	살고 싶은 생태환경도시를 조성
	자원이 순환하는 스마트환경(폐기물 유출 제로 도시를) 구축
안전	선제적 예방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다운 ICT 접목의 스마트안전 관리체계구축
	안전행정 제고를 위한 거점

3. 핵심 정책과제

□ 정책영역별 아젠다와 핵심정책과제_종합

○ 이상에서 도출된 정책목표별 아젠다를 기초로 핵심 정책과제와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중 메타목표인 '광역선도 도시'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한 것이 다음 [표 3-4]와 같음

[표 3-4] 정책목표별 정책아젠다와 핵심정책과제_종합

정책목표	정책아젠다	핵심정책과제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플랫폼형 혁신생태계	데이터-AI 기반 4차산업혁명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도시 연계 신성장거점	원도심 '제2 대덕밸리' 조성
	초광역산업거점 기능 확충	'Heart of Korea' 광역 클러스터 조성
	광역교통 허브기능 확대	교통허브 대전 신르네상스 사업
공동체기반 포용도시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시민참여형 건강재단 설립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집찾사: 장애인 주택지원사업
	여성역량강화 공동체	대전 성평등 지원 플랫폼 조성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도시	미래형 과학-문화거점 조성	도안 미래 과학문화 융합도시 조성
	문화다양성 융복합도시	'문화예술 보건소' 사업
	중부권 관광 허브 신거점조성	밀가루 체험파크 조성
	과학기술연계 스포츠혁신모델	대전형 스포츠랩 조성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친환경 물순환 선도 녹색도시	주민친화형 맑은물재생센터
	시민참여형 그린시티	시민참여형 생활환경 과학문화 조성사업
	디지털 트윈 스마트 안심도시	디지털트윈 기반 다중이용시설 안전사업
	안전인프라와 안전문화	24시간 시민안심 시설물 확충사업
광역성장 선도도시	광역선도 과제 추진	「초광역 슈퍼 사이언스 대세밸리」 조성
		'교통허브 대전' 르네상스 사업
		「대청호 국립공원」 광역명품 둘레길 걷기여행길 조성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 개최

□ **'광역선도 도시' 정책목표 핵심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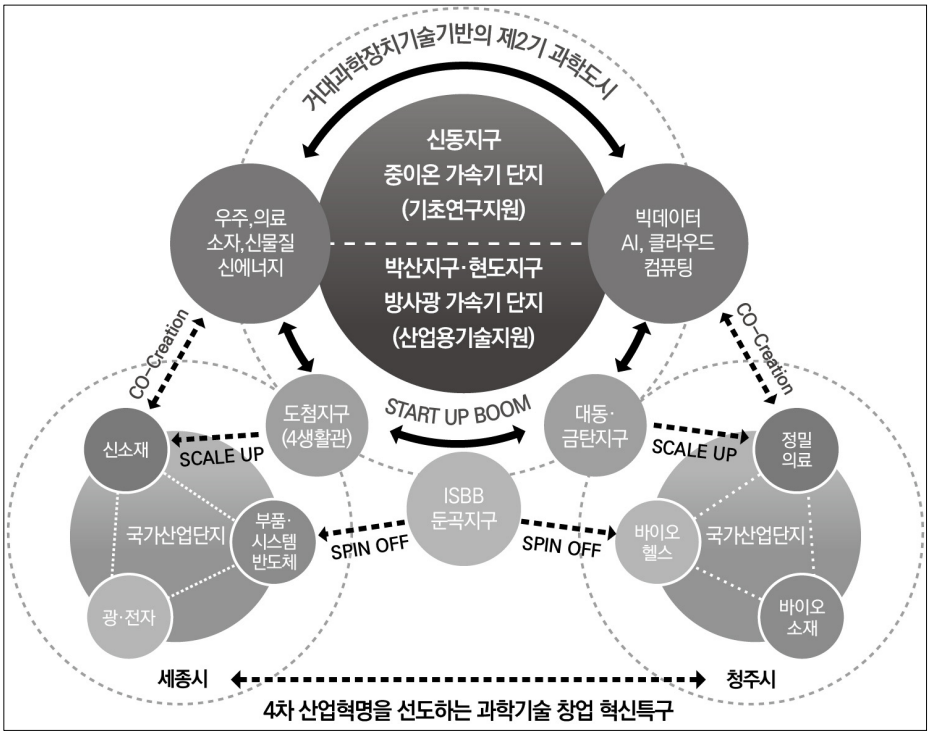
○ **「초광역 슈퍼 사이언스 대세밸리」 조성**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 정책의 광역화 지향과 세종시의 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충청광역경제권 내에서 대전이 핵심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광역사업 개발 필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가시화에 따라 대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연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
- 4차산업혁명 선도 등 국가혁신거점 권역으로서 대전-세종-오송오창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초광역 신 경제축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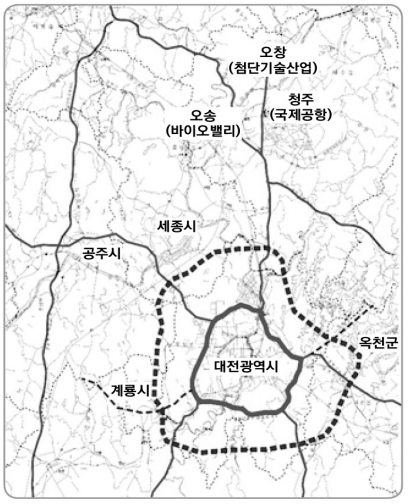
- 가속기 기반 국제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
  * 산업활용도가 높은 중소형 가속기 추가건설 및 방사광 가속기 광역연계
  * 가속기 기반 협업 및 국제협력 문화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과학기반 기업 집적과 기업의 가속기 활용을 위한 지원 기능 확충
  *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할 연구장비산업* 육성
  * 연구장비산업은 R&D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연구관련 서비스 및 연구장비 등을 지원하는 R&D 연동 산업활동 (주문연구, 연구기획관리, 고급연구장비)을 포괄
- 신동·대동·둔곡지구(대전)-오창·청주(충북)-세종을 연결하는 충청광역 연합체계 구축



[그림 3-5] 대세밸리 내 네트워크형의 제2기 과학도시 연합 체계 개념도(안)

- 신동·둔곡 자족성 확충과 대동·금탄 포함한 자족기능 확충

  * ①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②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③ 상업 및 업무기능 ④ 과학문화 시설 ⑤ 신재생 에너지 기반 친환경 단독·공동주택단지 및 연구개발자 레지던스 등이 입지하는 신도시로 조성



- 지역 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 지역 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 도로망 재구축으로 광역경제권 거점 경쟁력 확보(대전 제2순환망), 광역철도(KTX) 연결망 고려

해외사례

- (스웨덴 룬트 사이언스 빌리지) 룬트사이언스빌리지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 북유럽 메디콘 밸리의 핵심적 허브 역할 담당
- 산업용 및 다양한 혁신주체와 협업을 위해 개방, 가속기 기반 프로젝트 지원,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 등 가속기기반 혁신활동의 플랫폼 기능 담당



○ '교통허브 대전' 르네상스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과거 전국 교통의 허브였던 대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획이 필요
- 대전역 및 대전역세권은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내 교통 허브로서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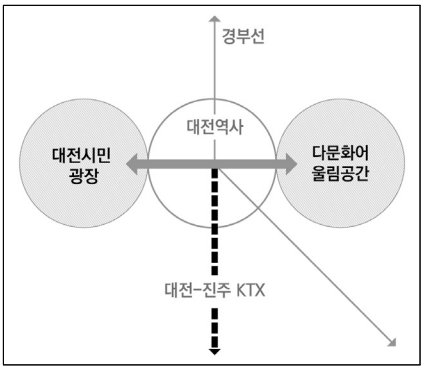
o (대전역 르네상스)

-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및 혁신도시 지정과 연계, 대전역 기능확충: 고속철도 역세권 기능 강화와 혁신도시 지정관련 지식재산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개발계획 수립, 역 광장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 빌딩, 호텔, 컨벤션센터, 연구시설 등 집적
- 대전시민광장 (대전역 서광장 전체) 조성
- 다문화 어울림 공간 조성
- 대전-진주 간 KTX노선 신설로 대전역 기능 강화

o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 중부권 및 인근 생활권 주민의 빠른 출국심사와 여행수요 흡수하여

대전역 위상과 기능 강화할 도심 공항터미널 설치



o (교통허브센터 설치)

- 대전역을 비롯, 주요 역세권과 교통 결절점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주는 교통허브센터 설치
- 공유교통수단인 카셰어링 및 전동 퀵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 모빌리티 이동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는 MaaS 도입

○ 「대청호 국가정원」 광역명품 둘레길 걷기여행길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 주변은 산악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확장의 가능성이 낮음. 특히 동측은 보존적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대규모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대청호를 최대한 대전시 발전에 유인할 필요가 있음
- 대청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연계하여 대청호 걷기여행길을 광역형 관광장소로 명품화하여 충청권의 부족한 거점형 관광자원 조성

▮ 주요 내용

- (대청호 국가정원 지정 추진) 현재 대청호 인근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규제 속에서 대전시 또는 청주시 등 광역적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 (대청호 명품 걷기여행길 추진) 대청호 명품 걷기여행길 조성을통한 충청권 거점형 관광자원화 추진

* 대전 동구~대덕구~청주~청원~옥천에 이르는 대청호 걷기여행길 구간별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 설치 및 마라톤코스 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

○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 개최**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과 세종은 양호한 공공체육시설 보유에도 불구하고 국제 혹은 국내를 대표할 스포츠 이벤트를 보유하거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
- 유치 경쟁이 치열한 메이저 스포츠보다 틈새 분야인 뉴스포츠* 분야를 활용하여 (가칭)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를 대전과 세종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기획이 필요

▪ 뉴스포츠는 메이저 스포츠를 쉽고 안전하게 변형하거나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변형하여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 특히 뉴스포츠는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의 성격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스포츠 문화를 진작

▮ 주요 내용

- (1단계: 진단) 뉴스포츠 종목 중 단순 이벤트성을 제외하고, 대중적이면서 지속적인 참여 도모 및 개최가 가능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류
- (2단계: 개발) 실내·외 개최 환경을 토대로 종목별 뉴스포츠 대회 발굴
- (3단계: 개최) 격년제(예: 홀수년 대전 개최 시 대세 뉴스포츠 대회→짝수년 세종 개최 시 세대 뉴스포츠 대회)로 개최하여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

□ **'활력넘치는 경제도시' 정책목표 핵심 정책과제**

○ **의료바이오 메카 조성**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업체를 비롯해 지역

내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

- 규제자유구역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완료 등 상황변화에 따른 산업 발전 강화
  -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IT산업을 중심으로 이업종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 융복합산업 육성 필요
  * '대전시는 18년 스포츠융복합도시 비전선포 실시'(18.4.26)하였으나,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이 '21년 종료
  *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레벨업을 위해 스포츠 산업과 의료 바이오 첨단기술을 연계한 의료바이오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필요

▌주요 내용

- 의료바이오 인력양성 혁신플랫폼 구축(교육부 공모 대학연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연계)
- 가속기 연계 의료바이오 기술플랫폼 구축
-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바이오메디컬 기업 성장 촉진 및 사업화지원/ 기능성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
  * 바이오메디컬 기업육성(매년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 5~10개 육성(5년간)/ 지역내 산업 시설 및 공간 확보(입주공간, 시설이용공간 등)/ 우수 기업 성장촉진(R&D 연계·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 등)
  *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바이오기능성소재 기업 지원(외국어 홍보물(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 글로벌 온라인 판매 지원(이베이, 큐텐 등)/ 통역 및 번역 교육 및 지원/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제작 지원/ 해외 바이오 전시회 및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의료바이오 연계 신융복합산업 육성(의료·스포츠 융복합 기업 성장지원)
  * 의료바이오-스포츠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스포츠융복합 예비창업자 발굴 및 실전창업교육
  * 스포츠융복합 기업 지원 사업(마케팅, 인증, 특허, 수출, 시제품제작 등)
  * 해외박람회 전시 및 참관, 부트캠프를 통한 신시장개척
  * 스포츠융복합 기업 투자 확대
- 바이오 이업종 콜라보 지원

* 바이오 동종기업간 협업 지원 및 타 주력산업분야(무선통신, 로봇지능화, 화학소재 등)와의 이업종 콜라보레이션지원(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마케팅지원)

동종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창출 사례	이업종 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창출 사례
(바이오)+(바이오) 협업으로 신규 아이템 발굴	(바이오)+(무선통신)+(전문제조업)+(전문 마케팅 기업) 협업으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원도심 혁신도시 연계 '대전 드림 스타트업 밸리' 조성

▌배경 및 필요성

- 혁신도시 지정을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할 계기가 마련되었음. 대전의 강점인 지식재산 등 미래 혁신 성장을 지원할 산업군을 중심으로 특화된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
- 전국적 접근성이 우수하나 현재 낙후된 도시인프라로 인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전 드림(Dream)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

▌주요 내용

① (「대전 드림 스타트업 밸리」 조성)

-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원도심 혁신도시(국토부) 사업을 연계한 원도심 '제2 스타트업 파크'를 지식서비스 특화 단지로 조성
- 스타트업허브, 네트워킹 공간, 문화시설 개선, 컨벤션 기능, 기업입주 및 주거시설 보완

② (지식서비스 광역거점 조성)

-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연계하여 대전이 특화한 지식재산서비스를 비롯, 미래 혁신성장을 추동할 지식서비스산업군을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광역거점을 조성
- 지식서비스 기업/기관입주, 지원, 금융연계 등 원스톱 지원사업 추진

▸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식서비스 관련 기관 유치
: 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 **데이터-AI 기반 4차산업혁명 혁신플랫폼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의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플랫폼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혁신시스템을 고도화
- AI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공동연구 기능과 연구성과 사업화 관련 지식 데이터 구축과 허브 기능 등 출연연구기관 집적 연구단지의 새로운 성장 모형 기획 필요

▌주요 내용

- **AI 융합 클러스터 구축**: AI 인력교육 허브기능(KAIST) + 데이터(KISDI) + 출연연 AI 관련 융복합 공동연구 거점 구축
- **데이터 전주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생성과 수집 플랫폼 구축 (도시데이터, 연구개발데이터, (시민)마이데이터)과 데이터 가공/활용 지원
- 중장기적으로 연구데이터와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된 지식구축과 허브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연구개발 데이터 허브'로 성장

※ 핀란드 '오타니에미' 클러스터 사례
- 오타니에미 클러스터는 VTT 등 핀란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글로벌 IT기업, 대학 등이 집적되어 핀란드 R&D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 혁신클러스터
- IT를 중심으로 디자인+경영+공학 간 융복합 연구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비
- 기술사업화 관련 지식데이터 플랫폼으로 기능, 공공기관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테스트, 프로토타입 제작, 시장연구와 결합, 사업화 단계까지 고부가화

□ **'공동체 기반 포용도시' 정책목표 핵심 정책과제**

○ **「시민참여형 건강재단」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계층 간 건강격차 심화 및 신종 감염병 등 건강위협요인의 증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균형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

-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공하는 조직체와 보건의료기관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연계와 협력 체계가 중요

▌주요 내용

- (전문적 시민건강 거버넌스) 대전의 건강문제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전문적 인프라 구축과 광역단위의 협력적 지원 체계 및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대전시민 건강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 자원 간 네트워크, 건강 빅데이터 구축, 건강 콘텐츠 개발 및 공유, 대전의 건강 브랜드 특화 시민참여 사업 추진 (예,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사업 등)
- (「대전시민재난대응지원단」 설치·운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수립, 신종 재출현감염병 대응강화,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시장직속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대전시민재난대응지원단」을 시장직속 거버넌스로 추진

○ 「집찾사: 장애인 주택 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가구 구성의 변화와 연령분포의 변화에 비추어 점차 장애인 1인 가구 증가가 예상되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가구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검토가 필요

※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의 동거가구 구성은 친족 가구가 79.1%로 가장 많지만 1인 가구 또한 19.2%로 상당 비율 차지

▌주요 내용

- 주요 대상 : 대전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

*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 장애인 주택 :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가능한 주택 제공
- 장애인 주택 수요와 공급 현황을 위한 수요조사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 법·제도·행정적 운영 여건 및 실태 분석
*공급 가능한 지원주택의 규모와 장애인 수요를 위한 현황조사

- 지원주택 공급 계획 수립 및 목표 물량 확보

*공급 가능 주택의 규모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공급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주택 선정자 혹은 일반주택 거주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거 관련 지원(주택알선, 주택서비스 신청), 생활지원(가사, 식사, 금전 관리 등 지원), 관계지원(심리상담, 자조모임 연계 등), 안전 지원(긴급상황, 인권침해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인 독립생활 도모

○「대전 가족행복재단」설립

▌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와 대전에 거주하는 글로벌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거점 지원기관과 공간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

▌주요 내용

- 대전 성평등 지원 센터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능, 여성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네트워크간 교류 강화, 예술·문화·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공간 기능 수행

- 청년 여성 글로벌 컨텍트 센터

* 글로벌 (다문화) 청년 여성이 대전에서 활동, 교류, 역량강화 할 수 있는 조직, 공간, 인프라 제공

※ 청년여성 글로벌 컨택센터 기능

공유공간: 일자리, 취미, 교육 등 다양한 소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교육공간: 다양한 청년여성 이슈와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기획 및 사업

도시공간팀: 대전이라는 도시를 청년여성이 활용하는 법

문화축제팀: 지금 청년의 문화와 축제를 청년여성이 대전에서 상상하고 기획하기

정책발굴: 청년여성 스스로가 정책 발굴, 지역 여성 일자리, 직장내 성희롱 방지 정책, 청소년 청년여성 노동권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청년 후견인 정책

글로벌 네트워크 : 국내외 청년여성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캡이어 프로그램 :대전에 정착하는 청년여성 대상, 장기적 생애기획과 비전을 계획할 수 있는 3~6개월 가량의 기간 보장

o 대전 어린이 행복지원센터:

- 대전 지역 어린이 복지와 성장 관련 정책연구와 심리상담 지원, 장애어린이 보호지원체계, 부모 교육 등의 기능 수행

□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도시' 정책영역 핵심 정책과제

○ 도안 미래 과학문화 융합클러스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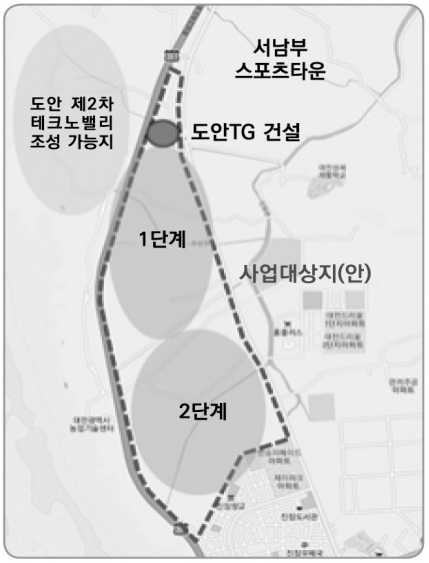
▮배경 및 필요성

- 도안은 북측으로 세종시 남측으로 논산·전북으로 이어지는 대전의 미래 발전축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시 내부지역 중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대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공간임
- 대전의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지향적 과학문화 융합클러스터로서 구상이 필요

▮주요 내용

- 도안지역 개발구상에서 고려할 점은, 북측 대덕특구의 과학적 기능(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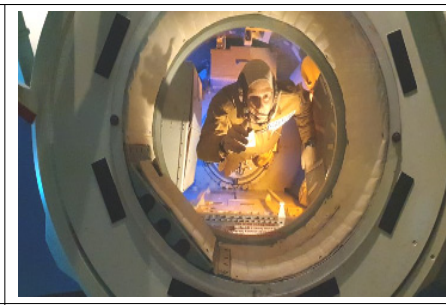
산업혁명 연계기능), 도심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도심적 기능, 주변 도시(계룡 등)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등임



- 이러한 다양한 기능 및 입지적 역할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과학-문화-예술이 융합한 과학문화 융합클러스터 조성
- 「4차산업혁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첨단 연구개발, 딥테크 기업집적, 인큐베이팅, 산학연연계 등을 위한 연구개발중심형 집적단지 조성

* 대규모 연구단지는 도안 2·3단계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

- 「Science Art Space」 조성: 과학, 우주, 기술, 문화, 예술 등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NASA 한국 박물관, 대덕연구단지의 역사와 성과물 전시하는 과학도시 전시관 등 운영

	
스페인 예술과학단지	미 휴스턴 우주과학박물관

- 도안 신도시 및 신규개발지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북측에 도안TG를 신설하여 도안 신도시 및 도안 미래과학 융복합클러스터, 학하, 용계지구 등의 교통 수요 해결

○ **삶을 치유하는 「문화예술 보건소」 조성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적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대전에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대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인 '꿈꾸는 예술터'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확충은 부진

▌주요 내용

-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치료 기능을 수행할 「문화예술 보건소」 조성사업
-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전형 아난딸로* 조성 :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모델 구축





*핀란드 헬싱키 아난딸로 (Annantalo)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1886년 세워진 폐교를 활용

- 예술치유공간 "예술보건소" 조성 : 유휴시설을 대전 예술치유센터 "대전 예술보건소"로 재생.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및 육성, 예술치유 콘텐츠 확산, 시민문화예술 향유 등 예술치유 및 시민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

○ **「밀토피아(밀가루 체험파크)」 조성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이 중부권 관광 허브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

- 국내여행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음식 관광(즉, 식도락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높다는 것임(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2020). 대전시는 식도락 여행지 하위권(56.3점, 17개 광역시 중 14위)으로, 대전의 먹거리로 빵(1위)과 칼국수(2위)가 우선순위로 뽑힘(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2020.3.4.)

▌주요 내용

- (가칭)「밀토피아」 조성 : 대전의 음식 자원 특징으로 거론되는 빵이나 칼국수 등의 공통점을 관광 자원화한 밀가루 테마파크 조성

	
Mill City Museum,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도톤보리 코나몬, 일본 오사카

- 교육 공간: 밀가루를 활용한 직업(예: 제빵원, 제과원, 피자조리사 등) 체험(사례: 세계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
- 체험 공간: 밀가루 캐릭터와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빵/칼국수), 촉감 놀이교실, 밀가루 던지기 등
- 전시/관람 공간: 밀가루 활용한 음식 생산공정 견학, 밀가루아트 공연
- 음식 공간: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 판매(푸드코트), 전국 유명 빵집과 칼국수 가게를 활용한 음식 판매 (밀가루 음식 편집샵)

○ 대전형「스포츠랩」조성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의 현재 스포츠 관련 상황(예: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인력 양성

및 관리 부족, DB 구축 결여)을 고려하였을 때 중심이 되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

- 지역의 체계적 스포츠 시스템 관리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자원과 결합, 스포츠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획, 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

▮주요 내용

- AR/VR 적용 경기시설 조성: 스포츠 산업에 4차산업 혁명 기술 성과를 결합하여 스마트 스포츠 활동 및 관람 인프라 기획과 적용
-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 산업 분야 구성원 교육,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지도자/선수 발굴·육성: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DB 구축·관리: 대전시 스포츠 현황 파악, 정확한 진단 분석 등
-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개발(예: 뉴스포츠[New Sports][2] 국제 대회), 국제교류 활성화, 지역 내 프로스포츠 활성화
- 연구: 대전시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을 통한 연구 지원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정책영역 핵심 정책과제

○ 대전 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는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를 중심으로 총 346.15 km에 달하는 116개의 하천이 주요 환경 자원임. 도시의 매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대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하천의 재평가 및 관리방안이 필요함

2) 올림픽 또는 국제경기의 메이저 스포츠(예: 축구, 야구 등)가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를 대표하는 용어로(에이블뉴스, 2014.9.26.), 기존의 대중적 스포츠 종목을 결합 또는 변형시켜 행하는 새로운 스포츠(예: 미니골프, 플라잉디스크, 스피드민턴, 족구, 풋살 등)를 의미함

▌주요 내용

- (공간별 하천관리 체계 구축과 환경개선)

  * 생태계, 시민들의 동선, 일반현황 등을 고려, 활동하는 도심하천, 함께하는 행복하천, 배려하는 생태하천의 3가지 공간분리와 관리체계 구축

* 도심 불투수층 감소를 통한 투수능력 확보, 중수도 및 하수처리장 유출수 이용 등을 통한 하천수량 확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불명오염원의 모니터링 및 제거, 합류식하수관거의 월류수 제어, 도로 오염물질의 유출 제어, 갑천가동보 등 하천 지장물의 관리방안 개선

- (활동하는 도심하천 공간)

  * 활동하는 도심하천 공간: 시민들의 활동시설로 캠핑장, 수상무대, 자연학습장, 마라톤코스, 물놀이장, 친수계단, 세월교 등의 도입
  * 함께하는 행복하천 공간: 산책로, 관찰데크 등의 소극적 하천활동을 하며 생태계를 보호 및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하천공간의 마련
  * 배려하는 생태하천 공간: 보호받아야 하는 생태계를 배려하는 생태하천 공간, 감돌고기, 미호종개, 수달, 맹꽁이 등과 같이 보호종이 서식하는 하천공간의 접근 최소화 및 서식환경 마련

- (3대 하천 Waterfront 생태개발) 3대하천 상류구간은 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보존하고 하류 및 도심 통과구간에 대해 레저문화 공간 개발

  * 대덕구 대전산단 하천변 (약 8만m2) 둔치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설정하여 레저스포츠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개발

○ 시민참여형 스마트 생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배경 및 필요성

- 해외 주요 도시들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 추구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음
- 스마트 기술을 적용, 시민들이 참여하여 생활환경 개선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의 비전을 실현

▌주요 내용

- 스마트 폐기물 순환 프로젝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확대, 자원순환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대 및 신기술 적용
- 재활용품 공유 및 재사용 기반구축: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나눔장터, 재활용품 공방, 상설 플리마켓 등 확대와 앱을 통한 실시간 재활용(사용)품 정보제공
- 악취없는 상쾌한 대전 프로젝트: 악취 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적 악취개선대책을 추진, 악취영향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개선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시민대표, 관련부서, 사업장(대표) 등으로 구성 악취저감 방안 모색

○「24시간 시민안심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기준 대전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범죄, 화재, 자살, 생활안전에서 4등급을 받아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범죄의 경우는 야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LED조명 및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여 야간환경 개선 필요

▌주요 내용

- 무선 CCTV기반 지능형 야간도로 안전지원 서비스 : 신규 가로등 및 CCTV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 5G기반의 지능형 CCTV를 기존 도로변 기구물에 설치하여 야간의 도로 보행자 안전 확보 지원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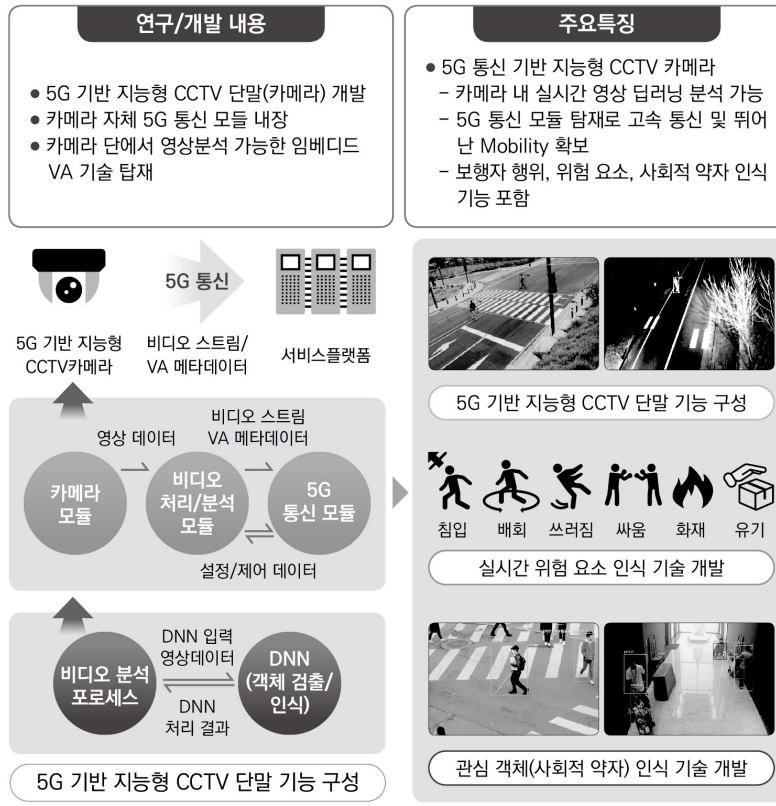
* 5G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주변의 보행자, 차량 및 환경센서 기반 상황감시
* 모바일 엣지구간에서 지능형 CCTV를 통한 야간도로의 안전을 위한 지원서비스
* 무단횡단 보행: 무단횡단 보행자를 실시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시인성 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 표시, 차로 바닥에 무단횡단 보행자 위험 알림, 주변 사이니지를 통해 전방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 알림

* 사회적 약자의 횡단 보행 : 보행자 숫자, 보행자 속성을 인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 확보를 위한 정보 표시 제공
* 지능형 CCTV를 통한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대처 : 영상 및 센서기반 특정 객체 출현 및 위험 상황감시, 위험 상황인지 시 관제모니터에 위험상황 정보제공, 위험 상황인지에 따른 5대 연계서비스 이벤트 제공

- 서비스 주요설비

* 시티 센서 : 이동형 5G 지능형 CCTV : 지능형 CCTV, 지능형 환경 정보 센서, 스마트횡단보도(그림자 표시기), 사이니지
* 네트워크 인프라 : 5G기반 대용량/저지연 전송 및 제어 기술
* 지능형 분석 기술 : 관심객체인식, 상황분석, 주변 환경정보 분석, 보행자 속성인식
* 무선 CCTV 연동 야간 도로 안전 서비스 제어 : 위험상황 인지, 상황에 따른 조치명령 및 위험알림 재현장치 표출, 위험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처를 위한 자동 연계서비스



☐ 부문별 정책아젠다와 정책과제_종합

[표 3-5] 민선 7기 후반기 분야별 주요 정책아젠다와 정책과제

분야	정책 아젠다	정책 과제
경제 산업 혁신	창업벤처 육성	'스타트업 2020' 창업벤처 육성
	혁신도시 연계 발전	혁신도시 연계 '제2 대덕밸리' 조성
	초광역 산업거점기능 확충	「초광역 슈퍼 사이언스 대세밸리」 조성
	4차산업혁명특별시 도약 추진	'디지털트윈 시티' 대전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산업 육성	'의료바이오 메카' 조성
도시 공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대전국제과학도시」 건설
	대전시의 광역적 접근성 강화	'교통허브 대전' 르네상스 사업
	대전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거점 선정 및 구상	「도안 미래 과학·문화융합도시」 조성
	대전시 관광활성화를 유인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발굴	「대청호국립공원」 지정
교통	트램도시 대전 완성	「트램도시 대전」 네트웍망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교통 허브센터」 조성
		「승용차만 쏙~ 스마트 교통관리」
		「자율주행 POD 셔틀」 사업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재난상황 신속대응」 방재도로망 구축
		「안전은 높게 속도는 낮게」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보건·복지	감염병 및 재난심리지원 등 예방적 건강권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심 대전」추진
	지역사회 건강보장 확대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시민 참여형 건강재단 설립」추진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	「대전형 찾복(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0+세대 내돌(내가 돌봄) 사업」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Right Now(바로바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	「집찾사 : 장애인 주택 지원 사업」 추진
여성 가족	다양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대전 성평등 지원 플랫폼 조성
	일상이 평화로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과학기술 플러스 여성안전 모니터링 센터 설립

분야	정책 아젠다	정책 과제
	청년여성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 환경 조성	청년 여성 글로벌 컨택트 센터 조성
	가족 너머 가족정책, 가구정책으로 전환!	대전 재생산센터 설립
	아동정책 강화	「대전 어린이 행복재단」 설립
공동체	인권존중 주권행사 공동체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공동체 완성
		3·8민주의거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학생인권조례 제정
	평등지향 공동체	따밥(따뜻한 밥) 공동체
		보편적 아동복지정책 확대
	신뢰·배려·공존 공동체	다문화공동체 축제 개최
시민 자치	시민주권도시 구현	자치제의 기본적 제도 마련: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제정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촉진을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 추진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구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전시-연구개발특구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인프라 활용 방안
		대전시-자운대 간 협력체계 강화
문화·예술	마음껏 창작하고 풍성히 활동하는 문화 예술 창작 도시 대전 만들기	삶을 치유하는 '문화 예술 보건소'
	다함께 누리고 일상이 즐거운 문화향유 도시 대전 만들기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우아한 도서관
	근현대 지식문화와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융복합도시 대전 만들기	대전의 특색을 정립하는 '대전학연구센터' 운영
		공동체가 만드는 독립 문화 활성화
	미래지향적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대전 만들기	정책별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대전문화영향평가'
관광·체육	관광: 장소매력 증대를 통해 중부권 허브 관광목적지로 도약하자	「밀가루 테마파크」 조성
		「대전관광 FanEx 12선」 사업
		「대전형 굿즈랩」 조성
		「명예의 (대)전당」 조성
		「폐(유휴)공간 체험관광자원화」 사업
		「갑천변 교통관광자원화」 사업
		관광 분야 광역과제:「충청권 관광 연합」 구성

분야	정책 아젠다	정책 과제
	체육: 과학도시 기반을 통해 대전형 스포츠 선도모델을 구축하자	「대전형 스포츠랩」 조성
		체육 분야 광역과제:「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 개최
환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대전을 만들자	먼지 먹는 하마 플랜 확대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
	살고 싶은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자	주민친화형 맑은물재생센터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악취환경 개선으로 상쾌한 대전 만들기
		촉촉한 친환경 물순환선도도시의 조성
		자연 속 생태도시 만들기
		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자원이 순환하는 스마트환경을 (폐기물 유출 제로 도시를) 만들자	스마트 폐기물 순환 프로젝트 완성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 도시의 조성
안전	선제적 예방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24시간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고밀도 도시공간의 화재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방헬기 도입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키는 시민안전 교육거점기관 도입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다운 ICT 접목의 스마트안전 관리체계 구축	도심지 침수 대응 시민안전 서비스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G 드론기반 화재현장 지원 및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
	안전행정 제고를 위한 거점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난협력체계 구축
		시민안전 공간조성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시민지원센터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사업 도입
		시민의 안전과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대전광역시 안전통합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대전의 분야별 미래상 목표와 추진체계

1. 2030 분야별 대전의 미래상
2. 민선 7기 후반기 미래대전 추진 거버넌스

4장

4장 대전의 분야별 미래상 목표와 추진체계

1. 2030 분야별 대전의 미래상

☐ 경제·산업·혁신 부문



대한민국 혁신플랫폼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2030년 창업기업수 (제조업기준) 3,500개 사 달성(개)	2,400개	3,045개	3,488개
신생기업 5년 생존율 30% 이상 달성(%)	26.5%	29.4%	31.1%
벤처 캐피털 신규투자 5,000억원 달성(억원)	1,827억원	3,846억원	5,000억원
기술료 징수액 1,2000억원 달성(억원)	731어원	991어원	1,180어원



일자리 걱정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고용률 65% 달성(%)	58.6%	62.5%	64.9%
청년실업률 2% 감축(%)	9.0%	7.7%	7.0%
1인당 GRDP 43,000 달러 달성($)	24,430$	35,301$	43,564$

☐ 도시공간 부문



골고루 잘 사는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도시재생사업 추진(개소)	5개	15개	30개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호)	10,230호	15,000호	20,000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확대(개소)	-	15개	30개

☐ 교통 부문



대중교통으로 대전도심에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대중교통분담률 33% 달성(%)	25.35%	30.30%	33.0%



이용자가 즐겁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자전거 분담률 6% 달성(%)	2.39%	4.0%	6.0%
버스이용객 중 노인이용객 비율(%)	1.6%	5.0%	10.0%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85명	32명	25명

☐ 복지·여성 부문



감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 공공의료체계로 감염병 걱정없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공공산후조리 지원율	당해연도 출생아수 ×30%	당해연도 출생아수 ×35%	당해연도 출생아수 ×40%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당해연도 출생아수 ×30%	당해연도 출생아수 ×35%	당해연도 출생아수 ×40%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계층별, 수요별로 돌봄서비스 정착시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용자수(명)	1,525명	1,560명	1,580명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명)	700명	1,100명	1,300명



여성의 안전한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여성고용률 65% 달성	49.9%	57.0%	65.0%
여성관리직 비율 25% 달성	11.8%	17.0%	25.0%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60%로 감소	89.5%	70.0%	60.0%

☐ 공동체 부문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빈집, 유휴공유재산등을 활용한 시민공유공간 200개소 확충 (개)	-	100개소	200개소
마을의제 및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리빙랩	-	10개	20개
사회적경제 기업전용 투자펀드 300억원 조성	-	100억원	300억원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350개 확충	100개	200개	350개

☐ 문화예술·관광체육 부문

시민 누구나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인구 심만명 당 문화시설수(개)	3.66개	4.72개	5.54개
인구 천명 당 문화 기반시설	0.03개 (전국0.07개)	0.07개	0.1개
인구 만명 당 생활문화 시설	1.7개	2.0개	2.5개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대전 방문 외래 관광객 수 (명)	226,708명	250,000명	300,000명
내국인 관광객 수 (명, 숙박+당일여행)	3,552,490명	4,000,000명	4,500,000명
공공스포츠 시설 (m2/15세이상 시민)	1.72개	2.0개	2.3개

☐ 환경 부문

맑은 물과 공기, 풍부한 녹지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미세먼지 농도	PM 2.5 21㎍/m3	PM 2.5 16㎍/m3	PM 2.5 15㎍/m3
하천관리(갑천말단 수질)	2.9㎎/L	2.6㎎/L	2.0㎎/L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 17.5m2	1인당 공원면적 18.5m2	1인당 공원면적 19.0m2

자원이 순환되는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율	65.%	75.%	80.0%

☐ 안전 부문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확충을 통해 안심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도시침수 대응) 노후관의 교체 및 보수	26.0%	50.0%	75.0%
(사회재난 대응)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율	79.1%	85.0%	90.0%
(자살예방) 자살률	22.5%	20.0%	17.0%
(지진대응)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5.7%	70.2%	80.0%



디지털 트윈 (가상) 기술을 통한 사전위험관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구 분	2019	2025	2030
재난영상감시장치 확대구축	126개소	322개소	420개소

2. 민선 7기 후반기 미래 대전 추진 거버넌스

□ 미래 대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3대 방향성

○ 시민주권 도시 구현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과 시민주권 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대전시 민선 7기 정책기조인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위해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와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정부 구현

○ 문제해결형(솔루션 지향형) 정책역량 강화

- 도시문제가 과거의 칸막이형 정책 실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적 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정책부서 간 협력, 조정,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부서 간 협력에 의한 문제해결형 융복합 정책 활동 역량 강화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내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대전지역은 국가 및 중앙의 다양한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은 대전시의 지역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새로운 공공기관의 유치도 계획되어 있음.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전에 입지하고 있거나 향후 이주할 주요 공공기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시민주권 도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치제의 기본적 제도 마련: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제정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자치기본조례
■ 자치기본조례는 분권사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 장 및 그 직원의 책무, 의회의 책무, 주민참여의 방법을 규정 ■ 자치기본조례의 지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체계에서 최정점에 해당하는 최고법규로 다른 일반조례보다 우위에 있으며, 다른 조례나 규칙 등의 입법지침, 해석지침이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정책테마별 급속 제정의 형태로만 존재하여 자치기본조례 취지에 맞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체계정당성이나 실표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
- 따라서 대전시 민선7기 정책기조인'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헌장에 해당하는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주권 대전시를 구현하는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 내용

- 집행부와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기본조례 제정
- 자치기본조례의 입안 시 가치원칙, 기능원칙, Governance원칙 하에 입안하며, 그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음
  - 총칙은 자치단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이를 위한 원칙 혹은 이념, 각각의 주체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규정
  - 정보공개와 공유 및 능동적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자치기본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행내용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각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시민주권도시를 선도하는 대전시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주민의 새로운 권리의 보장으로서, '미을만들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보장이 가능
- 주민·의회·집행부의 역할과 권리 및 책무의 명확화와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활성화에도 기여

○ **주민참여예산제 촉진을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조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14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pp. 3~6)
-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협의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 내용

- 지원협의회는 연구회 성격의 기능과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데, 이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제규정에 대한 제·개 정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교육·참여예산제 홍보·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운영 방안

구성 및 운영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15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음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둠.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자치분권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음
기능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③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④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⑤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⑥ 그 밖의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임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함

▮ 기대효과

-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제고와 대전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대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

○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제도화되어 있는 공청회, 공람·공고 등 소극적 참여에 불과함
- 최근 제도적 주민참여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이나 수원 등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형 도시계획 쇄신적 기법과 자립적 기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참여방법 등 다양한 비제도적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시도시발전 종합계획 등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도시발전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알기 쉽고 편리한 도시계획 정보 제공: 알기 쉬운 도시정보 제공 및 이벤트 개최, 인터넷 휴대용기기 등을 활용한 쌍방향 의사소통체계구축
- 내실 있는 공론화 과정 운영: 시민과의 접촉기회 확대 및 참여시기의 조기화,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참여유도 및 의견 청취,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한 주민협의회 등 대표자그룹 형성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전문가 역할 강화: 시민참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성공사례 발굴,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도시계획 지원센터 설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공계획가'제도 도입 운영
-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공청회 이원화 운영, 법정계획 심의시 '시민참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민참여 과정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 **기대효과**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발전계획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참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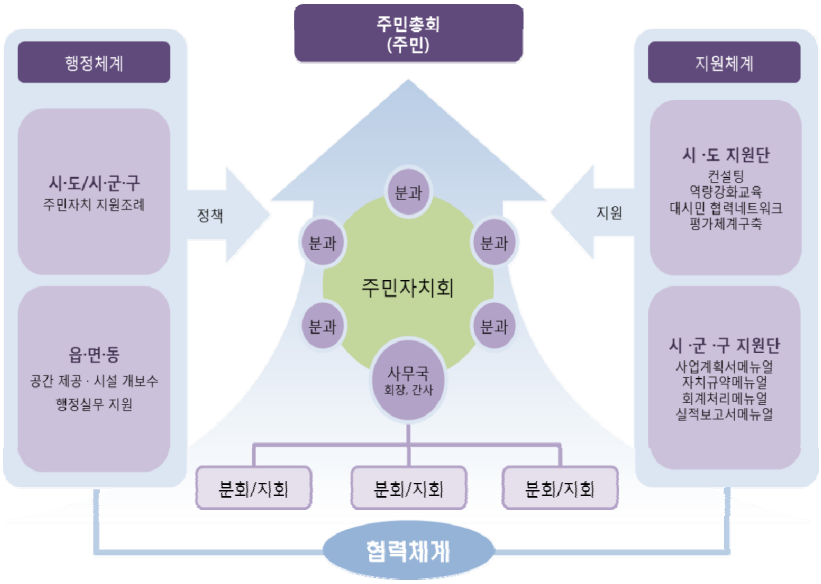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은 2010년 9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인 주민자치회 제도의 설치와 운영은 본격화 전망
- 동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가칭)'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 '주민자치회 지원단' 운영 : 지원단 구성은 지방정부의 주무부서 공무원, 지방의원,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기업인 대표까지 포괄
-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주민자치회가 역량제고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주민차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자 및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그림 4-1]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 모형

☐ 문제해결형 정책역량 강화

○ 솔루션 중심형 정책거버넌스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산업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창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부문의 정책추진 전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그 파급효과 또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정책참여자의 지원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어려워 결국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반영하여 정책화하고 성공적인 정책추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및 평가하는 시정운영 방식인 민관정책협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치는 서울특별시의 운영사례가 가장 대표적인데, 서울시는 2018

년부터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2019년에 폐지)’에 근거하여 “서울협치협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서울의 많은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민관협치체를 운영하고 있음

- 민관협의체는 행정과 민간의 대표적인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공공서비스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심의하고 갈등요소들을 함께 숙의하는 기본적인 논의구조로, 기존에 단순히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로 끝나는 연례적인 회의여서는 안되고, 여러 정책자문회의 이상의 기능을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정책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5조 숙의민주주의제도 추진위원회 및 제14조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민관협치 관련 규정에 대한 일원화 또는 통합화 추진
- 민관협치 관련 자치법규의 일원화 또는 통합화를 통한 ‘(가칭)대전민관협치협의회’를 운영함
- 동 협의회는 시의 민관협치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동 협의회의 기능은 자치법규 상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들을 검토·조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동 협의회의 참여주체는 지방정부, 대학(중소기업에 과학기술 및 경영인력을 제고, 지역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적 지식과 정보교류), 국공립연구기관, 첨단산업기업, 민간단체·전문가 단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임

○ **정책지식생태계 구축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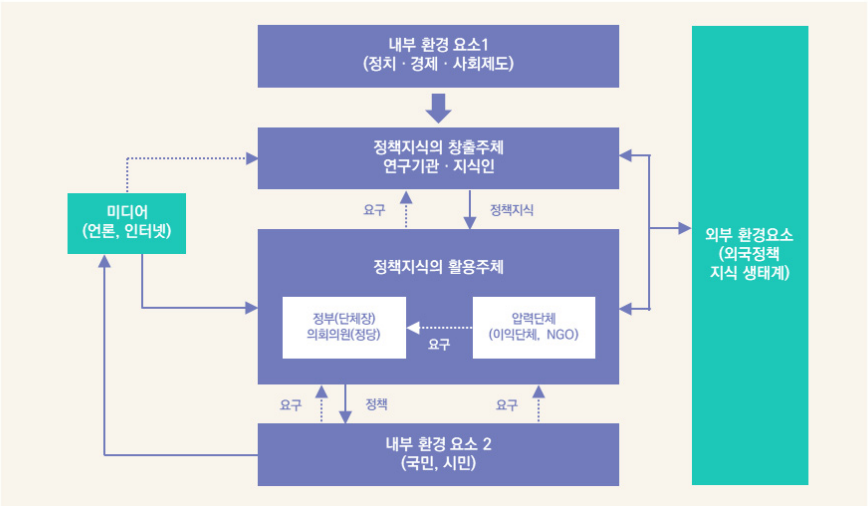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은 날로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목도했듯이 분야간 경계를 뛰어넘는 복합적 정책 사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음
- 19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책지식의 공급과 수요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학문적·분야별 경계를 뛰어넘는 다층적 사안들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정책지식 수요가 증가하였음
-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각인과 기존 정책지식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세계적으로는 OECD, IMF,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선진 정책지식' 공급이 부활하는 가운데 맥캔지, 보스턴 등과 같은 글로벌컨설팅 업체가 국내의 정책지식 시장에 파고들기 시작했음
-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정책지식 환경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째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의 정책연구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정책지식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동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폭넓은 토론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대응방법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미래연구를 정책지식의 생성 과정에 적극 도입하고 국가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이와 같이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지식이 언제든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장에 스며들게끔 하기위한 세밀한 유통전략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구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유기적인 공조체계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함
-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지역의 정책지식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가칭)대전정책지식생태계 구축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정책지식생태계의 개념

- 정책지식생태계는 정책지식의 창출과 활용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고 이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지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정책지식을 둘러싼 주체들의 관계를 일종의 생태계로 파악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지역의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생산주체, 소비주체, 미디어, 환경요소임



[그림 4-2] 지역정책지식생태계 개념도

▮ 추진 내용

- 대전정책지식생태계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운영근거 마련
- 대전정책지식생태계의 환경요소(제도, 시민)의 정책욕구 파악 및 분석
- 정책지식 행위주체간의 네트워크구축으로, 정책지식생태계 내에서의 행위주체는 정책지식의 생산주체와 소비주체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에는

정책지식을 만들어내는 조직과 개인(연구기관과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지식인들이 포함), 후자에는 정책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NGO나 압력단체도 정책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정책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소비주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내에서의 정책지식생태계 유통주체에 대한 현황 분석인데, 지역의 정책지식생태계의 유통주체로서 미디어는 지역 언론 및 인터넷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시민의 요구를 생산주체와 소비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언론은 정책지식생태계에서 정책지식을 발굴,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중재하며 정책지식을 검증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매개자, 중재자, 검증자의 역할을 함)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상생협력 거버넌

▮ 배경 및 필요성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전에 입지한 중요한 혁신자원의 하나이지만 대전 지역과의 협력체계는 미흡. 현재 대전-대덕 상생협력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연계체제는 미흡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자원과 창출된 기술적 지식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와의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 내용

- 대전과학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전과학산업진흥원(가칭) 의 기능: 대전 지역의 수요와 자원에 기반한 정책기획 및 대덕특구 내 출연연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대형 국책 R&D 사업 기획, 지역 기업과 출연연과의 매개역할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

[표 4-1]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주요 업무

기능	주요 업무
정책기획	대형 국책사업기획, 산학연 연계정책, 출연연 협력사업 발굴, 지역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 통한 상시적 기획기능
평가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 R&D 사업 평가분석,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지원	지역 강소·벤처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
특구지원	특구 내 클러스터 육성, 과학기술인 지원, 과학문화 진작

○ 대전시-자운대 간 협력 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적은 규모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자운대의 지역적 특정으로 인해 대전시는 군사안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음

자운대
■ 자운대는 유성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주둔지 내에 있는 1개 사령부와 4개 학교기관, 국군대전병원 등을 통칭
■ 자운대는 국방부 직속부대이며 계룡대, 상무대, 기타 잡다한 육직부대들 등과 함께 대표적인 후방 기행부대(기술행정부대의 준말) 중 하나임. 자운대 지역은 각급 부대 장병과 후반기 특기병 교육생 등 1만여 명이 상주하고, 교육·연구·행정·전투지원·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넓은 지역에 분포

- 자운대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접근할 수 없는 경계와 통제구역이 아니라, 민·관·군이 협력하여 지역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제도적 기반 마련: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하여 운영. 가칭'대전광역시 국방안보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정책협의회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전담 조직 설치: 대전광역시 비상대비과 내 가칭'민군협력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대전광역시 비상대비과는 자운대(근무지원단)을 기점(허브)으로 삼아 협력체계를 공고히 운영
- 협력 프로그램 운영:
  ① 대전지역 민·관·군 교류·협력기회의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두보 확충
  ② 2019년 처음 개최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등 군문화 축제 확대
  ③ 대전시와 자운대 간 행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를 활성화
  ④ 지역주민의 위해 자운대가 보유한 편의시설을 적극 개방
  ⑤ 유성구와 자운대 간의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

DSI

민선 7기 후반기 미래도시 대전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II. 부 문 편

DSI

경제·산업·과학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경제산업과학부문 정책 아젠다
3. 경제산업과학부문 정책과제

5장

5장 경제·산업·과학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등 소셜벤처 육성 기반 강화

- 원도심 창조경제센터 소셜벤처육성실에 이은 구충남도청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구축으로 소셜벤처 육성 기반 강화. 신규 이전한 대전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Post BI 연계 가능

▮ 민선 7기 스타트업 2000개 공약 추진 및 스타트업파크 조성

- 궁동지구 스타트업파크(D-Bridge) 조성기본계획 수립 및 우선조성대상 선정. 충남대 TIPS타운 완공후 연계 가능성 증가. 관련 대학(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등)과 연구기관, 투자자, 금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안산 첨단 국방산단 조성

- 2019.6. KDI예타통과, 안산동 외삼동 일원 122만평방미터 규모 산업단지 조성. 투자선도지구 지정 완료 및 2021년 보상 및 공사 착수
- 세종시와의 연담화를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 수행
- 정부 추진 국방벤처진흥원/국방산업기획평가원 사업과 연계 가능성 증가

▮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및 D-STEP설립

- 기존 대덕문화센터 대체 부지 매입(한스코 기술연구소 부지 7만평방미터) 및 리모델링 추진
- 기업수요 맞춤형 R&D,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공간, D-STEP설립 및 입주

▮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조성 및 첨단산업육성

-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챌린지 2단계 사업 선정
- 의료바이오산업 규제완화특구 지정 및 둔곡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의료바이오 산업육성 기반 마련

- 유전자의약산업진흥센터 국비 예타 신청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활성화 및 소셜벤처특구 지정

- 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소셜벤처 육성 기능 확충 및 기반 확대 필요
-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소셜벤처 창업 활설화 도모

▮ 국가혁신클러스터/원도심 혁신도시 연계 소셜벤처 스타트업파크 조성

- 벤처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 유치 촉진 및 투자클럽 활성화
- 소설벤처 창업과 연계한 입지/자금/인력 공급체계 구축
- 소셜벤처 성장에 따른 제반 기반 조성 필요

▮ 초광역 거점 기능 확충

- 초광역내륙첨단산업권 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 대전세종 연접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간 연담화에 따른 연접지역 효과적 개발계획/ 인프라구축 계획 수립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국방부 신규사업 유치 및 광역 클러스터 조성

▮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TSP 구축

-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및 과학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능 활성화 도모
- 출연연/지자체 연계 활성화 사업 발굴 및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 구축
- R&D 신규사업 정책기획 및 네트워크 기능 활성화

[표 5-1] 민선 7기 경제/산업/과학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중앙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소셜벤처 육성 기능 확충 및 기반 확대 유망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소셜벤처 발굴에서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IP확보, 제품고도화 등), 입주공간 지원을 통해 소셜벤처 유치 및 창업 활성화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소셜벤처 육성 및 중기부 소셜벤처 특구 지정
스타트업파크 조성	궁동지역 제1스타트업파크 조성 정부사업 공모 우선대상 선정 대상지 조성 기반 확보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초기 민간투자기관 유치 TIPS타운과의 연계 강화 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원도심혁신도시(국토부)와 연계한 원도심 제2스타트업파크 조성
안산 첨단국방산업 단지 조성	시행사 선정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 국방산업 기업 유치 촉진 국방산업 활성화 기반 확충	초광역 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발굴 대전세종 연접지역 산업단지 신규 조성 국방벤처진흥원/국방산업 기획평가원 신설 유치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 센터 구축 대전과학산업 진흥원 설립	정책기획사업 신규발굴 활성화 출연연/지자체 연계 활성화 기획 지역내 과학기술산업 신규 기획 확대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TSP 구축 4차산업혁명 소재 개발 디딤돌 센터 구축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수소 안전성 평가 센터 설립 가정용 전력 3050 추진 동력 확보 친환경에너지 도입 시범도시 조성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 1-3단계(복지/환경/에너지/교통) AI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유전자 의약산업진흥 센터 건립	바이오유전자 산업육성 기술플랫폼 구축 국가 R&D 예타사업 유치 바이오 규제완화특구 조성	의료바이오 인력양성 혁신 플랫폼 구축 가속기 연계 의료바이오 기술플랫폼 구축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전략산업육성	5개 전략산업, 3개광역연계협력사업 및 국방산업육성 등	신융복합산업 육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2. 경제산업과학부문 정책 아젠다

▢ **(창업벤처 육성)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스타트업 2000개 창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 및 성과계양을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 필요**

- 기 계획된 5개 스타트업 파크 중 국가 공모 1개 지구(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궁동지구)와 대학 중심(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사업만 구체적 진행 중. 민선 7기 후반기에는 나머지 3개 스타트업 파크의 구체적 기획 필요
- 창업벤처의 지역내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Post BI 등 입주기반 조성,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 및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사업화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
- 구충남도청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 및 대전테크노파크 이전과 연계한 소셜벤처 육성 본격화
- 충남대 TIPS타운 개소에 따른 연계 발전 가능성 및 연계발전방안 마련

▢ **(혁신도시 연계 발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대전 혁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도시 연계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

- 원도심혁신도시(국토부) 지정과 연계한 원도심 기능강화 방안 마련. 혁신도시 유치 대상기관을 활용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 수립. 제2, 제3의 국가사업유치를 위한 기획(철도문화단지, 제2판교밸리 조성 등) 강화.
- 원도심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및 혁신도시 연계 관련기관 유치 강화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혁신벨트 단계별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

▢ **(초광역 산업거점기능 확충) 초광역 중심도시 회복을 위한 산업거점 기능 확충이 필요**

- 호남선 고속철도 등 전국 초고속교통망 확충, 세종시 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광역기능 약화에 대응한 초광역 거점기능

확충이 필요.

- 정부의 초광역 사업 확대 추진 정책에 대응(지역별 신성장계획의 초광역 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발굴, 내륙첨단산업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강호축 사업 발굴, 지역대학연계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등)
- 대전세종간 교통망(BRT, 세종역 신설, 지하철1호선 연장 등) 확충으로 인한 연담화에 대응하고 연계발전 방안 마련.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연접지역 발전 가능성 상승에 대응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계발전의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산업거점기능(연접지역 산업단지 조성, 국방산단내 국방벤처육성기관 유치 등) 확충이 필요

□ **(4차산업혁명특별시 도약 추진)**

- 4차산업혁명특별시 도약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추진이 필요
-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지역경제 연계를 위한 기술플랫폼(3D프린팅 소재개발 연계플랫폼, AI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등) 구축이 필요. 동시에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 기반의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이 필요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기술/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지역기술/사회문제해결형 TSP 구축 등) 구축이 필요

□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산업 육성) 규제자유구역 선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완료 등 지역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강화 중요**

-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개방형 혁신의 시대로 기업간 협업이 경쟁력 강화에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콜라보레이션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협업은 감소.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협업 강화를 통한 신산업의 창출 및 체질강화를 도모할 필요

3. 경제산업과학부문 정책과제

1) '스타트업 2020' 창업벤처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 기술기반 기업(창업)은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 연계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연계 부족으로 성과창출 미비

* 기술창업 기업은 전문성을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VC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 스킬 고도화 필요

▮ 창업벤처의 지역내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Post BI 등 입주기반 조성,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 필요

-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TIPS타운 사업 연계, 테크 플랫폼 구축
- TIPS타운사업 : 엔젤투자사, 엑셀러레이터, VC 등 민간운영사가 기술창업팀 선발, 1억내외 투자, 이후 정부가 기술개발자금 매칭 지원

▮ 민선 7기 전반기 구축된 창업 플랫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본격 시동

▢ **주요 내용**

▮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소셜벤처 육성 및 중기부 소셜벤처 특구 지정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소셜벤처 창업 기술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특구 지정)

- 4차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아이템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선별 지원

* 4차산업혁명분야

디지털 역량강화(5)	ICT제조업 융합(4)	신시장 창출(6)
AI· 빅데이터, 이동통신,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반도체, AR/VR	스마트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물류, 스마트 안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홈

자료 : 4차산업혁명 -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분야, 중기벤처부(2018)

** 사회문제해결 예시 : 성범죄 피해 디지털영상 확산방지를 위한 몰래카메라 탐지, 무인항공기 활용한 조기 녹조탐지, 재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치매 환자 위치정보 플랫폼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특구 지정(대전역~구도청 일원)

▮ 가젤 벤처 육성(고용 우수 벤처 근로환경 개선/ 급성장 벤처 지원)

- 고용우수 벤처기업지원: 기업규모별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단,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

기업규모 / 선정요건	5인 이상~10인 이하	10인이상~30인이하	30인이상~50인이하	50인이상~100인이하
전직원 고용유지율	80% 이상 (신청일로부터 1년동안 고용유지)			
대전청년 신규고용	1인~2인	3인~4인	5인~7인	8인~

▮ 벤처 마이스터 인증제 도입

- 대전 소재 벤처기업에 소송되어 10년 이상 재직중인 벤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전 벤처 마이스터' 자격 인증(박사 재직기간 5년, 석사 재직기간 7년, 학사 재직기간 10년)
- 벤처 마이스터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인에게 창업자금 지원
- 마이스터 인증자 보유 벤처기업에게 대전지역 지자체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의 특전 제공

▮ 발명에서 창업까지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창업 지원: 전문가 지원, 개방형 사무실 및 장비지원(open office) 지원(3년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 →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여 양산 최적화
- 투자연계 지원 (모태펀드 및 민간 투자자 협력), 발명진흥회와 협업으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등으로 투자자 모집 등

▮ TIPS타운 연계 테크 컨설팅

- TIPS과제 중 민간 운영사의 투자 심사 시 기술분야 투자 자문, TIPS 과제 선정 및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자문, 이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IP, 대학생 인턴, 관내 중소기업 멘토링 등), 지원

받은 기업들은 Tech Consulting의 포트폴리오 등록으로 해외진출(해외투자) 및 기술수요처 발굴 등 지속 지원

▢ **기대 효과**

▮ 지역내 기술창업 활성화(스타트업 2000개)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술창업과 성장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연계하는 선순환체계구축이 가능

2) 혁신도시 연계 '제2 대덕밸리'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역 중심 원도심 혁신도시와 연계한 벤처밸리 조성 필요

▮ 원도심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연계 기업 유치 전략 마련 필요

▮ 판교밸리를 벤치마킹한 제2의 IT창업기업 및 유관지원기관 집적지 조성이 필요

▢ **주요 내용**

▮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원도심혁신도시(국토부)와 연계한 원도심 제2스타트업파크 조성

-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계 기업 유치 대응 T/F 구성
- 원도심 제2 스타트업파크(소셜벤처스타트업 중심) 조성(소셜벤처 스타트업 허브, 네트워킹 공간, 문화시설 개선, 기업입주 및 주거시설 보완)

▮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연계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지식서비스 광역거점 조성)

- 혁신도시 유치 지식재산서비스기관 연계 기업 및 기관 발굴 및 유치 강화/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지원사업 추진

▢ **기대 효과**

▮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연계한 신규사업 유치 및 규제완화(건폐율/용적률 등) 가능성 확보

▮ 거점 공공기관 유치를 계기로 기업 유치 활성화

3) 'Heart of Korea'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초광역 중심도시 회복을 위한 산업거점 기능 확충이 필요

- 호남선 고속철도 등 전국 초고속교통망 확충, 세종시 태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광역기능 약화에 대응한 초광역 거점기능 확충이 필요.
- 정부의 초광역 사업 확대 추진 정책에 대응(지역별 신성장계획의 초광역 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발굴, 내륙첨단산업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강호축 사업 발굴, 지역대학연계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등)

▮ 대전세종간 교통망(BRT, 세종역 신설, 지하철1호선 연장 등) 확충으로 인한 연담화에 대응하고 연계발전 방안 마련.

-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연접지역 발전 가능성 상승에 대응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계발전의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산업거점기능(연접지역 산업단지 조성, 국방산단내 국방벤처육성기관 유치 등) 확충이 필요

▢ **주요 내용**

▮ 초광역 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발굴(내륙첨단산업권 연계협력사업 발굴/대전세종충남 지식서비스클러스터 조성)

- 대전-세종-충남의 광역 R&D-제조업-서비스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 대전세종 연접지역 산업단지 조성

- 대전세종 연접지역 산업단지 조성 가능지 분석 및 신규산업단지 조성

▮ 국방벤처진흥원/국방산업기획평가원 신설 유치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연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벤처진흥원/국방산업기획평가원 신설 및 유치 기획 추진
- 기관유치를 통해 안산산업단지를 국방산업 육성의 메카로 육성

▢ **기대 효과**

▮ 세방화 시대 국제간 경쟁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초광역 중심성 강화

▮ 대전세종간 연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난개발을 방지

▮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

4) '디지털트윈 시티' 대전

▢ **배경 및 필요성**

▮ 4차산업혁명특별시 도약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추진이 필요

▮ 대전시는 교통 안전, 여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정책을 시행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도구는 미비

▮ D-STEP설립에 따른 기능 활성화 및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경제간 연계 활성화 도약의 계기 마련

▢ **주요 내용**

▮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1단계: AI플랫폼 시범사업, 2단계: 복지/환경/에너지/교통 디지털 트윈, 3단계: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 AI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 AI기반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구축, AI매칭 후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격차를 줄일 수 있는 Gap 극복 개발지원

  * 수요조사·발굴, 유망기술 발굴, 수요-공급기술 매칭, 기술마케팅 등 4가지 모듈 구성

▮ 4차산업혁명 소재 개발 디딤돌 센터 구축(연구기관·소재기업 공동 입주 가능한 융합연구센터)

▮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TSP 구축(지역사회 기술문제해결 TSP 구축/ 중소·벤처기업 공유경제활성화 오픈플랫폼 구축/ 퇴직전문가 활용 융합혁 기업 역량강화)

- DISTEP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술문제해결 TSP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공유 가능한 시설 및 물품 공동 임차·공유 플랫폼 구축(시설·물품 공유 지원 : 기업 내 유휴 장비, 시설, 공간(창고 등)에 대한 공유 가능 수요발굴·매칭 지원(기업-기업 연계)/ 공동설비 개발 및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 지원(설비 첨단화/고도화지원)/ 전문인력 공유 지원 : 기업 수요기반 전문분야 인력 POOL 구성 및 필요 기업 매칭 지원(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 공동 마케팅 지원 : 공동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지원시설 구축(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오프라인 판매처 입점 등 비용 지원))
- 산·학·연·관의 퇴직 전문인력 POOL 구성, 기업 수요발굴 및 지원분야별 기업 매칭, 컨설팅 지원(R&D 컨설팅 지원 : 대전 정부출연연(17개),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총 68개소 전문 퇴직인력 활용, 기업 신기술 개발·연구 컨설팅 지원 (직·간접 고용형태)/ 경영·행정 컨설팅 지원 : 기업 초기 안정화 및 지역정착을 위한 경영·행정 컨설팅 지원 (정부과제 사업 참여 컨설팅, 행정지원 등)/ 국내외 마케팅 컨설팅 지원 : 국내외 마케팅·판로지원 컨설팅 지원)

▢ **기대 효과**

▮ 지역내 사회 경제 기술적 문제 해결 디지털 플랫폼의 마련 및 관련 범용 기술산업의 활성화 도모

▮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질 향상

▮ 대덕특구와 지역간 연계 고리 강화

5) '의료바이오 메카'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업체를 비롯해지역내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

▮ 규제자유구역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완료 등 상황변화에 따른 산업 발전 강화

▮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IT산업을 중심으로한 이업종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 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

- '대전시는 18년 스포츠융복합도시 비전선포 실시'(18.4.26)하였으나,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이 '21년 종료
-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레벨업을 위해 스포츠 산업과 의료바이오 첨단기술을 연계한 의료바이오스포츠융복합산업 육성이 필요

▢ **주요 내용**

▮ 의료바이오 인력양성 혁신플랫폼 구축(교육부 공모 대학연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연계)

▮ 가속기 연계 의료바이오 기술플랫폼 구축

▮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바이오메디컬 기업 성장 촉진 및 사업화지원/ 기능성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

- 바이오메디컬 기업육성(매년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 5~10개 육성(5년간)/ 지역내 산업 시설 및 공간 확보(입주공간, 시설이용공간 등)/ 우수기업 성장촉진(R&D연계·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 등)
-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바이오기능성소재 기업 지원(외국어 홍보물(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제작 지원/ 글로벌 온라인 판매 지원(이베이, 큐텐 등)/ 통역 및 번역 교육 및 지원/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제작 지원/ 해외 바이오 전시회 및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의료바이오 연계 신융복합산업 육성(의료·스포츠 융복합 기업 성장지원)

- 의료바이오-스포츠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스포츠융복합 예비창업자 발굴 및 실전창업교육
- 스포츠융복합 기업 지원 사업(마케팅, 인증, 특허, 수출, 시제품제작 등)
- 해외박람회 전시 및 참관, 부트캠프를 통한 신시장개척
- 스포츠융복합 기업 투자 확대

▮ 바이오 이업종 콜라보 지원

- 바이오 동종기업간 협업 지원 및 타 주력산업분야(무선통신, 로봇지능화, 화학소재 등)와의 이업종 콜라보레이션지원(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마케팅 지원)

동종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창출 사례	이업종 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창출 사례
(바이오)+(바이오) 협업으로 신규 아이템 발굴	(바이오)+(무선통신)+(전문제조업)+ (전문 마케팅 기업) 협업으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기대 효과**

▮ 바이오산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효과 상승 및 산업경쟁력 향상

▮ 바이오산업과 이업종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신융복합산업 창출

DSI

도시공간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도시공간 부문 정책아젠다
3. 도시공간 부문 정책과제

6장

6장 도시공간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민선 7기 전반기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진행된 주요 사업

- 도시공간측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 등
- 시민자치측면에서는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추진
- 문화관광측면에서는 보문산과 대청호 관광인프라 구축
- 교통측면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표 6-1] 도시계획 관련 주요 사업

구분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추진사업
도시공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주민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엑스포 재창조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시민자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추진
문화관광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관광인프라
교통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기존 도심주거환경에 대한 개선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대전시 신성장거점 개발구상 등이 필요함
- 엑스포재 창조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등과 같은 사업에 의해 엑스포 구역의 활성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전시로의 광역적 접근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대전시의 광역적 접근성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보문산 및 대청호관련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기존 관광인프라의 개선 및 활용이 기대되나, 향후에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표 6-2] 민선 7기 전반기 주요사업의 효과 및 향후 정책수요

<table>
<tr><th>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추진사업</th><th>기대효과</th><th>향후 정책수요</th></tr>
<tr><td>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td><td rowspan="5">기존 도심주거환경
개선</td><td rowspan="5">대전시
신성장거점
개발 구상</td></tr>
<tr><td>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td></tr>
<tr><td>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td></tr>
<tr><td>주민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td></tr>
<tr><td>대전 혁신도시 지정 추진</td></tr>
<tr><td>엑스포 재창조</td><td rowspan="2">엑스포구역 활성화</td><td rowspan="2">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활성화방안</td></tr>
<tr><td>대덕과학문화의 거리</td></tr>
<tr><td>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td><td rowspan="3">대전시 광역적
접근성 강화
기반조성</td><td rowspan="3">대전시의 실질적
광역적 접근성
강화방안</td></tr>
<tr><td>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건설</td></tr>
<tr><td>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td></tr>
<tr><td>보문산 종합관광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관광인프라</td><td>기존 관광인프라
개선·활용</td><td>새로운 관광인프라
발굴</td></tr>
</table>

2. 도시공간 부문 정책 아젠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 국가차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임
-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지구 중, 신동·둔곡지구의 활성화 및 대전시 발전과 연계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대전시의 광역적 접근성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으로 광역적 인프라, 특히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유인하였던 교통인프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전시로의 접근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시점임

▢ 대전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거점 선정 및 구상

- 대전시는 그동안 원도심 그리고 둔산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을 구상하였으나, 이제는 대전시의 새로운 발전을 유인할 신거점을 구상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사회적 여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대전시 신거점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거점은 광역적 및 초광역적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대전시 관광활성화를 유인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발굴

- 관광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전시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와 같은 기존 관광인프라의 업그레이드 외에,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발굴하여 대전시 관광활성화를 모색하여야할 시점임

3. 도시공간 부문 정책 과제

1) 『대전국제과학도시』 건설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신동·둔곡지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 신동·둔곡지구는 도입 기능과 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족적 완결성이 미흡하여, 대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진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6-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비전

▢ **주요 내용**

▮ 자족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입지시킴으로서, 신동·둔곡지구 일대를 완결적인 신도시인 '(가칭)대전국제과학도시'로 건설함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시설을 입지토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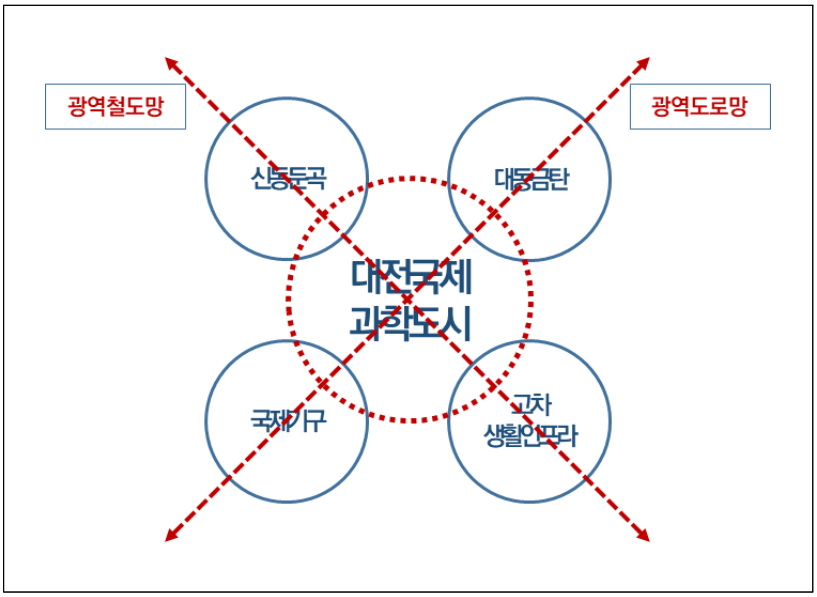
①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② 국제기구

③ 상업 및 업무기능

④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단독·공동주택단지 조성

▮ 한편 이러한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외로부터의 **접근성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고속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철도(KTX)망 연결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2] 대전국제과학도시 구상

▢ **기대효과**

▮ 신도시적 개발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 강화

▮ 대전시 국제적 기능 보완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대전역 대개조사업(대전역 신르네상스)』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역 및 대전역세권은 대전시를 비롯한 대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여 발전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한 곳임

▮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권 및 대전시에서의 도시적 역할과

영향력은 미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의 감소가 우려됨



[그림 6-3]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출처 : 대전광역시, 2019,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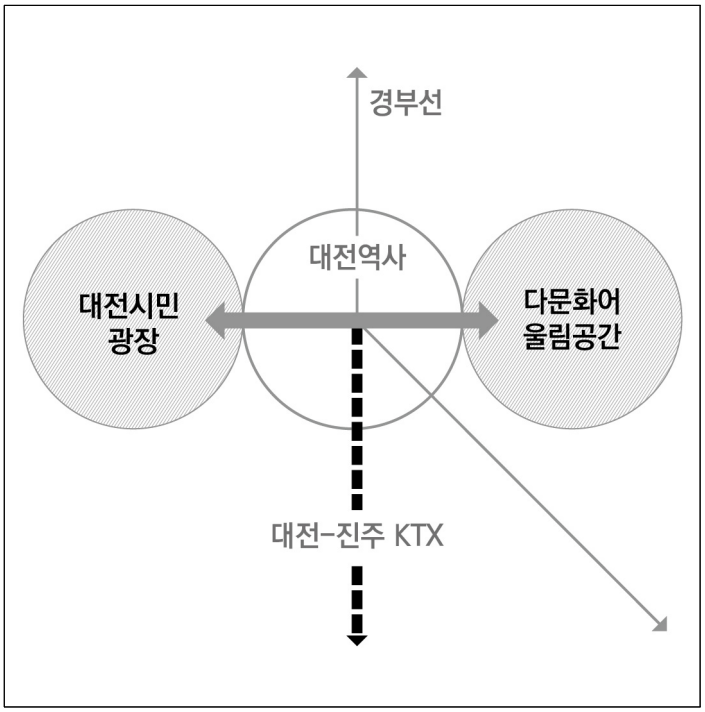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대전시민광장** 조성 : 현재 택시베이 등 광장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대전역 서광장 전체를 (가칭)대전시민광장으로 조성함

▮ **대전-진주간 KTX노선 신설** :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KTX노선이 없는 대전-진주간 노선을 신설함으로서 대전역 기능을 강화함

- 현재 서대전역에서 진주간 일반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이러한 노선 외에 **추가적으로 고속철도노선을 확보함으로서 대전역의 총광역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문화 어울림 공간** 조성 : 대전역사와 인접하여 다문화 어울림 공간(센터 등)을 조성함으로서 포용도시로서 대전시 이미지를 강화함



[그림 6-4] 대전역세권 발전구상

▢ **기대 효과**

▮ 대전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도심 나아가 대전시의 도시발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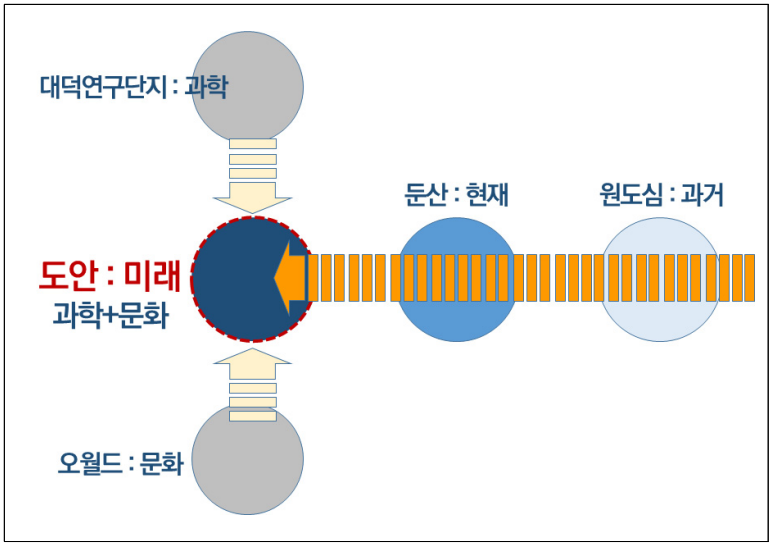
▮ 대전시민광장 조성 등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임

3) 『도안 미래 과학·문화융합도시』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도안은 대전시 내부지역 중 미개발지이나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대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공간임

▮ 도안은 북측으로 세종시 남측으로 논산·전북으로 이어지는 대전의 미래 발전축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 구상에 많은 논의가 필요함



[그림 6-5] 도안신도시의 공간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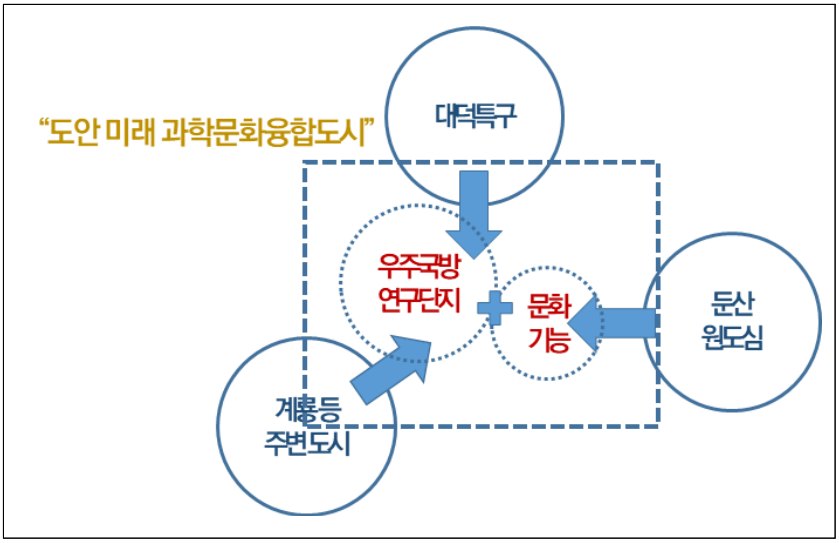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도안지역 개발구상에서 고려할 점은, 북측 대덕특구의 과학적 기능(4차 산업혁명 연계기능), 도심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도심적 기능, 주변 도시(계룡 등)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등임

▮ 이러한 다양한 기능 및 입지적 역할에 기반하여, **도안지역에 「우주·국방연구단지 : 대한민국 나사(K-NASA)」**를 구상함

- 대규모 연구단지는 도안 2·3단계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토록함

▮ 도안신도시의 급속한 인구증가 및 주변지역의 발전에 대응하여, 문화적 기능을 입지토록함



[그림 6-6] 대전 도안 미래 과학·문화의 융합도시 개념

▢ 기대 효과

▮ 도안지역에 대한 미래상 제시

▮ 대전시 장래 먹거리 확보

4) 『대청호국립공원』 지정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 주변은 산악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확장의 가능성이 낮음

▮ 특히 동측은 보존적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대규모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대청호를 최대한 대전시 발전에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현재 대청호 인근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규제 속에서 대전시 또는 청주시 등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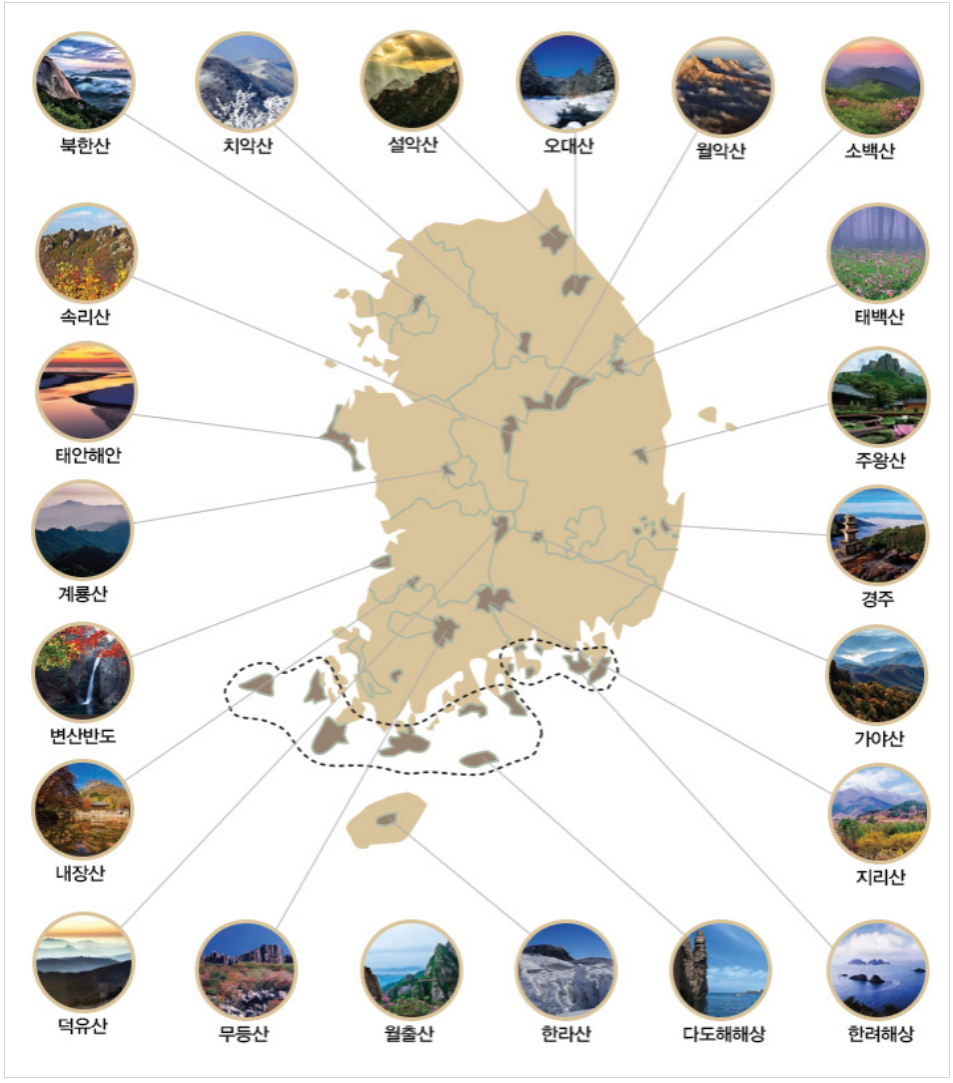
▮ 현재 **국립공원은 산악형 국립공원(18개), 해상·해안형 국립공원(3개) 그리고 사적형 국립공원(1개)**이 있으며, 호수(호반)형 국립공원이 없음

▮ 새로운 유형으로 **「대청호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함

- 대청호 '멸종위기종 독수리' 첫발견(2020.01.12.)
- 대전 동구 추동 대청호 일원 34만 6,000㎡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2008.12) : 멸종위기종 다수 서식

[표 6-3] 자연공원 지정기준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

구 분	기 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그림 6-7] 전국의 국립공원 분포

출처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

▢ **기대 효과**

▮ 대전시 및 대전충청권의 관광활성화 유인

- 대청호의 인지도 상승
- 대청호 둘레길 등 관광활성화 가능

▮ 대전시와 충북과의 상생발전사업 효과

▮ 대청호의 효율적인 관리 기대

- 현재 국립공원은 국가관리 원칙에 따라 소관부서는 환경부이며,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2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1개 공원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음

교통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교통 부문 정책 아젠다
3. 교통 부문 정책과제

7장

7장 교통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구조 재편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트램 건설 및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음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순환선)

▮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승용차의 이용률을 낮추는 정책

▮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도로내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정책 마련

- 승용차요일제, 차량 2부제 등의 기 정책의 보완 위해 주차관리를 통해 승용차의 이용을 줄여 대전시 도시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 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른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 장애인 콜택시 확충, 도심공간 차량속도 50km이하 조정 등 교통약자의 모빌리티 제공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도시철도 2호선 이후 도시철도망에 대한 보완 및 연장 요구 증대로 인한 도시철도망 종합구상

- 2기 트램 건설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역세권 면적을 현행대비 두 배로 상향하여 트램 도시 대전을 완성

▮ 개인형 교통수단(자전거, 세그웨이 등)을 통해 mobility를 활성화시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정책

- 대중교통 망이 완성된 이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First mile-last mile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 2호선 완공후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었을 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차로 축소 등의 정책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의 다른 교통수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전체 교통수단 중 승용차만의 이용률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주차시설은 일반적으로 차량 1대당 2면의 공간이 필요하므로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관리를 통해 수요 조절 필요

▮ 사용자 눈 높이에 맞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도심 전구간에 대한 통행속도 50km이하 조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사망자수 감소
- 자전거 등 개인형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도로공간의 배분 및 재정리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도로포장 등에 대한 개선

▮ 안전한 대전을 위한 방재도로망 구축

- 코로나, 원자력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재도로망 구축 필요

[표 7-1] 민선 7기 교통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2기 트램 건설로 인한 도시철도망의 보완 및 연장	역세권 증가 및 지역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Mobility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	Mobility를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승용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주차관리, 주차단속 강화 등을 통한 승용차 이용 억제	승용차의 수요관리 중대성 증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이용자의 눈 높이에 맞는 교통환경 구축	교통약자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

2. 교통 부문 정책 아젠다

▢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자**

▮ **(트램도시 대전의 완성)** 광역적으로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대전 안에서는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승용차 중심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망을 트램으로 구축하면서 추후 도시내 대중교통망을 트램으로 완성하여 지역간에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완성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셰어링과 개인형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정류장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 허브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을 개선해 주고 반대로 승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한 주차관리 정책을 동시에 펼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니즈를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자율주행 POD 셔틀을 이용하여 각 정류장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대학, 연구단지, 관공서 단지 등)과 트램역간 운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용자 눈 높이에 맞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의 필요성)**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일부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행속도 50km이하 구간을 도심 전구간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자를 위한 도로공간의 배분 및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 대한 조명시설, 안전시설, CCTV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 **(안전 도시에 맞는 방재도로망 구축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 등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대전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재난에 대비한 방재도로망 구축이 필요함. 방재도로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방재도로 네트웍망을 구축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선정된 방재도로에 대한 기능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상대의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이 필요함

3. 교통 부문 정책과제

1)「트램도시 대전」네트워망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완공이후 대전시내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망 구축에 대한 니즈가 증가될 것임
- 순환형 트램과 더불어 X자 형태의 2기 트램을 구축함으로써 트램을 이용한 대중교통망을 완성하여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루고 역세권을 상향하여 트램도시 대전에 대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음
- 2기 트램에 대한 노선검토와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통한 도시내 도시철도망 종합구상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도심 동서남북을 X자형으로 구축하는 2기 트램의 시민의 공감대 조사
- 수요조사를 통한 시민의 니즈 파악과 2기 트램으로 인한 타당성 조사
- 버스와 트램의 재배치를 통한 노선검토와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통한 도시내 도시철도망 종합구상안 제시

▢ **기대 효과**

- 트램를 이용한 대중교통망 완성으로 인한 트램도시 대전에 대한 이미지 완성
- 트램을 이용한 대중교통망 완성을 통해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역세권을 확대할 수 있음
- 대전시 대중교통 종합계획을 구상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대전의 대중교통망 구축

2) 교통 분야 핵심과제: 「교통 허브센터」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대중교통 망이 완성된 이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함
- 대전시에는 타슈가 단거리 교통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동 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접근성 개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대전시에서는 모빌리티 개선사업인 First mile-last mile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공유교통수단인 카셰어링 중심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주는 교통 허브센터 설치 방안 마련
- 「집-교통 허브센터」 또는 「교통 허브센터-대중교통」까지의 이동을 돕는 개인형 모빌리티 도입 방안 마련
-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한 번에 제공 및 결제하는 MaaS 도입 방안 마련
-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 마련

▢ **기대 효과**

▮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중교통 정거장과 가까운 곳에 교통 허브센터 구축으로 대중교통, 카셰어링 및 개인형 모빌리티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허브센터 마련

▮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문제를 해결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3) 「승용차만 쏙~ 스마트 교통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철도 2호선 완공된 이후 다양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었을 때, 승용차 이용을 관리할 필요성이 강화될 것임

▮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기존의 정책들은 승용차 뿐만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교통수단(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도 영향을 주어 근본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통계상으로만 주차수급율은 100%를 넘지만 주차시설은 일반적으로 차량 1대당 2면의 공간이 필요하므로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주차면 부족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공급계획을 통한 부설주차장 개방, 민영주차장 확대 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검토

▮ 주차관리 필요지역에 대한 주차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주차상한제 확대 적용

* 스마트 주차관리를 통한 주차예약제 도입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주차단속방안 마련

* 단속과태로 차별화 방안, 주차단속체계 개선 등

▢ **기대 효과**

- 대전시 승용차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주차관리 방안 마련
-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배회 운행을 줄이고 불법주차 근절 가능
- 승용차에 대한 수요관리로 인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활용 가능

4)「안전은 높게 속도는 낮게」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도심 전구간에 대한 통행속도 50km이하 조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사망자수 감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교통수단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도로공간의 배분 및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주요 내용**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조명시설, 안전시설, CCTV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방안
-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대전시 전 도로의 통행속도 50km이하 조정을 위한 도로개선사업 및 단속강화방안 마련
-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한 법제도, 도로공간 재정비 사업

▢ **기대 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안전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축
- 통행속도를 낮춤으로써 안전, 대기질, 교통환경 등 도심의 전반적 개선에 도움
-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공간 확보

5)「재난상황 신속대응」방재도로망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은 지진으로 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으나 원자력 관련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 대해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재도로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게 맞는 네트웍을 구성한후, 방재도로의 기능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방재도로의 필요성 및 선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대전시내 방재도로 네트웍망 구축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마련

* 방재도로의 구간 선정, 전용차로제 운영

▮ 선정된 방재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주민 상대의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 방재도로의 유지 및 파손도로의 즉각 복구

▢ **기대 효과**

▮ 재난 발생시 방재도로 미비로 인한 피해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재난 피해 단계에서 주요 대피 및 구호 활동이 가능해짐

6)「자율주행 POD 셔틀」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과학도시 대전을 위한 자율주행 POD셔틀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트램이 운영되더라도 상당수 역들은 이용자 접근성이 버스만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요 역까지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자율

주행 POD셔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 트램 주요 노선 인근에 대한 접근성 실태 검토
- ▮ 자율주행 POD를 POI(대학, 연구단지, 상업중심지, 관공서단지 등)와 트램역간에, 또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하철역과 트램역간에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 트램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제고
- ▮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 및 시민 자긍심 고양, 그리고 자율주행산업 육성에 일조

보건·복지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보건·복지 부문 정책 아젠다
3. 보건·복지 부문 정책 과제

8장

8장 보건·복지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대전의료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

- 대전의료원은 대전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연면적 3,148㎡(약 10,027평),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추진 중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시민 건강권 확보 도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60병상 규모,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치료,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공공형 재활병원 모델을 도입한 병원으로 충남권 6,000여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등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 차별되는 공익적 서비스 제공 도모

▮ 장애인 전담치과 설치 등으로 건강권의 차별 해소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균형적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산부인과 병원 중 인력/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장애인산부인과 병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가임기 여성 장애인 5,600명에게 출산친화 환경조성 등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권 차별 해소

▮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등 은퇴 후 삶에 대한 안정성 확보

- 50~70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센터(44개과정, 1,080명), 사회공헌활동지원(327회, 628명) 사업을 재단으로 편입 인생설계 및 인생이모작에 대한 다각적 지원 도모. 노년기 일자리, 창업 등 지원을 통한 소득 공백 완화 및 여가·문화 사회적 관계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원 설립,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더불어 지역내 돌봄 자원 연계 및 확충방안 등 대전광역시 특성을 반영하는 돌봄 모델 개발, 시민들의 포괄적 욕구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민간이 주도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차체 출연 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 도모.

▮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평생학습체계 확충 등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본인분담금 제도 개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급 및 기초급여 인상,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상시돌봄필요 장애아 양육 및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학습공간 마련 및 리모델링,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배움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장애인 직업교육 등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전용특장차·전용콜택시 이용요금 1,400원 정액제 추진 및 바우처택시 도입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감염병 예방 등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권 강화, 지역사회 건강보장 확대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민선 7기 전반기 보건 정책은 공공의료를 위한 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코로나 19의 발생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한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향후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권 강화뿐 아니라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보장 확대를 위한 서비스 확대도 필요

▮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 체계 구축

*민선 7기 전반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접근 주로 소득 지원 측면에 초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금융지원 등 생활지원을 통해 생활고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잔여적 복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 저소득층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자리, 소득 지원 등의 생활고 문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향후 경제적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욕구 파악과 지원 필요

▌지역 특성, 포괄적 욕구에 대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 확대

*가족 안심 치매요양원 건립,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공공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즉,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공공 영역이 책임지고 수행하다는 측면에서 공공 책임성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향후에는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와 같이 사회서비스안내창구(동 케어안내창구) 등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과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욕구 발견과 공공 영역 책임 확대가 필요. 이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신뢰성 구축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

* 민선 7기 전반기 장애인 정책은 자립 생활의 기초가 되는 소득, 교육, 이동 지원 등에 초점을 둠. 향후에는 자립 생활 기반 마련 지원의 확대의 측면에서 주거와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적인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 필요

[표 8-1] 민선 7기 보건·복지분야 전반기 주요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및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대전의료원 설립	공공의료 체계 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권 보장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발생시 대처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건강보장 확대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충남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공급 부족 해소	
장애인이 편리한 전담치과, 산부인과 병원 지정 · 운영	구강질환 치료와 출산친화 환경조성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청소년 보호지원제도 강화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과 사회문제 사전 예방	-
금융소외계층 급전지원 및 금융상담사 배치	저소득층의 생활고 해결 및 정보접근성 향상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 체계 구축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설립	은퇴 후 소득공백 완화로 삶의 질 향상	
가족 안심 치매요양원 건립	돌봄의 사회화 기반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한 돌봄 친화도시 구현	지역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구축 으로 사회안정망 실현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공공성 증진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자립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기반 구축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체계 확충	교육 기회 확대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로 지역사회생활 토대 구축	

2. 보건·복지 부문 정책 아젠다

□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발생시 대처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 대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전문적 운영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 공공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심리지원체계 구축

▮ 취약계층의 결핵 유별률 감소 사업 추진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지역 선정 및 방문 진료, 지역 간 건강불평등 완화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 기반 시민 참여 사업 등 추진

▢ **(대전의료원 설립)**

▮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 필수 2차 진료 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및 평가, 지속관리

▢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

▮ 저소득층,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욕구 다양화 대응 체계 확립

▮ 문제해결,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확대

▮ 노년층 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 프로보노 프로그램 개발

▮ 저소득층 자녀 학업 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영·유아 문화센터)

▢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확대

▮ 쉽게 찾고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 공공영역 역할 확대

▢ **(함께하는 지역사회 생활 환경 조성)**

▮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 자립생활주택, 주거서비스 지원 등

▮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 소득 창출 기회 마련

▮ 장애인 직업심화훈련 등 장애인 창업, 취업 지원 체계 도입 방안 마련

- 장애인 고용-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멘토링 사업 등

3. 보건·복지 부문 정책 과제

1) 「감염병 걱정 없는 안심 대전」추진 : 핵심과제

▢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1월에 출현한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협감을 심화시키고 있음. 2019년 3월 대전의 소아과에서 발생한 홍역이 65일 만에 종료된 후 대전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신설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즉시 대응하여 초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대전은 2011년 이후 감염병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 2019), 수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 쯔쯔가무시병이나 결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대전광역시동구 보건소, 2019)
- 2050년에는 인류 사망 원인의 1위가 항균내성 병원체에 의한 박테리아 감염이며(Liu et al., 2020),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은 신종감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 등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방역체계 구축과 감염 관리에 대한 시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및 이주자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 결핵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지속이 어려운 대상에 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함
-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경제적 위기 및 심리적 위축 등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지금껏 우리나라의 재난 지원 활동은 주로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심리적, 사회적 지원은 소홀한 편이나(노진철, 2016), 국외에서는 재난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혼란이 어린이, 정신질환자 등의 특정 집단과 재난에 심각하게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고 간주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택과 지역사회

기반의 재난 위기상담 형태나 마음케어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해 재난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음(이동훈 외, 2015; 이동훈 외, 2016; 국가트라우마센터, 2019). 자연 재난, 인적 재난만큼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감염병 재난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요구됨

▢ **주요 내용**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 공공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를 통한 대응능력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

▮ 비상방역 관리체계 강화: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및 민관합동 방역의 날 운영

▮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응강화: 레벨 C,D 보호복 등 비축 및 소방,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종위기대응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 취약지역, 취약계층의 감염병 관리: 대전광역시, 대한결핵협회 및 노숙인 및 이주민 관련 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사업 추진

- 노숙인 및 이주민 시설 지원기관 중간관리자에게 결핵 모니터링 교육
- 복약확인 요원을 통한 결핵환자 집중관리 및 복약 이행률 80% 이상시 복약 장려금 지급 등
- 취약계층 결핵 검진시 독감 예방 접종 등 인센티브 제공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재난심리지원: 심리지원 홍보, 시민 대상 마음 케어 활동

- 마음 케어 활동: 통합심리지원팀(정신건강전문가 및 복지 인력을 포함) 구축 필요, 심리상태 평가, 의학적 상태 등 전반적 상담, 재난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심리교육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정신적 영향에 대한 예방,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계속적 모니터링 및 정신 의료개입 제공 등

▢ **기대 효과**

▮ 안전한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도시 구현

-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으로 사회안전망 실현

2)「집찾사 : 장애인 주택 지원 사업」추진 : 핵심과제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의 동거가구 구성은 친족 가구가 79.1%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또한 19.2%로 나타났음. 그러나 장애인가구 구성의 변화와 연령분포의 변화에 비추어 점차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함께 장애인가구의 고령화, 고령장애인 1인 가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 주거환경 등의 검토 및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함(송지현·김동기, 2018)
- 2018년 현재 장애인의 주거상황 및 현황은 상대적으로 주거 편의와 안전시설 구비가 미흡한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장애인의 28.9%가 집의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고치기를 희망하였으며, 주거의 편리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택 개조가 필요한 상황임(송지현·김동기, 2018) 이는 낮은 장애인 소득과도 관련이 있어, 주거비 보조,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장애인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거환경관련 필요한 지원으로 제시하기도 함(송지현·김동기, 2018)
- 한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자립생활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체험홈,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사회활동, 권익옹호, 부모교육, 저소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기초급여 및 아동수당 추가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 자립생활의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어왔음. 다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독립 혹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 탈시설, 당사자

주의, 지역사회 내 보호 등을 위해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과도 맥락을 같이함(김지영 外, 2019)

▢ **주요 내용**

▮ 주요 대상 : 대전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

*사업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 장애인 주택 :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제공

▮ 장애인 주택 수요와 공급 현황을 위한 수요조사

-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 법·제도·행정적 운영 여건 및 실태 분석
- 공급 가능한 지원주택의 규모와 장애인 수요를 위한 현황조사

▮ 지원주택 공급 계획 수립 및 목표 물량 확보

- 공급 가능 주택 규모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공급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주거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주택 선정자 혹은 일반주택 거주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주거 관련 지원(주택알선, 주택서비스 신청), 생활지원(가사, 식사, 금전관리 등 지원), 관계지원(심리상담, 자조모임 연계 등), 안전 지원(긴급상황, 인권침해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인 독립생활 도모

▮ 마을기업, 돌봄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하여 거주지에서의 독립생활이 아닌 탈시설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 효과**

▮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대

▮ 장애인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적 생활의 장 마련

3) 「시민 참여형 건강재단 설립」추진 : 핵심과제

▢ **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계층 간 건강격차 심화 및 신종 감염병 등 건강위협요인의 증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균형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공하는 조직체와 보건의료기관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연계와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함
- 서울은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하에 2017년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출범하였고, 부산 역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 시민건강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은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하에 2017년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출범하였고, 부산 역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 시민건강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강조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일상적 삶의 터에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역보건사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 관여 등 주민의 권력이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함(정백근, 2018; 허현희, 2018)
- 시민 참여형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될 것임

▢ **주요 내용**

- 시민 참여형 건강재단 추진: 대전의 건강문제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전문적 인프라 구축과 지역단위의 협력적 지원 체계 확립
  - 대전시 보건의료분야 통계 현황 분석을 통한 취약 분야 도출
  - 취약 지역 발굴 및 시민 참여 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마을 사업(2020년까지 시범 사업 운영), 충남의 노노케어 사업, 부산 및 경북의 건강마을 사업, 강원도 및 경남의 건강 플러스 사업, 서울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등 시민참여형 사업 전개 등

- 건강 공유 플랫폼 구축: 자원 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대전의 건강 브랜드 특화, 건강콘텐츠 개발 및 공유

▢ **기대 효과**

▮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균형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불평등 해소

▮ 건강 실천을 위한 실질적 전략 확산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4)「대전시립의료원」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동부권은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의료와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및 감염, 환자 안전 등 필수의료에서의 의료자원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공병원 신축이 검토된 바 있음(보건복지부, 2019a)

▮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는 특성으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보건복지분과위원회, 2018). 대전도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점점 변화되고 있어(대전광역시, 2016), 급성질환을 가진 의료 취약계층이나 고령자가 적절한 시기에 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중증 상태에는 의료기관 간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3차 병원인 충남대병원에 의뢰하여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성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 뿐 아니라 감염병 위험이 높은 노숙인과 장애인 및 이민자 등 취약 계층을 표적화하여 평상시 그들의 건강증진 및 예방 관리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외상 등 필수 의료 서비스와 뇌심혈관질환 재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나 감염병이나 재난 등의 위기 상황시 대전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함

▮ 공공병원으로서 임상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영국의 대학병원을 모델 삼아(진보정치연구소, 2006) 보건의료 혁신에 대한 연구 개발이 가능한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기반의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수질환 연구, 신종감염병 대처, 의료재난 대비, 변화하는 의료산업 트랜드를 반영한 스마트 병원 형태의 2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기술 적용은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키기에 전 세계적으로 ICT 기반의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김세련 외, 2020). 따라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정밀 의료 솔루션 제공의 인프라 구축 설정 노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김세련 外(2020)에서 인용)**

▮ 자동화 비중 고려

- 원격 병문안 시스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기술적 연계 가능
- 노동력 대신 다양한 의료 기기, 자동화로 병원 치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직접적인 환자 치료에 시간 할애
- 모든 서비스, 디지털 관리 등 웹 기반 추적으로 병원 운영 효율 향상

▮ 환자중심적 서비스 제공

- 웨어러블, 원격감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부착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의료진 전송
- 클라우드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신속한 검사 및 진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빠른 질병 치료와 향후 재활 치료 방향 도출

▢ **기대 효과**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병원 서비스 제공

▮ 기능과 목적에 따라 효율적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병원 모델 도출

▮ 산업기술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 창업 등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가능

5)「대전형 찾복(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1995년~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7년부터 이루어진 주민생활지원시비스 개편, 2016년~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보다 최근인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까지 복지사각지대 개선, 복지체감도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음. 즉, 그간 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보건복지부, 2019b)

▮ 이러한 전달체계 외연과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까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이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읍면동 단위에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기관,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개의 조직이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조직이 여전히 찾아오는 복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해서 보다 효과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향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민관협력 전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할 만한 사업 수행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시의 조례 등을 통한 사회복지기관 평가지표와 이를 반영한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이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및 사회복지기관 평가지표 검토
- 조례를 통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대전형 평가지표 개편과 대전형 사회복지기관 운영지침 개발
-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의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

▢ **기대 효과**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실질적 구현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6)「Right Now(바로바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이용경험이 많은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시설들에서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을 모르는 것(36.8%~69.1%)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였음(김정득 外, 2015)
- 한편, ICT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도별 복잡한 선정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와 신청주의 복지체계에 따른 전달체계 상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최현수 外, 2018)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간적접인 조사결과로 대전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와 대략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93.8%로(양성욱 外, 2019), 사회서비스 이용자들 조차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예측할 수 있음
- 한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장애인활동지원확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운영,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가족안심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다양한 대상별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만, 이러한 구축된 인프라 활용에 있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문제는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 종합하자면,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발맞춘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의 편의성 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Right Now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1단계(진단) : Right Now 사회서비스 체계 관련 실태 파악 및 운영 여건 분석

-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제도·행정적 운영 여건 및 실태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제한점 보완을 위한 수요자 지원체계 검토 및 고려사항 파악

▮ 2단계(계획) : Right now 지원체계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수요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사항 및 필수 고려사항 조사 및 의견수렴

- 사회서비스 희망자, 현장 업무담당자(중앙/지방)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성과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의견수렴

▮ 3단계(개발) : Right now 지원체계 구축원체계 단기 구축 및 운영방안

- 사회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 자격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 매칭, 안내하는 서비스의 제공

▮ 4단계(안정화) : 개인별 맞춤형 Right Now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중장기 구축방안 마련

-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맞추어 자동 신청·제공하는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일반 시민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이용 효율성 제고

▮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효율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리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적 사회안정망 구축

7) 「50+세대 내돌(내가 돌봄) 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202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이시균 外, 2016)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서비스 공급 주체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민간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지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음(조규현·이영광, 2018 재인용)

▮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 중 50+세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2008년에서 2017년 전체 증가율 3.5%, 50~59세 증가율 4.7%, 60~64세 증가율 8.0%), 2015년 이전에는 40~4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6년 이후 50~5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보건복지부, 2017; 조규현·이영광, 2018)

▮ 사회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7가지 영역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정종호 外, 2017)의 분류에 따르면, 성인 돌봄, 아동 돌봄, 상담. 재활, 보건, 의료/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고용 및 취업지원, 주거, 문화, 환경 등의 10가지로 구분됨. 이러한 사회서비스 가운데 성인돌봄과 아동 돌봄의 경우 50+세대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경험과 노하우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돌봄체계 도입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 함.

▮ 한편, 2014년 실시된 대전시 시민욕구 조사 결과 전체 시민의 생활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무)소득이나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30.5%)로 나타났고, 구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한 것(44.5%),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39.1%),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고용(38.3%) 등으로 나타났는데(김정득 外, 2015). 구체적인 세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50세 이상의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위와 같은 조기 은퇴로 인한 소득원천의 상실,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50+세대의 문제 동시에, 지역사회돌봄체계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대응 방안으로서 50+세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50+세대 내돌(내가 돌봄) 사업 추진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1단계 : 50+세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요 파악

- 50+ 세대의 규모, 일자리 욕구, 일자리 선호도 등 일자리 지원 관련 수요 조사

▮ 2단계 : 50+세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인생이모작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 관련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제공(민간)기관 등
-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수요 파악 및 공급 체계 구성

▮ 3단계 : 사회서비스 분야 경력 개발 관리 교육

- 50+ 세대의 수요와 사화서비스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개별적 경력 개발과 관리 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 4단계 : 50+세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안정화

- 프로보노 및 멘토지원, 펠로우십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인식 확산 지원 등

▢ **기대 효과**

▮ 50+세대를 통한 안정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 및 생활지원

▮ 지역사회돌봄체계와 연계 및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DSI

여성가족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여성가족 부문 정책 아젠다
3. 여성가족 부문 정책 과제

9장

9장 여성가족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생활 속의 성평등 확산과 돌봄체계 구축**

▮ 성주류화 기반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의 기반 마련

-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는 계기
- 성인지정책담당관 신설로 지역 정책에서의 성평등 구현의 기틀 마련

▮ 일상생활 속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 시민대상 양성평등 교육, 청년 네트워크, 청년활동가 양성 등 일상생활속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비가시적 교육 네트워크 구축

▮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보호체계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내실화
-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 아동 및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 연대 활성화

▮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공동체 활성화

- 청년여성과 여성중간관리자, 여성리더 등의 경력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여성아카데미 운영
- 새일센터 및 여성가족원의 취창업 교육 강화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단체 행사 및 동아리 지원으로 다양한 여성공동체 기반 마련

▮ 안심돌봄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 취약·위기가족의 자립을 위한 자녀양육비,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미혼모(부), 조손, 한부모, 다문화 등 긴급위기가족 지원

- 어린이 보육 및 돌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돌봄의 사회화, 지역돌봄체계의 여건 마련
-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가족친화제도 강화를 통한 일·가정양립 및 재생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확산
-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 플랫폼 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아이돌보미 처우 증진 등으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양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다양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상상! 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

▮ 성주류화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여성 활동 거점 플랫폼 마련 (새로운 사회! 다양한 여성 출현!)

- 지역정부의 성주류화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연령, 직업, 계층, 국적 등 지역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의 필요성, 여성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과 연계 필요
- 성주류화제도의 주요 전략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 일자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고동체, 안전, 관광, 체육, 문화, 예술, 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시민 생활의 실질적 영향을 미칠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제안
- 자녀 양육 중심의 여성가족정책 이외의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 발굴
- 지역 여성아카이브 사업(비가시화된 대전여성의 역사와 경험을 기록)
-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및 가족 이슈에 대한 담론 형성 장 마련
- 향후 5~10년 이후 대전지역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10대, 20대 여성의 요구와 필요 발굴 필요(2009년과 2018년 사이 20대 여성인구가 5,091명 감소, 남성청년은 130명 증가[3]. 20대 여성 전출 사유 및 정착에

3) 대전세종연구원(2018)

필요한 정책개발 필요

- 청년여성 대상 주택정책 발굴

▌재난에도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새로운 돌봄체계

- 자녀양육과 돌봄, 일·가정양립의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19와 같은 새로운 재난상황에서 돌봄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잔여적 범주에 대한 정책 개발 및 돌봄체계의 재편 및 완성 필요

- 코로나 19와 같은 전지구적 재난시대에, 돌봄체계에 대한 재설계

- ■ 기존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여성과 남성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 ■ 새로운 재난 상황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삶의 불안정성 확대
- ■ 가족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만혼 및 비혼의 증대
- ■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지역 이탈 등 '안정적 일상'을 위한 돌봄체계

- 여성가족분야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노동정책에 돌봄이 포함되어야 함. 대전이 선도하는 **새로운 돌봄체계** 구상 연구 필요

- ■ 영유아·초등 저학년 위주의 공적돌봄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 ■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자녀·부모)돌봄 등의 유급휴가 및 의무화
- ■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로 재생산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 ■ 노동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 요구됨

▌세계가족 시대에 맞는 가족정책에서 가구정책으로의 변화

(새로운 가족형태 확산)

- 민선 7기 전반기 가족분야 정책은 자녀 양육 및 돌봄,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치중함으로써, 결혼한 여성 및 정상가족을 위주로 여성과 가족 정책이 구상됨

- 기존 여성가족정책이 30, 40, 50대 기혼 여성 및 가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미래 대전의 가족정책은 5년, 10년 후 대전에 거주할 10대, 20대, 30대 중심으로 포커스 이동 필요!

- 가족에서 가구정책으로의 변화 필요(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1인 가구가 주류가 되고 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대전시 가족 관련 조례[4]에 대한 정비

- '다문화가족'으로 대표되는 가족의 새로운 형태는, 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 가구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 한부모가구, 동거가구, 다문화가구, 공동체가구 등으로 변화 필요
- '가족 너머'(가족이슈를 가족해체나 위기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가족의 탄생 시기로 보고, 다양한 가족 정책 발굴)에 대한 정책 발굴

▌미래청년여성포럼(Big Future! Big Picture!)

- 지리적으로 한국의 중간에 위치한 대전은 여성이슈와 이에 대한 담론생산, 정책발굴이 활발한 '서울·경기'과 '대구·부산'의 중간에 위치함. 청년여성 대부분이 본인의 현재, 미래의 이슈에 대한 담론과 지식생산, 우호적 분위기의 부재로 인해 '노잼'의 도시 대전을 떠나는 현실임
- 5~10년 후 여성정책을 위한 10대~30대 공동체 발굴과 형성 지원
-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발을 맞춰 **지역청년여성**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활동공간** 마련
- 결혼과 가족이 10대, 20대, 30대 미래의 전부가 아님, 청년이 원하는 새운 삶의 방식에 대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는 역량 기르기

[표 9-1] 민선 7기 여성가족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7기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성주류화 기반의 안정적 정착	- 정책 전 분야에 성인지 관점의 확산으로 성평등한 정책 증가 - 시민의 정책만족도 증대 및 지역의 성평등 확산	성주류화 체계 지원 & 지역성평등 확산 위한 여성활동 거점 플랫폼 마련 1) 성주류화제도(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과 결산)모니터링 사업 2) 일자리·도시·교통·환경·공동체·안전·관광·체육·문화·예술 등 정책 전 분야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3) 세대별 여성이슈 발굴 및 담론장 형성, 그리고 활동지원

4)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등

민선7기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	- 지역의 성평등한 문화 확산	청소년& 청년 여성(10대, 20대, 30대)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 공간 긴급 1) 향후 5, 10년 후 실질적 주민이 될 10대, 20대, 30대 여성 요구와 필요에 맞는 역량강화 정책발굴 2) 미래여성 센터 : 대전 이주배경 아동 포함 청소녀 및 청년여성이 다양한 이슈로 국내·외 도시와의 연결될 수 있는 통로 마련, 글로컬한 도시문화와 분위기 조성으로 대전의 다양성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로 여성인권보호체계 마련	- 여성 및 아동의 안전 만족도 상승 및 지역 만족도 증대	sns 및 인터넷상의 혐오 및 성차별, 성폭력 등 일상의 일부인 핸드폰 안전 이용 정책 제도와 정책 학생, 청소녀 및 청년여성 대상 온라인 폭력 감시 모니터링 운동
여성역량강화와 여성공동체 활성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일·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40,50,60대의 가족과 돌봄 중심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의 '생존'과 '취향' 공동체 발굴 및 지원 1) 여성 내부의 다양성(국적, 계층, 직업, 연령,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을 포용하는 여성공동체 발굴 2) 청년여성인적교류 : 국내· 외 도시와의 연결(글로벌센터) 3) 글로컬한 도시문화와 분위기 조성청년 여성거리 조성
안심돌봄을 위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 돌봄의 사회화 정착으로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	결혼, 가족, 양육으로 집중된 여성가족 정책의 획기적 전환 필요 가족정책에서 가구정책으로!

2. 여성가족 부문 정책 아젠다

▢ **(다양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연령, 계층, 직업, 학령 등 다양한 여성 활동 거점 플랫품 구축
- 청년여성 역량강화 및 국내외 인적교류 통로 구축
- 청년여성 좋은 일자리 확대

▢ **(일상이 평화로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 1인 가구 밀집 지역 및 대학가 주거지 안전 인프라 강화
- 사이버 젠더 폭력 감시 강화
-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 안전 환경 구축
- 재난 상황에 일상이 유지되는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

▢ **(청년여성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

- 청년여성이 원하는 문화적, 경제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 청년여성친화병원 지정
- 대전 청년여성 근로빈곤 지원 강화
- 청년여성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확대

▢ **(가족 너머 가족정책, 가구정책으로 전환!)**

- 가족변화를 예측한 미래 대전 가족정책 TF팀 구성
- 1인가구, 장애인가구, 고령가구, 한부모가구, 분거가구, 다문화가구 등 가구정책 형성
- ‘출생과 양육’ 핵가족 중심에서 ‘자기’돌봄이 중심인 1인 가구 정책 강화
- 청년 후견인 정책 개발

▢ **(아동정책 강화)**

▮ 대전 어린이 행복재단 설립

▮ 이주배경 어린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 어린이 정신건강 지원

3. 여성가족 부문 정책 과제

1) 대전 성평등 지원 플랫폼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여성정책은 사회 모든 분야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한국도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정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에 성인지관점을 보장하고 있음(류유선, 2016[5])

▮ 2012년 이후 대전시, 지역 젠더전문가, 대전성별영향평가센터가 함께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정책 수준의 성평등을 향상시키고 있음. 하지만, 성주류화제도의 일상적 실천과 지역에의 확산, 그리고 지속성을 위한 지역 거점 조직과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성주류화의 확산과 지속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정부의 성주류화제도 체계와 조직을 지원하는 한편 성평등교육, 지역여성 네트워크 형성과 확산, 다양한 문화서비스 발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기관 필요

▮ 지역정부의 성주류화를 지원하고, 연령과 직업, 계층과 국적 등 지역의 다양한 여성이 함께 지역여성에게 필요한 정책과 활동, 지역여성의 아젠다를 직접 발굴할 거점 공간 필요

▢ **주요 내용**

▮ 대전여성가족원 가운데 하나를 여성 거점 플랫폼 공간으로 변경하여,

5) 류유선(2016),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연구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능, 여성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네트워크간 교류 강화, 예술·문화·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공간으로 탈바꿈

- 연령과 직업, 학력과 계층 등 다양한 여성이 모여, 다양한 지역 생활 관심사를 논의하고, 교육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조직과 공간 형성
- 청소년(10대), 청년(20-30대), 신중년(40-50대), 후중년(60대 이후) 등 유사한 연령별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사업 발굴, 세대별, 세대 간 여성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타 지역 및 타 국가 여성공동체 연대 강화
- 여성 역량강화 교육 : 성평등 위주 교육 강화 및 수준별 교육 강화 -〉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 및 청년여성 리더 발굴
- 네트워킹 형성 및 교류: 지역 여성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국내외 타 지역 여성네트워크와 교류 지원
- 예술·문화·교양서비스 : 스테레오타입화된 기존 여성 문화강좌 다양화
- 대전여성 아카이브 조성 : 지역여성의 삶의 경험과 역사를 축적
- 분야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 **기대 효과**

- 성주류화제도의 지원으로 대전지역 전역에 성평등의식 확산
-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리더 발굴과 교육
- 지역 여성 이슈와 아젠더 발굴과 정책 연계로 성평등정책 강화

2) 과학기술 플러스 여성안전 모니터링센터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성평등지수 영역 가운데 전국 대비 대전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안전'분야에 대한 보완을 위한 사업 필요. 공간과 인식, 그리고 디지털상의 안전을 고려한 대전시 차원의 강력한 여성안전 대책 필요

- 성폭력, 젠더폭력 상황 감시와 예방, 긴급상황에 따른 행정적 조치 마련 필요. 폭력 '의심'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조치 명령 등이 조직적,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일자리, 학업, 여행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는 인터넷 환경의 안전 감시자 필요. 특히 지역이라는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청소녀와 청년여성이 '여성'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성적 착취 및 젠더폭력에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기관 필요
- 성희롱, 성폭력, 성착취없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 지역의 모든 여성(영유아, 청소녀,청년여성 등)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적·환경적 인프라 구축
- 커지고 있는 젠더갈등과 혐오 등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 여성 안전을 위해 지역의 물리적·공간적 환경을 재구성. 여성안전에 대한 인식확산 운동, 디지털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 필요, Most Likely Daejeon 센터 설립
- 대전의 특성인 과학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여성 대상 범죄, 젠더폭력, 성폭력 관련 법률 강화
- 여성안전위원회 구성
- 여성 안전 모니터링 사업
- 온라인 혐오와 폭력에 대한 청소년 모니터링단 교육과 발족

▢ **기대 효과**

- 여성에 대한 비가시적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지역 사회
- 대전의 특성인 과학기술을 활용한 청소녀와 청년여성을 비롯한 여성 안전 도시 이미지 특화

3) 청년 여성 글로벌 컨택트 센터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여성! 이라는 한계를 경험한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을 막을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 형성 필요한데, 여기에 청년여성 당사자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거나, 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 필요
- 20대 청년여성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글로벌 시대에 지역에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역 청년여성의 소통과 연결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 서비스사회로 진입하면서, 긱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과 청년이 이 분야 주요 노동자가 되고 있음. 불안정노동시장의 청년여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기반 마련에 당사자의 필요를 담을 조직 필요
- 청년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문화 자원, 지역의 포용적 분위기, 안전한 주거 등 구체적 안을 제안할 수 있는 청년여성 활동 거점 조직과 공간 형성

▢ **주요 내용 : 청년여성이 대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동적인 조직, 공간, 인프라 제공과 지원**

- 공간마련 : 여성가족원 혹은 대전글로벌센터 기능 및 정체성 변경
- 조직구성 : 청년기는 지속적이지 않음. 시간이 지나면 청년기는 지나가게 되므로, 시기에 따라 청년기에 진입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함. 즉 청년기의 청년이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이 될 수 있어야 함
- 공유공간 : 일자리, 취미, 교육 등 다양한 소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 교육공간 : 다양한 청년여성 이슈와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기획 및 사업
- 도시공간팀 : 대전이라는 도시를 청년여성이 활용하는 법
- 문화축제팀 : 지금 청년의 문화와 축제를 청년여성이 대전에서 상상하고

기획하기

- 정책발굴 : 정착하기 좋은 대전에 맞게 청년여성 스스로가 정책 발굴, 지역 여성 일자리, 직장내 성희롱 방지 정책, 청소년 청년여성 노동권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 글로벌 네트워크 : 국내외 청년여성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캡이어 프로그램 : 대전에 정착하는 청년여성 대상, 장기적 생애기획과 비전을 계획할 수 있는 3~6개월 가량의 기간 보장
- 다양한 청년여성의 참여 보장 : 장애, 학력, 종교, 언어, 이주배경 등에 대한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
- 유학생과 지역 청년과의 교류의 장 마련
- 청년 후견인 정책 개발

▢ **기대 효과**

- 청년여성의 지역 정착 증가
- 지역과 글로벌 연결성 확대
- 청년여성 친화적인 지역 환경 구축으로 지역 이미지 상승
- 직업, 연령, 학력, 국적, 종교 등 다양한 청년여성의 참여를 통한 소외 없는 청년여성
- 다양한 삶과 가족을 고민하는 청년의 실제 고민을 정책에 반영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정착하고 싶은 도시 형성

4) 대전 재생산센터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서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고, 대전광역시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운영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도시를 지칭함

- 가족은 사회유지의 기본단위이며, 출생과 양육, 돌봄, 가사노동이 주를 이루는 가족, 재생산 영역은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강화 혹은 부과하는 대신에 재생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재생산센터 설립을 통해 대전지역 다양한 가족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 조정
- 한편 핵가족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복지, 주거, 도시, 건강, 문화 등 전 분야의 정책을 가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기관 필요. 여성친화와 가족, 자녀 양육, 노인 돌봄 등 저출생과 고령화를 총괄하는 통합조직 필요
- 돌봄중심의 가족정책을 대전시 주류 가구인 1인 가구정책으로 확장, 즉 청년층을 가족정책대상으로 유입해 대전청년형 '자기 돌봄' 모델을 지역에 확산할 필요있음

▢ **주요 내용**

- 다양한 위험 상황에 처한 '위기가족' 지원 : 경제적 취약 외 다양한 위기상황(재난 및 재해, 가족원 상실, 가족원 질병, 사고, 범죄 피해가족, 범죄자 가족 등)에 직면한 가족 지원 체계 구축
-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기초자치구별 가족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필요. 대전시 2개의 통합센터외 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통합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별 다양한 유형의 위기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적, 돌봄 지원 확대
- 지역의 다양한 돌봄시스템 통합 운영 : 지역의 다함께 돌봄(보건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보미 사업(여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다양한 운영 주체들의 다발적 돌봄이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이용 접근성과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대전의 다양한 돌봄시스템을 통합하고, 커뮤니티 케어와 연결을 재생산센터를 통해 구축
- 위기상황 긴급돌봄 지원 구축 :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대전시 '위기 돌봄시스템' 구축하여, 재난 및 위기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 (법, 매뉴얼 재편)

- '가족'정책을 가구 정책으로 변환하는 기반 마련 : 가족구조 관점에서 '가족실천(family doing)' 관점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가족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과 규칙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존재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됨. 따라서 '가족은 ~해야한다'가 아니라 '~하니 가족이다'로 가족의 의미를 전환함으로써, 최근 주류가구로 부상하는 1인 가구, 사실혼, 동거 가족[6]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정책 마련 준비
-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대전의 산업경제 상황에서 긱/플랫폼 노동 종사 여성노동자가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여성노동 감시단 운영
- 가족친화 지역환경의 구축: 기존의 일생활균형 지원,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기업 인증 업무 통합.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여성 및 가족 친화'에 대한 인식 확장 필요

▢ **기대 효과**

-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가족의 특성을 대전에 맞게 가구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선도적 도시 이미지 강화
- 글로벌 관점에 맞는 정책 발굴과 실현
- 양육과 출생 중심의 가족정책을 가구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가족 지원의 기반 마련

5) 「대전 어린이 행복재단」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어린이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성장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6)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대) 2018년 현재 대전지역 1인가구 32.5%, 부부가구 14.9%, 부부와 미혼자녀 30.5%, 한부모가족 10.2%임. 대전의 1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부부가족과 부부와 미혼자녀가족은 전국평균보다 낮음(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019). 즉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전국보다 더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어린이 재단 필요

- 지역 어린이의 돌봄, 놀이, 교육, 건강, 안전, 성장 등 전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와 지원을 수행할 기관의 부재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국공립 보육 비율로 드러남
-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한편, 다양한 이주배경(다문화, 북한이탈, 난민, 중도입국 등)을 가진 어린이도 증가하고 있어,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교육도 요구됨
- 아동학대로부터 보호, 정신건강지원, 장애어린이 보호와 돌봄, 다른 문화 어린이 지원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형성이 요구되지만, 대전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이 이들에 관심부족임을 알수 있음

▢ **주요 내용**

- 어린이 복지와 성장 관련 연구
- 어린이 심리상담 제공과 지원
- 장애어린이 보호지원체계 구축
- 어린이 학대 방지 교육
- 부모교육

▢ **기대 효과**

- 인구정책의 방향을 출생중심에서 어린이 행복과 권리로 전환함으로써 인구정책 선도
-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미지, 젊은 이미지 강화
- 어린이 행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체계 구축

DSI

공동체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공동체 부문 정책 아젠다
3. 공동체 부문 정책 과제

10장

10장 공동체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표 10-1] 민선 7기 공동체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대전광역시 2020a)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 수요
5개구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공동체사업 관련 지원·역량강화·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공동체 완성 :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지원' ▷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 방안
시민공유공간 100개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	
청년내일재단 설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청년사업 기반 조성	
공공어린이집 100개 확충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구축을 통한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	국제도시 위상을 갖춘 다문화 공동체 기반 조성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5개구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시민공유공간 100개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 완료를 통한 공동체사업 관련 지원·역량강화·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
- 청년내일재단 설립사업 수행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청년사업 기반 구축

▮ 공공어린이집 100개 확충사업 수행으로 지역기반 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

▮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고 방문하고 싶은 국제도시 위상을 갖춘 다문화 공동체 기반 조성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수요)**

▮ 민선 7기 전반기 공동체사업은 사람, 공간, 가치를 중시하며 매우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공간 조성과 관련 사업 완수를 전제로, 향후 사람 및 가치 측면에 대한 사업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

▮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공동체 완성 :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지원'

- 지역언론 협조로 지속적인 홍보 확대
- 마을의 다른 조직(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유기적 관계 정착
- 시민-공동체 지원센터(중간조직) -대전광역시 간 신뢰 형성 완성
- 살롱문화(관심과 취미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만남) 확산 유도(박동천, 2020)

▮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

- 3.8민주의거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
-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생 인권(주권) 보장으로 적극적 참여/역할
- 대전형 보편적 아동복지와 공동체 교육 확대 방안 강구
- 위험대응을 위한 공동체의식 강화
- 국제행사에 다문화 공동체 축제 병행 및 외국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2. 공동체 부문 정책 아젠다

▢ **(인권존중 주권행사 공동체)**

▮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공동체 형성

- 시민주권도시 위상에 맞는 자율적 공동체 문화 확산
- 지방재정분권 확대 예정에 따른 자생적 공동체 기반 구축(전북연구원, 2020)
- 시민참여예산제 및 균형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예산 확보

▮ 3·8민주의거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 대전을 상징하는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 학생인권조례 제정

-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 및 주권행사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 공동체 토대 마련

▢ **(평등지향 공동체)**

▮ 청년, 영세상인,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융합형 정책 개발

- (가칭)따밥공동체 : 상호적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공동체

▢ **(신뢰·배려·공존 공동체)**

▮ 시민주도 참여·공공기관 지원 시스템 정착

- 공동체 운영 및 참여자 간 지속적인 신뢰 구축
- 운영 미숙과 관료중심의 행정시스템 극복(유병선·김덕진, 2018):'어공'(어쩌다 공무원) 표현으로 비판받은 사례가 있는 중간조직의 관료화 예방
- 지역공동체 간 교류와 연대 적극 지원

▮ 위험대비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및 역량 강화

- 코로나19사태 이후 재난에 대비한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대응방안 모색

▮ 이주민, 외국인 방문객을 배려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

-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사업 내실화
- 대전 개최 국제회의(행사)에 이주민 참여 독려로 공동체 의식 함양
-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지 않도록 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강화

3. 공동체 부문 정책 과제

1) 지속가능 시민주도형 공동체 완성

▢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 들어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정책 서비스로 참여하는 클러스터(cluster) 또는 커뮤니티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 방식이 새로운 참여방식으로 등장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세종지역공동체,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등) 중심으로 면 마스크 제작 나눔 운동,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과 후원금을 보내는 운동이 전개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 사회적 자본 축적 및 개인의 사회적 유대감·소속감 형성 등을 통한 시민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 모색 필요 :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전략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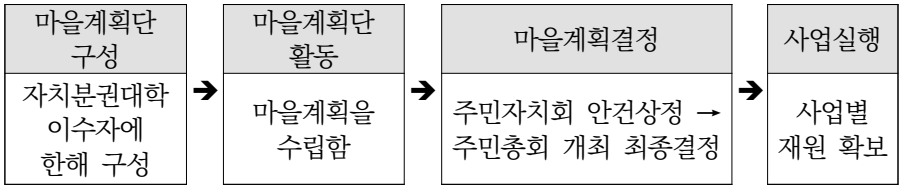
▮ 대전시에서는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여 4개과(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교육복지청소년과)를 운영중임. 동 조직을 기반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집중 지원이 가능

▮ 유성구, 대덕구, 동구는 '공간'과 '인력'지원 사업 지원을 모두 받았고, 서구의 경우'인력'만 지원 받음. 중구의 경우는 공모사업비만 받았으며, 광역단위에서 직접 지원을 함. 향후 자치구 주도의 종합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민관협력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형의 자치구 통합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전환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2019; 최길수·유병선 2019)**

▮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지속성 확보

- 마을현안과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



▮ 마을공동체 교육을 기초(입문)-심화-전문단계로 구분 운영

- 기초단계: 마을공동체 사업에 처음 입문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을 위한 교육단계로, 마을아카데미, 주민자치학교 등으로 구성
- 심화단계: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리더를 위한 교육단계로, 주민리더 교육, 공유(거점)공간 운영자를 위한 공간운영 교육 등으로 구성
- 전문단계: 마을넷 대표, 마을자치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마을리더 등 핵심 활동가를 위한 교육단계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

▢ **기대 효과**

▮ 자치구 단위의 자생적인 마을공동체 생태계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자치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현장밀착형 지원 가능 의제설정 가능

▮ 주민들이 단순히 정책 제안하는 것을 넘어, 정책집행 및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주도 토론 문화의 정착 및 숙의형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

▮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및 리더 육성

2) 3·8민주의거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 **배경 및 필요성**

▮ 3·8민주의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60년 3월 8일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전에서 고등학생 1,000여명의 주도로 일어난 학생의거임. 3·8 민주의거는 이후 3·15마산

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짐

-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3·8 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1월 2일에 공포함
- 정부는 2018년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는 2020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보류함
- 대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 전국 및 전 세계에 홍보를 통해 '시민주권도시'로서의 대전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가칭) '3·8민주의거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준비
- 매년 다채로운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공동체)의식 계승·도모(대전광역시 2020b), 전국 및 해외로의 홍보 및 참여 유도
- 지방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홍보 및 설문조사 실시
  ·지방공휴일은 현재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제주와 같이)공무원 특혜라는 반발을 살 여지가 있음
- 2021년 준비를 거쳐 2022년 시행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지, 2025년(65주년) 또는 2030년(70주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민선 7기 3·8민주의거의기념일 지정 성공에 이어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으로 지역사회 이슈화를 통한 활력 부여

▮ 대전의 리더십과 시민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

3) 학생인권조례 제정

▢ **배경 및 필요성**

▮ 학생이 인권 보호와 주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이들이 사회에 나와도 적극적인 사회(공동체)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사회적으로 청소년(학생)은 어리고 미숙한 '학교 안의 존재'가 아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부터 집계함. 여성가족부의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8년 7~9월, 초·중·고 재학 청소년 15,657명 조사)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34.7%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61.6%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이승준, 2020 재인용)

▮ 2020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으며, 법적으로 유권자는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정당 가입도 보장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학칙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아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받지 못함

▮ 지방정부 중 경기, 서울,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 대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30여 개 보수단체들이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유보함에 따라 무산됨

▮ 지속적인 시민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존중과 주권행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위원회 설치 운영

▮ 학생인권조례 제정

-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우선 실시: 2015년 12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대전지역 17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74.5%, 중·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장재완, 2017)
- 공청회 개최,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 제정

▮ 학생(청소년)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 해소 및 권리 보장 방안 강구

▢ **기대 효과**

▮ 대전교육공동체의 의미 있는 변화

▮ 교육과정 및 사회생활에서 학생 인권 보장 실현으로 공동체 새내기 육성

4) 두레밥 공유주방 육성

▢ **배경 및 필요성(류유선, 2019)**

▮ 20대 1인가구 여성은 '식사'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 제대로 된 식사를 위한 시간과 돈,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는 20대 1인 가구 여성에게 집밥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음

▮ 이들이 저렴하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 **주요 내용(류유선, 2019)**

▮ 지역 내 공공기관 식당 개방

▮ 청년을 위한 집밥 바우처 사업 전개

- 지역 내 소규모 식당과 연계 : 지역화폐 사용 권장
- 청년은 저렴하게 식사하고, 영세 식당 역시 이윤 창출이 가능한 방안 마련

▮ 지역 내 ‘쇼셜 다이닝’ 및 ‘공유부엌’을 주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 로컬푸드 생산 사회적경제기업 시장 확대 및 판로지원과 연계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월 1회 로컬푸드로 만든‘도시락 데이’실시 및 상호적 약자에게 도시락 무료 제공

▢ **기대 효과**

▮ 1인가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밥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 효과 창출

▮ 영세 식당 이윤 창출 및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가능

▮ 로컬푸드 유통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5) 재난대응 공동체 역량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시민들의 심리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를 수반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위험상황은 시민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의 차등적인 배분으로 구체화 될 경우 지역사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임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 사회적 관계는 질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대전을 비롯한 서울, 경기, 세종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위험관리역량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형성 및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역 스스로 위험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됨

▮ 코로나19의 재난상황 이후 시민의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 지역사회 탄력성

제고 및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변화 비교 및 위기극복 방안에 관한 의식 조사

-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일상변화 양상에 대한 조사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지역사회 공동체 탄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조례제정 가능성 검토)

▮ 대전시의 위험대응과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 및 정책추진과제의 도출

▮ 코로나19 재난상황 이후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위한 지역공동체 강화 방안 강구

▢ **기대 효과**

▮ 시민주도적인 공동체 문화함양과 지역사회 결속력 증대

▮ 위험 및 재난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역량 강화

6) 다문화공동체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2022년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등 대전에서의 국제회의(행사) 개최 가능성 증가

▮ 역사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시기에는 소수자 혐오와 감염병 환자에 대한 낙인이 횡행하여 외국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살생을 벌이기도 함(한겨레신문사, 2020)

▢ **주요 내용**

- 이주민과 대전 개최 국제행사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
- 이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공동체 소속감과 기여도 향상 도모
-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이주민, 이주노동자, 외국인 방문객 등이 (특히 의료보험혜택과 관련하여)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

▢ **기대 효과**

- 다문화공동체를 통해 '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winning the hearts and minds)'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됨. 즉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 정책은 대전광역시와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유병선, 2018)
-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은 사회적 약자이기는 하지만, 지역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일체화 가능: 부산 이주민포럼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DSI

시민자치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시민자치 부문 정책 아젠다
3. 시민자치 부문 정책 과제

11장

11장 시민자치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혁신도시 지정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신성장 동력 확충
-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 및 지역인재 채용 시행 추진

▮ '대전시소'시민과의 정책소통 창구 정착화

- 누구나 쉽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의 만날 수 있는 장을 열고, 숙의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

▮ 시민주도의 예산편성

-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창구 확대
-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참여 활성화로 대전형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구축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 시민주권도시 구현을 위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확산을 촉진시키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추진

- 3.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위상을 강화하며 대전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복합 기능의 중부권 대표 민주화 관련 기념관 건립

▮ 시민 개방형 시청사 시민몰 조성

- 시민중심의 청사배치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 조성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5조에 따른 제2차 인권정책 기본

방향 및 비전 설정 등 향후 5개년 중기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함

▢ 민선7기 전반기 성공적인 추진에 따른 대전의 미래상

▮ 시민주권도시 대전

-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자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전은 시민이 이러한 권력을 가지는 도시를 추구함
- 민선 7기 초기 수립한 자치분권비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 평가로 자치분권 수준 획기적 향상
-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성과를 반영한 2~3단계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기반 조성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통로 적극 개발 및 개방
- 시민의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운영(예,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 시소 등)

▮ 골고루 잘사는 대전

-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기반 마련
- 지역균형발전기금 제도의 개선 및 균형발전사업을 위한'지역균형발전지표' 구축

▮ 주체적 지역인재 육성

-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재육성의 지역적 책임 강화

▮ 인권기반 도시

- 공공기관 인권경영제도 정착 및 지원 :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 지속 확대
-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권문화 및 인권가치 확산

▢ **민선7기 후반기 정책 수요**

▮ 시민주권도시 구현

- 시민주권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한 주요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2. 시민자치 부문 정책 아젠다

▢ **시민주권도시 구현**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과 시민주권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대전시 민선7기 정책기조인'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위해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와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정부 구현

▮ 시민주권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① 자치제의 기본적 제도 마련: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제정

② 주민참여예산제 촉진을 위한'지원협의회'구성 추진

③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

④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구축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대전지역은 국가 및 중앙의 다양한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은 대전시의 지역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므로 대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에 입지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어떤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운용 규모, 그 기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규모 등임

▮ 도시경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추진 방안

① 대전시-연구개발특구 간 협력체계 강화

②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인프라 활용 방안

③ 대전시-자운대 간 협력체계 강화

3. 시민자치 부문 정책 과제

1) 자치제의 기본적 제도 마련: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제정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기본조례는 자치의 기본이념 및 운영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주체인 집행기관, 지방의회, 주민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 자치기본조례는 분권사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 장 및 그 직원의 책무, 의회의 책무, 주민참여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

▮ 자치기본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체계에서 최정점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본이념으로 주민·행정·의회에 관한 관계의 기본 룰을 정하는 조례임

▮ 또한, 그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법규'로 다른 일반조례보다 우위에 있으며, 다른 조례나 규칙 등의 입법지침, 해석지침이 되고 있는 것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에너지기본조례, 환경기본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 주민참여기본조례 등 각종 '○○기본조례'가 정책테마별로 급속하게 제정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본조례의 제정실태는 현행 입법형식상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정한 기준도 없고, 기본조례의 취지나 내용이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정개폐의 준거로 삼고 있지도 않으며, 관련 조례 상호간의 정합성도 모되고 있지 않아 각종 기본조례의 제정을 둘러싼 법체계상의 모순과 저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정당성이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은 '○○기본법' 등에서 위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경우와, 법령의 위임 없이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기본조례'등의 명칭으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나누어짐

▮ 일본의 경우, 자치기본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념·원칙, 의회의 책무, 주민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한 조례'로 정의됨

- 일본의 자치기본조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정책을 입안·실시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선언하고 필요한 시스템 도입·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Home-Rule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헌장(Charter) 제정권이 주헌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헌장제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함

▮ 따라서 대전시 민선7기 정책기조인'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헌장에 해당하는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주권 대전시를 구현하는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집행부와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대전광역시 자치기본조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기본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록 자치기본조례가 법적효력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조례와 동등하지만 이념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개별 조례의 규정내용이 기본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념적이면서 원칙적인 내용을 차별성 있게 규정함

▮ 자치기본조례의 입안 시 가치원칙, 기능원칙, Governance원칙하에 입안하며, 그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음

- 총칙은 자치단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위한 원칙 내지는 이념, 그리고 각각의 주체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규정
- 정보공개와 공유 및 능동적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자치기본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행내용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각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시민주권도시를 선도하는 대전시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주민참여의 활성화로서, 자치기본조례 제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그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킴

▮ 주민의 새로운 권리의 보장으로서, '미을만들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보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새로운 권리의 내용을 주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큰 힘이 됨

▮ 주민·의회·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증진에 기여

▮ 주민·의회·집행부의 역할과 권리 및 책무의 명확화에 기여

▮ 행정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기여

2) 주민참여예산제 촉진을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운영근거는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③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견수렴, 절차 등

▮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조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14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pp. 3~6)

▮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협의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지원협의회는 연구회 성격의 기능과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데, 이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제규정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교육·참여예산제 홍보·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와 같이 지원협의회의 일반적인 기능을 볼 때, 대전광역시에서 이러한 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시민공청회 등의 기능을 모두 흡수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의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는 조례의 규정을 통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운영 방안

- 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함

-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둠
-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자치분권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음
-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협의회는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함

▮ 협의회 기능은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②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③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④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⑤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⑥ 그 밖의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임

▢ **기대효과**

▮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제고

▮ 대전시 주민침여예산제에 대한 대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

3)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점점더 중요해지고 있음

▮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공람과 공청회 등의 제도적인 주민참여 기법 이외에 다양한 비제도적인 기법들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각급 지자체 들은 참여형 도시계획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각 지역 및 계획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과 형태를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이로부터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는 공청회, 공람·공고 등은 이미 입안된 계획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참여에 불과함

- 최근에 제도적 주민참여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급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형 도시계획의 도입으로서 쇄신적 기법과 자립적 기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참여방법 등 다양한 비제도적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시도시발전 종합계획 등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도시발전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11-1] 도시기본계획 주민참여과정 사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th><th>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th><th>2030 서울플랜</th></tr>
<tr><td rowspan="5">참여
인원</td><td rowspan="2">모집
방법</td><td rowspan="2">주민대표</td><td rowspan="2">시민공모,
시민단체추천</td><td>무작위 전화 모집</td></tr>
<tr><td>추첨 및 추첨</td></tr>
<tr><td rowspan="2">선발
인원</td><td>약 200인</td><td rowspan="2">130인</td><td>시민참여단 100인</td></tr>
<tr><td>495인</td><td>시민위원 30인</td></tr>
<tr><td rowspan="2">포커스
그룹</td><td rowspan="2">아동 및 청소년</td><td>청년기획단(100인)</td><td>장애인, 외국인 추천</td></tr>
<tr><td>기업협의체
(10개 업체)</td><td>청소년참여단(16인)</td></tr>
<tr><td rowspan="4">참여
과정</td><td>설문
조사</td><td>사업안 설문조사</td><td>미래상 등 사전
인식조사</td><td>미래상, 과제 등
인식조사</td></tr>
<tr><td>교육
프로그램</td><td>도시대학</td><td>자료송부, 강연</td><td>자료송부, 주제강연,
토론한마당</td></tr>
<tr><td>의견도출
및 논의</td><td>지역별회의,
발표회, 시민토론</td><td>분과회의,
전체회의</td><td>브레인라이티,
분임토의</td></tr>
<tr><td>의견
협의</td><td>심층워크숍(전문가)</td><td>전체투표</td><td>전체투표,
시민제안서</td></tr>
<tr><td rowspan="2">참여방
법</td><td>시민그룹
참여방법</td><td>주민회의,
주민돋보기단</td><td>시민계획단
프로그램</td><td>본회의, 분과회의</td></tr>
<tr><td>전문가
그룹
참여방법</td><td>워크숍, 자문단</td><td>연구집담회,
운영조직 자문</td><td>전문가포럼,
자문단</td></tr>
<tr><td rowspan="2">소통 및
후속</td><td>지역
사회소통</td><td>행사개최, 공개토론,
홈페이지</td><td>홈페이지,
컴뮤니티보드, 인터뷰</td><td>홈페이지, SNS,
설명회</td></tr>
<tr><td>후속과제</td><td>주민참여형 지원행정</td><td>시민계획단 지속 등</td><td>후속계획 주민참여</td></tr>
<tr><td rowspan="2">참여
역할</td><td>시민그룹</td><td>의견도출-논의, 답사</td><td>의견도출-논의-합의</td><td>의견도출-논의-합의</td></tr>
<tr><td>전문가
그룹</td><td>준비, 교육 등</td><td>준비, 교육 등</td><td>준비, 교육 등</td></tr>
</table>

▢ **주요 내용**

▮ 알기 쉽고 편리한 도시계획 정보 제공

- 알기 쉬운 도시정보 제공 및 이벤트 개최
- 인테넷 휴대용기기 등을 활용한 쌍방향의사소통체계 구축

▮ 내실 있는 공론화 과정 운영

- 시민과의 접촉기회 확대 및 참여시기의 조기화
-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참여유도 및 의견 청취
-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한 주민협의회 등 대표자그룹 형성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전문가 역할 강화

- 시민참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성공사례 발굴
-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도시계획 지원센터 설치
-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공계획가'제도 도입 운영

▮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공청회 이원화 운영
- 법정계획 심의시 '시민참여보고서' 제출 의무화
- 시민참여 과정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 **기대효과**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발전계획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참여 활성화

4)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자치분권종합계획의 6대 전략 중'주민주권 구현'전략에는 ①주민 참여권 보장, ②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주민소환 및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임

▮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은 2010년 9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 법은 2013년 5월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주민자치회 관련은 동법 제20조)]로 제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8년 3월에 일부 개정되어 동법 제27조~제29조(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의 규정에 의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미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인 주민자치회 제도의 설치와 운영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화될 전망

▮ 동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주를 구현해야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그 중의 하나로'주민자치회 확산'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은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간의 이상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정립될 경우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주민자치회를 위한 지원체계는 시·도 및 시·군·구에 (가칭)'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지원단의 구성은 지방정부의 주무부서 공무원, 지방의원,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기업인 대표까지 포괄하도록 구성함

▮ 우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주민자치회가 역량제고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주민차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자 및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주요 내용**

▮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반관반민 형태의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적인 기구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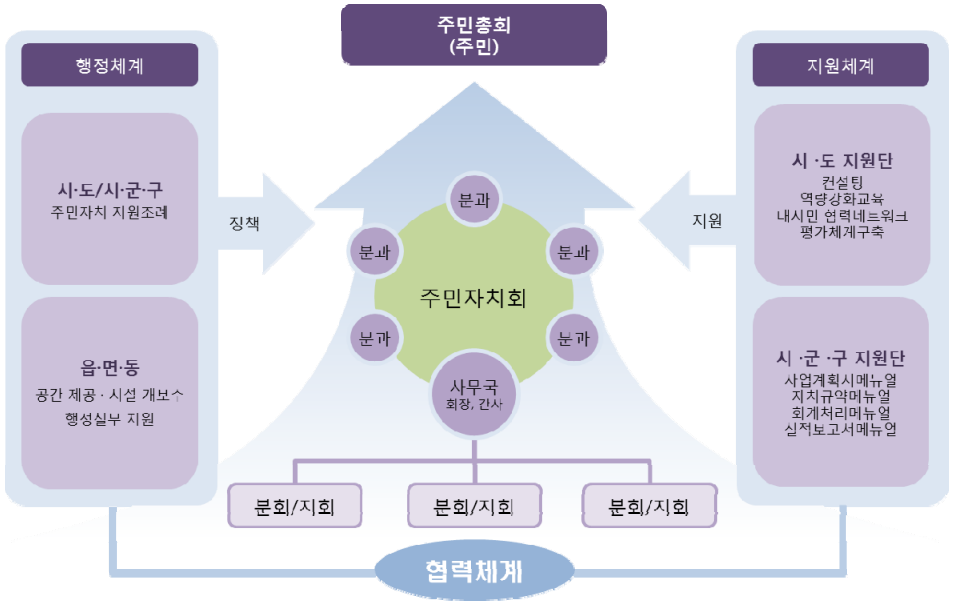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역리더,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민주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민주적 결사체인 주민자치회가 개별적으로 정착되고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

▮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주민자치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비롯하여 주민과 주민조직, 행정, 지역사회내 다양한 단체, 관련시설·기관, 마을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은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자금, 인재, 기술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시책의 개발은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서 주민자치회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하는 과제는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토대를 어떻게 설정하여야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임

▮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요소를 충족함과 동시에 이것의 운영기반인 지방정부의 정책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민자치회는 그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행정)는 계층별로 정책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그림 11-1]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모형

5) 대전시-연구개발특구 간 협력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전에 입지한 중요한 혁신자원의 하나이지만 대전 지역과의 협력체계는 미흡. 현재 대전-대덕 상생협력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연계체제는 미흡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자원과 창출된 기술적 지식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와의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내용**

- 대전과학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전과학산업진흥원(가칭) 의 기능: 대전 지역의 수요와 자원에 기반한 정책기획 및 대덕특구 내 출연연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대형 국책 R&D 사업 기획, 지역 기업과 출연연과의 매개역할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

[표 11-2]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주요 업무

기 능	주요 업무
정책기획	대형 국책사업기획, 산학연 연계정책, 출연연 협력사업 발굴, 지역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 통한 상시적 기획기능
평가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 R&D 사업 평가분석,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지원	지역 강소·벤처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
특구지원	특구 내 클러스터 육성, 과학기술인 지원, 과학문화 진작

6)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인프라 활용 방안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우리나라 2대 간선인 경부선과 호남선이 대전에서 분기하기 때문에 '철도교통도시' 또는 '근대도시'라 일컬음

▮ 대전은 2009년 입주한 한국철도산업의 본산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위치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메카임

- ~철도산업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철도관련 비즈니스들이 대전역 철도기관청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대전역은 우리나라 전역을 철도생활권으로 묶어 온 국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세종시와 대전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터미널의 시발점으로 광역교통망과 연결이 용이한 지역임

- 철도 운영 면에서도 고속철도역이 정차하고 1일 5만 여명이 대전역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4대 역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대전은 광역교통의 거점기능으로서 KTX 역 기능 강화를 위한 KTX역 주변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됨

▮ 또한 대전역 일대에는 1920년에서 1930년대에 지어진 40여 동의 소제동 철도관사촌과 1950년대 철도보급창고가 원형을 유지한 채 잘 보존되어 있음

- 이러한 근대문화유산들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잘 보존된 것들이며, 우리나라 주거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대전시는 철도보급창고와 철도관사촌의 복원 및 활용사업, 고 김재현 기관사 동상건립과 철도공원화사업, 중앙로 인근에 산재한 근대 건축물들과 연계하는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정하여 관사촌의 일부를 공원 내에 편입시키는 등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하고 있음

▮ 대전도시철도를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역까지 연장해 수도권 전철과 연결하는 대전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세종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망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수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임

▮ 국가교통기간망축과 KTX 운영에 따른 국토의 시공간 단축은 대전세종 도시권을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음



[그림 11-2] 행복도시권 광역철도 설치 계획(안)

▢ **주요 내용**

▮ 대전은 국토 중앙에 위치한 철도중심도시로서, 미래의 철도산업을 선도할 한국철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음

- 대전은 철도로부터 태동한 도시이자,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중심지, 철도와 함께 성장하며 풍부한 문화유산 및 콘텐츠 보유, 많은 유동인구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가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 보유

▮ 이를 위해 대전시의 전략사업으로 대전역 명품역사 개발, 미래 철도박물관 건립,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 등 추진

▮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우송대 등 철도 관련 대학, 소제동 철도관사촌 등 근대 철도문화유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연계

▮ 세종시는 철도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입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중심 역할 수행

▮ (국가적)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이어주는 복합환승 HUB 및 중부권의 新성장거점 역할로 국토균형발전 기여

▮ (광역적) 복합환승센터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비지니스 및 물류의 허브로서 충청권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폭제 역할

▮ (도시적) 고밀도 입체개발 추진으로 교통기능과 도시기능이 통합된 공간으로 원도심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시재생 기여

▮ 이는 대전·세종 중심도시와 인근지역간의 미약한 연계성을 극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또한 낙후지역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3] 철도산업(문화)메카 조성 개념도

7) 대전시-자운대 간 협력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는 2016년 6월 30일 현재, 총19.9㎢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음
- 대전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와 울산에 이은 3번째로 적은 면적으로, 여타 시·도에 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적은 규모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자운대의 지역적 특정으로 인해 대전시는 군사안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음
- 자운대는 유성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주둔지 내에 있는 1개 사령부와 4개 학교기관, 국군대전병원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임
- 자운대는 국방부 직속부대이며 계룡대, 상무대, 기타 잡다한 육직부대들

등과 함께 대표적인 후방 기행부대(기술행정부대의 준말) 중 하나임

- 자운대 지역은 각급 부대 장병과 후반기 특기병 교육생 등 1만여 명이 상주하고, 교육·연구·행정·전투지원·병원 등 다양한 기관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운대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접근할 수 없는 경계와 통제구역이 아니라, 민·관·군이 협력하여 지역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대전의 대표적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 국방자원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또한 대표적인 군시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와 지역민 및 지방정부간에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자운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대부분 육해공군의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이나 민간에 대한 경계의 강도가 전방과 해안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자운대는 지역사회(민)와 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함
- 그러나 자운대와 지역사회, 자운대와 지방정부(대전시, 유성구)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3자 모두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협력사업 추진 또한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이러한 맥락에서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와 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성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자운대와 같이 집합부대(Military Corps Cluster)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인근 계룡대(계룡시) 또는 상무대(장성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민·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명실공히 민과 관과 군이 상생협력 발전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전광역시와 자운대 간 기본적인 관계설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광역시로서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인 군부대가 업무영역의'상이성'과 함께, 도시・지역의 공간에서 나타나는'공통성'을 적절히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함

▮ 제도적 기반 마련

- 자운대를 중심으로 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우선적인 과제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 계룡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치법규(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관·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계룡시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의 제정이 필요함
- 가칭'대전광역시 국방안보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운대가 참여하는 민·관·군 정책협의회 운영을 제도화해야 함
- 민·관·군협력체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민관군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전광역시 비상대비과 내 가칭'민군협력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대전광역시 비상대비과는 자운대(근무지원단)을 정책협의회 기점(허브)으로 삼아 협력체계를 공고히 운영해야 함

▮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자운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사업(프로그램)을 검토해 보면,

① 대전지역에서 민· 관·군 친선교류· 협력기회의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해서 교두보를 확대해야 함

② 군문화 축제 등의 확대가 필요한데, 2019년 처음 개최했던 「자운대 민· 군화합 페스티벌」은 교육사령부 등 18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국방 및 군사교육도시의 특성을 살려 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군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등 특색 있는'밀리터리 축제'로 개최되었음

③ 대전시와 자운대 간 행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를 활성화시켜야 함

④ 지역주민의 위해 자운대가 보유한 편의시설을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임

⑤ 유성구와 자운대 간의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DSI

문화·예술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문화예술 부문 정책 아젠다
3. 문화예술 부문 정책 과제

12장

12장 문화·예술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생활문화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상승

- 생활문화센터 조성(대전시립미술관 내, 둔산1동 내, 한밭도서관 내), 공공도서관 및 공공작은도서관 확충(월평도서관, 원신흥도서관, 만년뜰작은도서관, 별똥별도서관 등)

▮ 소규모 공연의 상시적 개최로 생활 속 문화예술 대중화

- 들썩들썩 원도심, 문화순회 등 연간 100여 차례의 작은 공연 개최
- 2019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특·광역시 중 2위(대전 86.3%/ 전국평균 81.5%)

▮ 대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전시 개최

- 이응노 군상 초연, 생생미술관, 세계유명미술특별전 개최

▮ 예술창작 지원과 문화예술 도시브랜드이미지 강화

- 연간 300건에 가까운 예술창작활동 지원,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와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이응노예술도시 만들기

▮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재생 복원으로 문화도시 브랜드 상승

- 테미오래 개관 운영, 대중문화특화거리 조성, 소제예술창작촌 운영, 원동철공소 특화거리 조성

▮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통한 역사정체성 강화

- '단재' 신채호 선양 사업(동상 제막, 창작공연, 기념교육관 건립 추진), 문화재 탐방(130회),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추진(기본계획 수립중),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건립 추진

▮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과 독립 예술영화 생태계 조성

- 문화콘텐츠 산업 비전선포식, 콘텐츠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예타대상사업 선정), 엑스포과학공원 첨단과학관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과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마을 극장 씨네 인디-유(CINE INDIE-U) 개관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공공도서관별 특화 전략과 생활문화센터의 콘텐츠 강화

- 수원시나 용인시의 사례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별 특화 전략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문화향유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기능. 민선 7시 후반기에는 제2시립도서관도 계획 중인 만큼,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들을 대폭 혁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문화센터의 수요와 공급이 계속 증대할 전망이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SOC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적 콘텐츠 강화 전략이 요청됨

▮ 대전 대표 예술을 바탕으로 대전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관광 자산 구축

- 대전 대표 브랜드 공연이나 고암 이응노의 조명을 통한 예술도시 브랜드 전략은 반드시 깊이를 갖춘 연구와 활용 정책이 뒤따라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민선7기 후반기에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의 유입과 내부의 관심 확산은 자연스레 뒤따를 것임

▮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과 결합된 종합적 문화클러스터전략 기획 추진

- 민선7기 전반기에 추진된 문화재생 지역들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며, 특히 관건은 옛 충남도청사에 얼마나, 어떻게 문화적 기능을 온전히 부여하여 대전 문화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임.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정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역사문화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학 연구 거점 조직 운영

- 대전의 역사와 특성을 연구하는 대전시 차원의 거점 연구 조직 출범으로 대전의 도시정체성 강화와 미래발전의 이념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내 대전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대전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실행력 강화방안이 요구됨

▮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정책 수립 필요

- 민선7기 전반기에 추진되었던 문화콘텐츠 사업들은 주로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요소가 많아 과학도시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의 도시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음.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책들이 구체적으로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화 작업들이 요구됨

[표 12-1] 민선 7기 문화예술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확충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공공도서관별 특화 전략과 생활문화센터의 콘텐츠 강화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시설 운영
대전 대표 예술 브랜드 사업(이응노예술도시, 신채호 창작공연 등)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확산과 대내외 도시브랜드가치 상승	대전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관광 자산 구축으로 내외부 관광객 유치
문화적 도시재생과 문화특화지구 조성	문화적 자산 가치 부여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함양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과 결합된 종합적 문화클러스터 전략 기획 추진
역사문화 유산 발굴과 자산화(3·8민주의거 기념관, 신채호 기념교육관 등)	대전의 역사정체성 강화와 역사문화관광 자원 특화	대전시 차원의 대전학 연구 조직 출범을 통해 지속적 도시 정체성연구 기반 마련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과학도시 · 스마트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먹거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활성화 정책

2. 문화예술 부문 정책 아젠다

▢ 마음껏 창작하고 풍성히 활동하는 문화 예술 창작 도시 대전 만들기

▮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수도권은 물론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은 대전시민이

질높은 문화를 누려야 하는 문화기본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정책적으로 문화창작과 문화향유는 별개의 범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긴밀히 연결되는 문화예술생태계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함.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전망을 보장하고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전이 예술활동 할 맛 나는 도시로 여겨질 때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도 풍요로워질 것임

▢ **다함께 누리고 일상이 즐거운 문화 향유 도시 대전 만들기**

▮ (시민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 향유 기반 확충의 필요성) 대전 시민들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향유의 측면에서 많은 격차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 또한 대전 내에서도 지역별로 문화격차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점차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함. 문화향유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향유 시설들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문화소외계층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함

▢ **근현대 지식문화와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융복합도시 대전 만들기**

▮ (문화도시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각인할 필요성)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길지 않은 도시 형성의 역사를 감안할 때 대전시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그 결과의 대중적 확산은 오히려 더욱 중요한 과제임.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 뒤쳐져 있는 지역학 연구를 본격화하고, 융합적 도시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대전의 강점을 살려 대안적·자생적 문화공동체 활동들에 주목하여 선제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미래지향적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대전 만들기**

▮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서 익히 알 수 있듯이 이제 바야흐로 문화콘텐츠의 시대에 기존에 통용되던 경제적 방향 설정은 전환의 격변기에 놓여 있음. 부존 경제 산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전은 과학도시 기반과 영상제작 시설 등을 활용한 첨단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미래지향적 먹거리를 전문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함

3. 문화예술 부문 정책 과제

1)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우아한 도서관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리는가하면 그 지역의 문화적 감성을 표현해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음

▮ 하지만 대전의 공공도서관은 타 도시에 비춰 전통적 학습공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의 문화향유 욕구를 해소하는 데 온전히 기여하기에는 미흡한 요소가 많아 전체적으로 혁신이 필요함

▮ 대전시에서도 최근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생활문화SOC로서 공공도서관의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등 외부적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유사사례: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용인시 등 경기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그 지역 문화향유의 대표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서관 도시를 표방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대전시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 각각의 도서관을 주제별로 특화하고, 그 지역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으로 지위 부여

▮ 대전시 공공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도서관과 공공작은도서관, 민간작은도서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공조

▮ 1인 학습을 위한 칸막이 공간을 없애고, 창의적 감성과 소통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 재구성

▮ 자원봉사 시스템을 확대하여 다양한 생활주기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커뮤니티 공간과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구비하여 운영

▢ **기대 효과**

▮ 공공도서관 혁신을 통해 부족한 문화향유공간과 문화예술교육공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입체적인 문화향유·문화예술교육의 작은 거점 공간을 대전지역 곳곳에 마련하게 되어 대전시민의 문화적 감성과 능력을 생애주기별로 높일 수 있도록 함

2) 삶을 치유하는 '문화 예술 보건소'

▢ **배경 및 필요성**

▮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시민의 문화기본권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

▮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고, 대전에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대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인 '꿈꾸는 예술터'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공간의 확충은 부진하다고 할 수 있음

▮ 폐교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매입해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예술치유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

- 유사사례: '아난딸로(Annantalo)'는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에 특화된 예술교육기관으로, 1886년 세워진 폐교 건물을 개조해 조성. 우리나라에서도 문체부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통해 성남시 옛 영성여자중학교, 전주시 전주산업단지 팔복동 폐공장 등이 한국판

‘아난딸로’로 거듭남

▢ **주요 내용**

▮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전형 아난딸로 조성 :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모델 구축

- 예술가와 예술강사들이 상주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
- 아동과 청소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대전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육성

▮ 예술치유공간 “예술보건소” 조성 : 유휴시설을 대전 예술치유센터 “대전 예술보건소”로 재생.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및 육성, 예술치유 콘텐츠 확산, 시민문화예술 향유 등 예술치유 및 시민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

- 예술체험을 포함하되 궁극적으로 치유를 지향하는 목적성과 전문성이 강조된 다 장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술 활동을 통한 치유의 자생성 획득 및 심신 안정 예방 효과를 추구
- 특수직군 및 특정집단 대상의 장르통합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센터 거점형 및 찾아가는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 업무 및 생활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회복 지원

▢ **기대 효과**

▮ 갈등 및 재난에 대한 예술교육의 치유·보건적 역할을 통해 대전 시민의 마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됨

▮ 시민의 삶과 밀착된 예술,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예술 거점을 육성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단순한 정서 함양이 아니라 사회 병리까지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3) 대전의 특색을 정립하는 '대전학연구센터'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 대전학은 대전의 도시문화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 대전시민의 문화적 자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임
- ▮ 하지만 대전학 연구는 타 시도에 비해 시 차원의 전문적 연구조직이 부족하여 미래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절실함
  -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지역학 연구

▢ **주요 내용**

- ▮ 대전학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대전학연구센터를 출범하여 대전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수행
- ▮ 지역문화론 교육과정 개설 : 대전 지역의 대학과 상생협력 방안으로서 대전지역 대학 내 지역문화론 교육과정 개설
- ▮ 근대도시와 과학도시 등 대전의 도시정체성에 맞는 위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대내외적으로 확산

▢ **기대 효과**

- ▮ 각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약하는 구심점 형성으로 대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 ▮ 대전의 다양한 특성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 전략에 접목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 도시정체성의 발굴과 확산으로 대전시민의 공동체 의식 고취와 주민 화합에 기여

4) 공동체가 만드는 독립 문화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독립서점, 마을박물관, 마을미디어 등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펼치고 있는 활동들은 소비와 자본의 논리에 전유되기 쉬운 문화적 생태계의 건전성을 환기하고, 지역문화의 자생성을 높이는 보루로서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 현재 대전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공동체는 대전의 문화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존재로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대전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유사사례: 경기도 성남, 부천, 인천 등지에서는 문화공동체 활성화와 문화다양성 특화가 적절히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을 목도할 수 있음.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마을박물관을 자치구의 주요 문화콘텐츠로 활발히 활용중이며,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독립서점과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문화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음

▢ **주요 내용**

▮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확대. 마을미디어 활동가 역량 강화, 대전 미디어강사 인증제 시행, 마을신문과 팟캐스트 확대 지원, 마을미디어 축제 개최

▮ 마을박물관 조성과 활성화 : 석교동 등 주민공동체 운동이 활발한 지역들과 대화동, 관저동 등 급속한 개발 속에서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대전시립박물관이 설립을 주도하고 민간 영역에 운영 주체를 위탁하여 마을박물관을 2030년까지 10곳 이상 조성

▮ 독립서점 활성화 지원 : 독립서점·지역서점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및 육성 사업을 시행. 독립서점을 민간영역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향유 활동의 작은 거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홍보와 이벤트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 **기대 효과**

▮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공연의 장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면서 책과 마을의 역사, 공동체 미디어를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5) 정책별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대전문화영향평가'

▢ **배경 및 필요성**

▮ 지금까지 대전시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문화적 관점의 투여가 부족하여 많은 부작용과 지속불안정성을 야기함

▮ 사업의 질적 강화와 지속가능한 삶과 문화적 가치의 확산, 대전의 문화수준 및 고유의 정체성, 대전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기본권을 고려하여 대전시만의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유사사례: 경기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와 별도로 경기도만의 문화영향평가를 자체 시행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대전의 문화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대전의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실행 시 해당 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 환류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투영

▮ 보다 세분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별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확장

▢ **기대 효과**

▮ 자칫 단기적 이익에 매몰될 수 있는 각종 개발 사업들에 대하여 문화적 가치와 주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업의 질적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임

DSI

관광·체육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관광·체육 부문 정책 아젠다
3. 관광·체육 부문 정책 과제

13장

13장 관광·체육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보문산종합관광개발이나 대청호오백리길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원도심권이나 대청호권 등 대전의 거점이 되는 곳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 방문객 증대를 도모

-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소권 중 보문산은 오월드권(보문산 관광개발권), 대청호오백리길은 대청호권에 해당됨

▮ 효문화 뿌리공원 2단계 조성(2017~2022) 등으로 효를 주제로 하는 전국 유일이자 대전만의 확대된 교육·자연 관광 인프라 마련

- 유교문화 자원을 연계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제2뿌리공원)은 2016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3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임

▮ 2022년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중부권 MICE 산업의 허브 목적지로 대전의 인지도 상승

- UCLG 세계총회: 전 세계 140개 국가 1,000개 정도의 도시, 그리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에서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 스포츠 가치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해 대전의 스포츠 관련 사업과 정책의 종합적 진단과 체계적 관리 강화 기틀 마련

- 주요내용: 스포츠 마케팅 부서의 역할 재정립, 스포츠 관련 사업의 종합적·객관적 진단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스포츠 관련 종합 DB 구축, 대전을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 개발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스포츠 산업 및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적 재교육 시스템 구축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2018~2024) 등으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복합적 공간을 활용한 여가·관광 활동 기능의 확대·강화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따른 기존 한밭야구장은 철거 후 복합스포츠 문화시설(예: AR/VR 가상스포츠 체육관, 어린이·청소년 모험 테마파크 '놀토피아' 조성, 호텔+상업시설, 사회인 야구장 9명 신설조성 등)로 활용 예정

▮ 산업복합형 다목적 체육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목적의 스포츠 시설 확대를 통해 스포츠 선진도시 구현 및 균형적 시민 여가 향유 기회 증가

- 주요 사업명: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동구 성남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오정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 사업,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조성 사업 등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오월드권, 대청호권과 같이 관광자원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험놀이 콘텐츠 조성

- 대전 주요 관광지(대전관광명소 12선): 오원드, 뿌리공원, 엑스포과학공원, 한밭수목원, 계족산황톳길, 대청호반, 장태산휴양림, 대전둘레산길, 동춘당, 대전문화예술단지,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유성온천

▮ "효문화 뿌리공원"처럼 전국 유일이자 대전만의 특색을 지닌 테마를 관광자원으로 확충하여 활용

- 2019년 대전관광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2020): 대전의 추천 장소(1위 성심당), 추천 음식(1위 성심당 빵, 2위 칼국수), 대전관광에 대해 생각나는 이미지(긍정: 과학도시, 교통의 중심지 / 중립: 성심당(빵), 엑스포과학공원, 유성온천)

▮ 국제회의 개최 시 참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전형 관광기념품 R&D 투자

- MICE 참가자의 소비지출 규모는 일반 관광객의 소비지출 규모의 2.8배 수준으로(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 목적 개최지역 재방문 의사의 경우 외국인(4.23점)이 내국인(4.00점)보다 높음(한국관광공사, 2019)
- 2019년 대전관광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2020): 추천 기념품에 대한 응답 비중이 낮아 대전을 대표하는 기념품에 대한 방문객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스포츠 분야의 S/W(예: 스포츠 마케팅)와 H/W(예: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효율적인 강화 및 시설 활성화 측면의 다양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혁신주체(콘트롤타워) 설립·운영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ISS: Korea Institute of Sports Science):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산하기관으로 스포츠 관련 다양한 대상과 목적(예: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과학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 국민의 행복 실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산업육성 등)을 지원·달성하기 위해 설립됨

[표 13-1] 민선 7기 관광·체육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대청호오백리길 관광인프라	거점형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 수 증가	관광자원의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체험놀이 콘텐츠 확충
효문화 뿌리공원	2단계 조성을 통해 대전만의 교육·자연 관광인프라 확대	대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관광자원 확충
UCLG총회 유치	총회 개최를 통해 중부권 MICE 허브 목적지로 인지도 상승	외국인 관광객 니즈 충족을 위한 대전형 관광기념품 구축
공격적 스포츠 마케팅 강화	스포츠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체계적 관리 강화	S/W와 H/W의 효율적 강화 및 시설 활성화 측면의 다양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혁신주체(콘트롤타워) 확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스포테인먼트공간 조성을 통해 복합적 여가·관광 활동 확대	
산업복합형 다목적 체육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스포츠 시설 확대를 통해 스포츠 선진도시 구현 및 균형적 시민 여가 향유 증가	

2. 관광·체육 부문 정책 아젠다

▢ **관광 아젠다: 장소매력 증대를 통해 중부권 허브 관광목적지로 도약하자**

▮ **(대전의 특색(강점)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의 필요성)** '교통의 중심지'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대전이 지닌 특색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부족한 상황임. 결국 칼국수나 성심당 빵과 같이 음식 자원이나 과학도시의 이미지와 같이 대전이 지닌 강점 테마를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다양한 분야별 대전의 강점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의 관광지로 변화시켜 기존의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관광자원의 '점, 선, 면' 기능 강화의 필요성)** 시에서는 '대전관광명소 12선(2012년 선정)'이나 '대전의 꼭 가볼만한 곳 40선(2015년 선정)' 등을 정하여 홍보하였지만, 점에 해당하는 장소만으로는 현재 대전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전을 하나의 관광목적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점(관광지)과 점(관광지)을 연결하여 선(관광코스)을 만들고, 선(관광코스)과 선(관광코스)을 연결하여 면(관광목적지)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함. 결국 체험놀이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점의 기존 기능을 강화시킨 후 선과 면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됨

▮ **(관광을 포함한 도시 이미지 강화의 필요성)** '대전다움'이나 '대전스럽게'와 같이 대전만의 성격을 갖출 필요가 있는 가운데(윤설민, 2018b), "관광객을 대전이라는 자리(SEAT: Science tourism, Education tourism, Art tourism, Transportation tourism)에 앉히려면 적극적인 판매(SALE: Science tourism, Education tourism, Art tourism, Transportation tourism)의 자세가 필요하다(윤설민, 2019b)"와 같이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노잼도시'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관광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미지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체육 아젠다: 과학도시 기반을 통해 대전형 스포츠 선도모델을 구축하자**

▮ **(대전 스포츠의 S/W와 H/W 관련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 축구, 야구, 배구 등 다수의 프로스포츠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환경에 비해 스포츠 관련 DB 등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황 진단이나 대안 모색은 어려운 상황임. 아울러 충주(국제무예마스터십)나 춘천(국제마라톤대회)과 같이 도시의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에 비해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는 전무한 상황이며, 스포츠시설 인프라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음. 결국 스포츠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과학도시' 장점을 충분히 반영한 스포츠 분야의 R&D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3. 관광·체육 부문 정책 과제

1) 관광 분야 핵심과제: 「밀토피아(밀가루 체험파크)」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여행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음식 관광(즉, 식도락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높다는 것임(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2020)

▮ 한편, 식도락 여행지 조사결과 대전시는 하위권(56.3점, 17개 광역시 중 14위)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의 먹거리로 빵(1위)과 칼국수(2위)가 우선순위로 뽑힘(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2020.3.4.)

▮ 이에 대전의 음식 자원 특징으로 거론되는 빵이나 칼국수 등의 공통점을 관광 자원화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가칭)「밀토피아(밀가루 체험파크)」 조성을 제안함

* 유사사례: 밀시티박물관(Mill City Museum, 위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도톤보리 코나몬(밀가루 음식, コナモンミュージアム) 뮤지엄(위치: 일본 오사카)

* 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2020)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밀가루 관련 테마파크는 기사(예: 매일경제, 2020.3.29.; 미디어붓, 2020.3.29.; 한국경제, 2020.3.29.)로도 언급되기도 함

▢ **주요 내용**

- 교육 공간: 밀가루를 활용한 직업(예: 제빵원, 제과원, 피자조리사 등) 체험(사례: 세계적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
- 체험 공간: 밀가루 캐릭터와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빵/칼국수), 촉감 놀이교실, 밀가루 던지기 등
- 전시/관람 공간: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 생산공정 견학, 밀가루아트 공연 관람
- 음식 공간: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 판매(푸드코트), 전국 유명 빵집과 칼국수 가게를 활용한 음식 판매

▢ **기대 효과**

- 음식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역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대전이 지닌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화 가능
- 음식 테마 서비스를 토대로 고객 유치를 위해 기업화시킨 테마파크를 갖춰 음식관광 자원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 관련 체험 요소 확대 가능
- '밀가루'라는 음식 소재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장소이면서 유일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

2) 체육 분야 핵심과제: 「대전형 스포츠랩」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의 현재 스포츠 관련 상황(예: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인력 양성 및 관리 부족, DB 구축 결여)을 고려하였을 때 중심이 되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임

- 대전의 스포츠 관련 조직을 보면 스포츠 관련 대상의 범위가 중복적이거나 S/W와 H/W의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연구 등의 R&D 기능의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표 13-2] 대전의 스포츠 관련 조직 현황

조직명	주요사업
대전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체육진흥, 시민체육 활성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체육교류대회, 체육행정 내실화, 체육시설 운영 등
대전스포츠과학센터[7]	시 소속 엘리트선소(초/중/고/대학/일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전문체력, 심리/역학검사, 훈련/기술 프로그램 및 현장밀착지원 등 체계적 스포츠과학훈련 프로그램 제공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시의 4개 분야(환경시설, 체육시설, 장사/복지시설, 도시기반시설)의 공공시술문의 효율적 관리·운영, 고객의 편익 도모 및 복리증진
대전체력인증센터	시민을 위한 과학적 체력 측정,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에 의한 체계적 체력관리 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육시설, 프로그램, 인재 양성,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체계적 스포츠 시스템 관리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대전의 스포츠 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대전형 스포츠랩」 조성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시설 확충·관리: 공공스포츠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 전략 수립, 기타 필요 스포츠시설 검토

▮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 산업 분야 구성원 교육,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7) 지역스포츠과학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원으로 현재 전국 10개시도(2015년: 대전/서울/광주, 2016년: 대구/경기/전북, 217년: 인천/충남, 2018년: 전남/제주)에서 운영되고 있음

▮ 지도자/선수 발굴·육성: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DB 구축·관리: 대전시 스포츠 현황 파악, 정확한 진단 분석 등

▮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개발(예: 뉴스포츠[New Sports][8] 국제 대회), 국제교류 활성화, 지역 내 프로스포츠 활성화

▮ 연구: 대전시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을 통한 연구 지원

▢ **기대 효과**

▮ H/W(시설)뿐만 아니라 S/W(프로그램, 사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증진

▮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등의 일반인을 위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포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확보

▮ 체계적 조직에 의한 접근과 관리를 통해 대전의 스포츠 현황에 대한 종단적 진단과 처방 가능

3)「대전관광 FanEx 12선」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은 자연환경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잘 확보되어 있어 연계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편임

- 대전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는 계족산황톳길이나 장태산 휴양림이 있고, 대전역을 기점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

▮ 다만 구별 관광자원의 분포를 보았을 때 관광자원의 대부분이 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대전관광명소 12선(오-월드, 뿌리공원, 엑스포과학공원, 한밭수목원, 계족산 황톳길, 대청호반, 장태산휴양림, 대전둘레산길, 동춘당, 대전문화예술단지,

8) 올림픽 또는 국제경기의 메이저 스포츠(예: 축구, 야구 등)가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를 대표하는 용어로(에이블뉴스, 2014.9.26.), 기존의 대중적 스포츠 종목을 결합 또는 변형시켜 행하는 새로운 스포츠(예: 미니골프, 플라잉디스크, 스피드민턴, 족구, 풋살 등)를 의미함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유성온천)을 보더라도 대체로 정적인 형태의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자원임

▮ 이에 기존 대전관광명소 12선의 특징에 맞는 활동형·인공형 체험놀이 콘텐츠를 각각 개발·연결하여 관광객의 체험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칭)「대전관광 FaxEx 12선」 사업을 제안함

- 예) 체험시설(윤설민, 2019a): 대전관광명소 12선 중 엑스포과학공원 내 과학체험 시설을 유치함. 가령 인공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통해 몸으로 중력을 느낄 수 있는 미국의 아이플라이(iFLY)와 로켓발사 체험을 연상시키는 미국의 스릴 타워(Thrill Tower)를 설치하여 몸으로 과학 관련 체험을 놀이화시킴
- FanEx(발음: 패넥스[9]) 12선: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12가지 체험(Fantastic experience 12)과 12가지 체험을 통해 대전의 팬 만들기(Fan experience 12)라는 이중적 의미 부여 가능

▢ 주요 내용

▮ 1단계(진단): 대전관광명소 12선 내 방문객 반응을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 QR 코드 등을 활용하여 대전관광명소 12선 각각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축적하여 활용

▮ 2단계(개발): 대전관광명소 12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필요 체험놀이 콘텐츠에 대한 단계별 R&D 투자

- 대전관광명소 12선을 계절별, 감각별 등의 기준을 통해 자원에 대한 분류 작업을 거친 후 접근

▮ 3단계(브랜드화): 대전관광명소 12선 내 12가지 체험놀이 콘텐츠를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하여 클러스터화로 확대

9) 종합 인테리어 가구 기업인 에넥스(enex)와 발음이 유사하여 친근감을 제공할 수 있고, 입에 쉽게 붙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13-1] (가칭)「대전관광 FanEx 12선」사업의 단계별 접근도

▢ **기대 효과**

- 12개의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라는 점(point) 위주의 단편적 접근에서 탈피하고, 12개의 체험놀이 콘텐츠를 선(line)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체험 클러스터처럼 면(plane)으로 관광자원 확대 가능
- 기존 자원(대전관광명소 12선)의 기능(역할)을 추가확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노잼도시'와 같이 '대전=재미 없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전관광명소 12선에 위치한 '(가칭) 대전관광 FanEx 12선을 체험하기 위해 대전에 간다'라는 긍정적 인식 전환 가능

4)「대전형 굿즈랩」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이후로 대전만의 기념품 개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현재까지도 대전을 상징하는 마그네틱조차 전무한 상황임
  -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2019년부터 '대전 굿즈' 사업을 본격화하여 여러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용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림 13-2] 대전의 굿즈 디자인 개발 사례

자료: 대전마케팅공사 내부자료

▮ 이런 상황에서 성심당의 빵이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자원이자 하나의 쇼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대전을 대표하는 기념품 라인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단순 디자인 개발과 판매의 역할 이상으로 굿즈를 활용하기 위해 (가칭)「대전형 굿즈랩」 조성을 제안함

- 대전의 슬로건, 대전의 풍경 이외에 지역명의 언어별(대전, 大田, Daejeon) 디자인, 캐릭터(꿈돌이, 한꿈이) 등을 활용하여 기념품 라인업 확충



[그림 13-3] 대전의 영문 표기(DAEJEON) 활용 예시

자료: 윤설민(2018a), 〈2019 대전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대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p. 80

▢ **주요 내용**

▮ 대전 굿즈에 대한 디자인 개발, 굿즈 라인업 관리 등 굿즈 R&D 투자

-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2019.5.)을 통해 선정된 대전 굿즈는 지역 청년 작가들(참여: 5개 업체)이 기획해 로컬 상품으로 제작(15종 1,000여개의 상품)되었음

  ■ 기획자(대니그라피): 대전굿즈 총괄책임을 맡은 곳으로 개발된 대전굿즈를 로컬 소품샵(상호명: 머물다가게)을 통해 판매

  ■ 참여업체1(다정한작업실): 디자인·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실로, 엽서, 메모지, 노트, 손거울 등을 제작

  ■ 참여업체2(도시여행자):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라이프 스타일 서점(상호명: 다다르다)을 운영하는 곳으로, 핸드폰 케이스, 엽서 등을 제작

  ■ 참여업체3(비베렌토): 우드·스테인드글라스 작가로 상품 제작·체험 교실을 운영하며, 엑스포다리 썬캐쳐, 한빛탑 캔들 홀더, 꿈돌이 뱃지, 마그네틱 등을 제작

  ■ 참여업체4(아트샵21): 대전 기반의 젊은 수공예 작가 네트워크로 전시&마켓 및

문화기획 활동을 하는 곳으로, 대전명소 에코백, 꿈돌이 유리컵, 한빛탑 가죽키링, 한빛탑 카드지갑 등을 제작

-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굿즈 판매, 대전 굿즈 DIY 체험
- 대전 굿즈 디자인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굿즈 관련 창업 및 네트워킹 활동 지원

▢ **기대 효과**

- 메이커 스페이스나 리빙랩의 기능처럼 대전 굿즈에 대한 체계적 개발·관리를 통해 대전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이미지의 수단으로 대전 굿즈 활용 가능
- 대전 굿즈 제작 등에 따른 판매 이외에 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굿즈 관련 수익 창출 효과 도모
-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효과 도모

5) 「명예의 (대)전당」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타 시도(예: 대구, 인천, 부산, 서울)에 비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대전의 명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중요함(윤설민·염인섭, 20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예: 방송·연예, 문화·예술, 스포츠 등)에서 대전과 관련된 인물들은 배출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종합적 인물 박물관을 조성하여 이에 대한 역사와 기록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에 대전을 빛낸 사람들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가칭)「명예의 대전당」 조성을 제안함
  - 미국 스포츠(MLB, NBA)에서도 선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H/W 시설로 갖추고 있음
  - (가칭)명예의 (대)전당: 일반적인 명예의 전당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를 붙여 대전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부여함

▢ **주요 내용**

▮ 전시/관람 공간: 분야별 인물 스토리 및 관련 영상, 소장품 및 사인 전시, 핸드프린팅 및 조각상

▮ 체험/판매 공간: 홀로그램 및 밀랍인형 포토존, 분야별 인물과 함께 하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체험

- XR은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등의 가상현실 기술을 통합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의미함

▮ 교육/판매 공간: 분야별 인물 관련 기념품 DIY 제작 및 기제품 판매

▢ **기대 효과**

▮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한곳의 시설에 집중시킴으로 인해 지역 최초로 명예의 전당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대전만의 정체성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가능

▮ 대전과 관련된 인물 중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 극대화 가능

6)「폐(유휴)공간 체험관광자원화」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에는 (구)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 3호, (구)터널, (구)지하보도, (구)육교 등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내부공간이 일부 존재하고 있음

- 대전 내 유휴 공간 시설물(윤설민·한상헌·염인섭, 2019): (구)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 3호(1955년 준공), (구)추부터널(1953년 준공), 둔지미 지하보도(1993년 준공), 정부청사 지하보도(1993년 준공), 둥지 지하보도(1993년 준공), 시청 지하보도(1993년 준공), 태평 지하보도(1992년 준공), 대전육교(1993년 준공)

- 기타 대전교도소 이전계획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옛 교도소 공간이나 대덕구 폐공장 부지 등을 활용 가능 자원으로 고려

▮ 이러한 상황에서 동구는 폐교한 옛 효평분교를 매입하여 대청호 생태관광 허브센트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산군과 협의를 통해 하소동 추부터널에 VR·AR 체험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에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대전 내 유휴공간을 관리·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칭)「폐(유휴)공간 체험관광자원화」 사업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1단계(진단): 폐(유휴)공간의 물리적 상태나 공간적 특징 등에 대해 전문가 진단을 통해 방문목적성 차원의 활용가능성 파악 및 물리적 보완 실시

- 자치구별 도시재생 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폐(유휴)공간에 대한 조사 발굴을 사업화하여 병행

▮ 2단계(개발): 공간적 특징을 고려하여 필요한 테마(예: 박물관, 미술관, 숙박 등)에 대한 단계별 R&D 투자

- 가령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터널이나 지하보도와 같은 실내 공간에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하여 미니 갤러리로 활용



[그림 13-4]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예시

자료: 윤설민·한상헌·염인섭(2019), 〈고암 이응노를 활용한 대전의 예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p. 73

▮ 3단계(브랜드화): 폐(유휴)공간 체험관광자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하고, 클러스터화로 확대

▢ 기대 효과

▮ 활용하지 않은 공간을 재사용하여 관광 관련 자원으로 생명력을 부여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선도모델로 활용

- 관광자원의 부족 현상을 느낄 수 있는 대전에서 관광자원의 목록(Inventory)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
-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테마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문객의 이색적 체험 제공 가능

7)「갑천변 교통관광자원화」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갑천변 주변에 사이언스콤플렉스가 개발되고 있고, 여름철을 중심으로 수상스포츠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사이언스콤플렉스 개발과 함께 한밭수목원까지 연결되는 공중 보행 전용 산책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 따라서 갑천변의 랜드마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의 방문 수요와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추가적 관광자원 확충으로 (가칭)「갑천변 교통관광자원화」사업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대전의 영문(DAEJEON) 중 “ON”을 활용하여 갑천변 주변에 다양한 테마형 교통관광 체험 수단을 개발(윤설민, 2018a)
  - (가칭)ON-Boat: 전동형 수상교통 관광상품(사례: 창원의 용지호수 무빙보트)
  - (가칭)ON-Ferry: 갑천을 연결하는 나룻배 스타일의 수상교통 관광상품(사례: 강릉의 경포가시연습지 내 나루터)
  - (가칭)ON-HAB: 열기구(HOB: Hot Air Balloon)를 활용한 해상교통 관광상품(사례: 일본의 사가시 세계 열기구 축제)
- 그 외에 볼거리 시설로 레이저 또는 라이트를 활용한 아트 쇼 시설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사이언스콤플렉스 개발에 따른 스카이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
  - 레이저 & 라이트 아트 쇼(윤설민, 2018a): 건물 옥상이나 수변 위

구조물을 설치하여 활용(사례: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 싱가포르의 레이저 분수 쇼 '스펙트라')

- 체험시설(윤설민, 2019a): 단양 스카이워크처럼 전망대까지 급커브 경사를 조성하여 도보로 올라가고, 이후 내려올 때는 슬라이딩 기구를 이용하여 내려올 수 있도록 설치(사례: 올라가는 체험-덴마크의 글리셀휄드 클로스터 스코브 내 The Treetop Experiences / 내려가는 체험-미국의 스카이 슬라이드)



[그림 13-5] 갑천변 주변 교통관광자원화 사업 배치도

▢ **기대 효과**

▮ 갑천변과 접근성이 좋은 대전문화예술단지(대전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와 함께 관광자원 확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갑천변 주변에 세워지는 사이언스콤플렉스의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자원 확충을 통해 야간관광을 도모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 등 관광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음

8) 관광 분야 광역과제:「충청권 관광 연합」 구성

▢ **배경 및 필요성**

▮ 관광은 관광객의 이동을 전제로 발생하는 산업으로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관광 관련 물리적 환경(인프라, 시설, 재정, 기술 등)이나 소프트웨어 환경(숙련된 관광 구성원)은 편차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권의 관광 네트워크를 시스템화(Orgware)하여 각 지역별 물리적·인적 자원의 힘을 모아 협업할 수 있는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의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며,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제1호),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제2호),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제4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윤설민, 2019b)
- 현재 대전의 경우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 2030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세종, 충북, 충남과 충청권 업무 협의를 하고 있음

▮ 이에 충청권 상생 관광 과제를 발굴하고, 광역 차원의 관광 브랜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충청권 관광 연합」 구성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충청권 상생과제 도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 관련 패스(교통, 숙박, 음식점, 관광지 등) 개발 등

- 대전이 포함된 충청권 광역관광사업 주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지역을 잇는 충청유교문화권, 대전, 공주, 부여, 익산 4개 지역을 잇는 백제문화권, 대전과 충북에 위치한 대청호(오백리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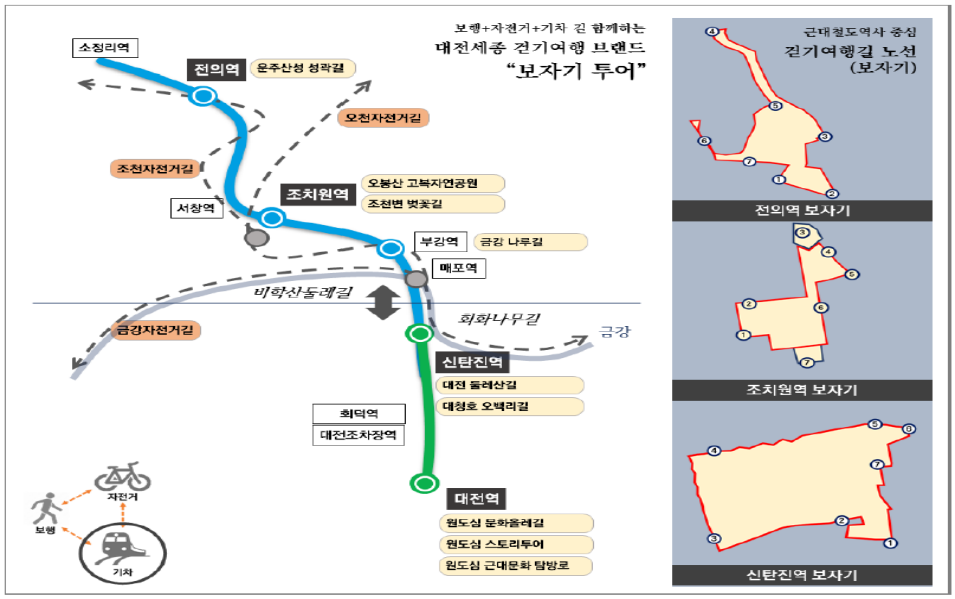
▮ 광역권 관광 브랜드화: 대전-세종, 대전-충북 등 대전을 중심으로 광역권 관광 브랜드 개발

- 예1)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5개년(2017~2021년) 사업으로, 3~4개 지자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대표 관광지로 집중 육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총 10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테마가 구성되어 있음

[표 13-3]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테마 및 지역

권역	테마(지역)	권역	테마명(지역)
1	평화역사이야기 여행(인천/파주/수원/화성)	6	남도바닷길(여수/순천/보성/광양)
2	드라마틱 강원여행(평창/강릉/속초/정선)	7	시간여행101(전주/군산/부안/고창)
3	선비이야기 여행(대구/안동/영주/문경)	8	남도맛기행(광주/목포/담양/나주)
4	남쪽빛 감성여행(거제/통영/남해/부산)	9	위대한 금강역사여행(대전/공주/부여/익산)
5	해돋이 역사기행(울산/포항/경주)	10	중부내륙 힐링여행(단양/제천/충주/영월)

- 예2) 염인섭 등(2020)은 보행+자전거+기차 길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지역성 기반의 걷기여행길인 (가칭) 「보자기 투어」를 브랜드로 제안



[그림 13-6] 갑천변 주변 교통관광자원화 사업 배치도

자료: 염인섭·한상헌·윤설민·이정범·이은재·지남석(2020), 〈대전·세종 걷기여행길 장소브랜딩 강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p. 169

▢ **기대 효과**

▮ 충청권 지역과의 상생 관계(파트너) 도모를 통해 충청권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

▮ 4개 지역의 관광 부문에 대한 장단점 파악이 가능하고, 광의적 차원에서 충청권 관광 대응 가능

▮ 4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소프트웨어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조합을 개발할 수 있기에 상품화 전략 수립 용이

9) 체육 분야 광역과제:「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 개최

▢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말 기준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506개소(면적: 2,225,222㎡), 세종은 113개소(면적: 528,275㎡)로 나타남(e-나라지표 홈페이지)

▮ 다만 체육시설 보유에 비해 대전과 세종 모두 국제 또는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보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유치 경쟁이 치열한 메이저 스포츠보다는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뉴스포츠를 활용하여 가칭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를 대전과 세종에 격년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주요 내용**

▮ 1단계(진단): 한국뉴스포츠협회 기준 뉴스포츠 종목 중 단순 이벤트성을 제외하고, 대중적이면서 지속적인 참여 도모 및 개최가 가능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류

▮ 2단계(개발): 실내·외 개최 환경을 토대로 종목별 뉴스포츠 대회 발굴

- 시설의 경우 1차적으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세종시설공단, 기초자치단체 내 생활시설을 활용

▮ 3단계(개최): 격년제(예: 홀수년 대전 개최 시 대세 뉴스포츠 대회→짝수년

세종 개최 시 세대 뉴스포츠 대회)로 개최하여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

- (가칭) 대세/세대 뉴스포츠 대회: '대세/세대'는 대전과 세종의 앞글자를 붙인 것으로 '대세'의 경우 '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흐름'을 뜻하는 대세(大勢, general trend)와 발음이 같고, '세대'의 경우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뜻하는 세대(世代, generation)와 발음이 같음. 즉, 뉴스포츠를 통해 대전-세종의 스포츠 흐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뉴스포츠를 통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는 이중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스포츠 분야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대전과 세종이 함께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뉴스포츠라는 틈새시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포지셔닝 전략으로 활용 가능

▮ 뉴스포츠라는 기존 종목을 대전과 세종의 기존 시설에서 이벤트(대회)化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와 가심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개최 가능

▮ 대전은 대전역, 세종은 인근 오송역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뉴스포츠 대회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참가율 제고 가능

DSI

환경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환경 부문 정책 아젠다
3. 환경 부문 정책과제

14장

14장 환경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으로 도심하천의 건천화 완화,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빗물의 관리로 인한 침수 등의 재난을 예방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둔산·월평 일원 2.56 km2에 저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등 도심의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물환경 개선 사업 실시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맑은물재생센터 조성”으로 갑천하류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존의 악취와 같은 환경피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한 KDI의 적격성조사 통과 및 대전시의회 동의안 가결
- 추후과제 : 환경시설의 집적화 및 주민친화형 환경시설의 명소화로 국내·외 견학프로그램 조성

▮ “먼지먹는 하마 플랜” 으로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영향을 최소화

- 주요 내용: 분진흡입차 신규 도입 운영, 노면청소차 활용 확대,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사업 확대,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공사장 및 산업시설 먼지 배출량 관리 강화, 도시 생활공간 내 대기오염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숲길” 추진으로 기후조절의 개선 및 건강한 자연생태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

- 주요내용: 둔산지구를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연계한 대상지를 확보. 대전

센트럴파크와 연계하여 바람길 분석 및 주요 단절지점에 대한 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 야생조류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

▮ 그린 네트워크 “센트럴파크” 조성으로 대전광역시의 랜드마크 역할 부여 및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한 시민들의 쉼터 제공

- 주요기능 : 둔산지역의 획일적 도시계획으로 인한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복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적응 및 공원이용율 제고, 도시 숲 회복 및 공원 이용 활성화, 도심열섬화 및 미세먼지 등 심화되는 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최고의 도시”로 육성

▮ “자원순환에 의한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전국적인 폐기물 대란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보

- 대전광역시 제2매립장 조성: 기 확보된 부지의 순환가능 매립장 조성
- 추후과제 : 위생매립장,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바이오에너지센터, 자원순환단지 등의 설치 및 기능 강화로 대전광역시 자체적인 폐기물처리 능력 증대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 “3대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걷고 싶은 도심의 하천 조성

- 활동하는 도심하천 : 캠핑장, 수상무대, 자연학습장, 마라톤코스, 물놀이장, 친수계단 등 적극 활동하는 하천공간 마련
- 함께하는 행복하천 : 산책로, 관찰데크 등과 같이 도심의 자연을 생태계와 함께하는 행복하천 마련
- 배려하는 생태하천 : 감돌고기, 미호종개, 수달, 백로 등 대전에 서식하는 보호종의 활동을 위한 보호구간 지정 및 서식여건 마련
- 추후과제 : 3가지 하천의 분류 및 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의 종합관리

▮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 도시”의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율의 증대 및 관련산업의 육성

- 추진과제 : 아파트단지 미니태양광 도입, 공공청사의 태양광 도입 증대,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

▮ “대전광역시 도심 생태축 구축”에 의한 자연 속 도시의 모습 구현

-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속적인 자연환경조사 수행, 산림·휴양·치유 인프라의 확충 등 생태가치를 높이는 체계적인 자연환경 관리 및 환경교육의 수행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수도 대전” 만들기(걱정 없는 환경수도 대전)

- 도심침수 대비: 침수 우려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침수예보 체계 마련
- 악취영향지역 정비: 산업단지, 노후화된 하수관로, 갑천가동보 등 악취 취약지역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도출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유해물질을 배출의 상시 모니터링 및 사고안내 체계의 구축
- 생활환경오염 종합계획: 라돈, 석면, 환경성질환, 빛 공해, 교통소음, 악취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관리
- 폭우, 폭염 대비계획: 기후변화에 심해지는 폭우, 폭염 관련 대응의 종합계획수립

[표 14-1] 민선 7기 환경 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친환경 물순환 선도도시	도심의 빗물관리로 인한 자연회복율 개선	물순환 효과 및 관리를 위한 이행방안 구축
주민친화형 맑은물재생센터 건설	갑천하류 및 금강의 수질 개선 및 기존도심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친화형 환경시설 홍보를 위한 견학프로그램 구축
그린네트워크 센트럴파크 조성	대전광역시 허파 및 휴식공간으로의 중심 역할 수행	도시의 자연화율 증대를 위한 관리방안 지속 수립
3대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전광역시 랜드마크로서 하천의 임무 개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모니터링, 관리방안 수립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전광역시 에너지 자립에 기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지원 방안 및 테스트베드 참여방안 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수도 대전	대전광역시민이 원하는 생활의 질 개선 위한 기초인프라 완비	안전 및 생활의 질과 관련한 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2. 환경 부문 정책 아젠다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대전을 만들자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및 적응의 필요성) 대전광역시 최근의 기온변화를 보면 온난화의 영향으로 약 50년간 평균기온 1.8℃, 최고기온 1.4℃, 최저기온 6.1℃가 상승하는 등 평균기온 및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음. 대전광역시의 최근 약 30년간 기후변화 관련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키워드 노출 횟수는 3,826건이며 대부분 2000년 이후에 보도가 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로 “대전 폭염”(54%), “대전 집중호우”, “대전 황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에 시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 개선을 위한 폭염, 집중호우 및 미세먼지(황사)에 대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미세먼지에 의한 생활건강 대응의 필요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인체건강에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의 경우 특히 초미세먼지라 할 수 있는 PM2.5의 나쁨이상 일수가 겨울철에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OECD 국가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에 국내 도시 44개가 포함될 정도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표 14-2]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농도 및 나쁨이상 일수

(단위 : μg/m3, 일)

구분	측정위치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PM2.5	둔산서로 84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연평균농도	-	-	-	20	21	29
		나쁨이상일수	-	-	-	31	22	44
PM10	둔산서로 84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연평균농도	41	44	41	41	42	34
		나쁨이상일수	25	21	16	13	12	28

자료 : 평균농도(에어코리아, 대기환경 월간/연간보고서), 나쁨 이상 일수(에어코리아, 최종확정 측정자료 조회), http://www.airkorea.or.kr, 2019년은 1월1일에서 11월30일의 측정자료를 나타냄

▢ **살고 싶은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자**

▮ (하천을 중심으로 한 물순환관리 체계 완성의 필요성) 대전광역시 주요 하천지점의 수질은 개선되었지만 도심의 곳곳에서 배점오염 배출 및 불명오염원의 존재로 안정적인 생태계 환경 유지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더불어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개발로 근교 농촌지역의 녹지 감소와 불투수면 증가 등 도시 전체의 물순환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불투수면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지속적인 물환경 개선정책 추진 필요함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체계 훼손과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물환경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

▮ (도심 녹지공간 확대의 필요성) 대전광역시 전체 공원면적은 25,024천m2로 전년대비 약 0.7%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면적은 16.47 m2로 전년대비 약 0.7% 감소함.

-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의무화에 따라 2019년에 대전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연동 가능성
-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바람길 분석을 통한 바람길 생성 산지와 단절된 녹지축 연결 계획,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 노력

▮ (공원 속의 도시 조성 필요성) 대전광역시에는 총 3,028종의 동·식물 및 24종의 법정보호종 분포 확인됨.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깃대종 선정(하늘다람쥐와 이끼도롱뇽, 감돌고기)하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이에, 매년 주요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생태계 변화 관찰 모니터링 수행 및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14-3] 대전광역시 생태계변화 관찰 조사대상지 현황

대상 지역	주요 서식 생물종	지역 특성	조사 년도
대청호 추동습지	수달(멸종1급, 천연기념물), 흰목물떼새(멸종2급)	습지보호지역(2008.12. 26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2017년
유등천	수달(멸종1급, 천연기념물), 감돌고기(깃대종)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2017년
장태산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깃대종) 등	깃대종 서식지	2017년
계족산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왕벚나무(멸종위기), 주목(취약종)	양호한 산림 분포(대전 핵심생태·녹지축)	2017년
갑천	수달(멸종1급,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조롱이(천연기념물)	자연하천의 안정된 생태계 보유(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지역)	2018년
식장산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멸종2급, 깃대종), 왕벚나무(멸종), 주목 금붓꽃(취약종)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깃대종 서식지	2018년
금수봉	삵(멸종2급), 수달(멸종1급), 너구리, 고라니,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2018년
보문산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멸종2급, 깃대종), 수리부엉이(멸종2급), 남생이(멸종2급)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서식지 깃대종 서식지	2018년

▢ 자원이 순환하는 스마트환경을(폐기물 유출 제로 도시를) 만들자

▮ **(폐기물 순환의 효율 향상-신재생에너지 확보 필요성)** 대전광역시의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0.929 kg/일/인로 7개 특광역시 평균인 0.859 kg/일/인보다 높게 나타나 미흡한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나타냄. 처리방법 중 매립이 17.4%, 소각이 17.4%로 재활용 비율은 65.2%에 머무름.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 처리와 폐기물이 자원으로서 갖는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자원순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 '3R (Reduce, Reuse, Recycle)'에서 회수(Recovery)를 포함하는 가치상향형 자원순환 '4R'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폐기물 관리목표 측면에서도 기존의 '2E Goal (Environment, Economy)'에서 '4E Goal (Environment, Economy, Energy, Employ)'로

변화가 이루어짐. 대전광역시 또한, 현재 직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환경기술 트렌드'로써 『폐기물 기반 자원순환 (순환경제)
→ '폐자원에너지화: Waste to Energy'와 '폐자원 업사이클링: Waste upcycling'』로 폐기물 관리 방향을 둘 필요가 있음

▮ **(폐기물의 자체 활용·처리·처분에 의한 폐기물 유출 제로화 필요성)** 근래 플라스틱, 비닐,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임.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있어서 폐기물의 투기, 방치 및 불법 매립은 생활환경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인자임. 이에, 유기성 폐기물의 무단투기, 미부숙 퇴비의 유통 및 방치, 폐기물의 방치, 불법투기, 비닐·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수출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체계 강화 해야 할 것임

폐기물 관련 신문기사
- ○○시 '불법투기 음식물류 폐기물 투기업체' 적발 (충북일보, 2019.12.18.) - '국제적 망신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막을 규정 미비 (연합뉴스, 2020.01.22.) - 폐기물 정책 7만4천톤 거대한 쓰레기산 "악취·먼지에 못 살겠다" (연합뉴스, 2018.11.30.) - 퇴비 부숙도 시행 코앞... 이대로 문제 없나 (농업인신문, 2020.03.20.)

3. 환경 부문 정책과제

1) 주민친화형 맑은물재생센터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및 인근지역 악취 확산 등의 문제 발생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 등의 대응 필요

- 이전 적격성 조사 통과 및 대전시의회 동의안 가결로 하수처리장 이전 급물살

▢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 위치/면적 : 우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 144천 m2
- 시설용량 : 하수처리시설 650,000 m3/일 + 분뇨처리시설 900 톤/일
- 사업기간 : 2017년 ~ 2025년 (공사기간 : 2021년 ~ 2025년)

▮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금강유역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방안 (시설설치 등) 마련

▮ 맑은물 재생센터 상부를 활용한 주민친화 공간 조성 및 대전광역시 친환경 시설과 연계한 그린시티투어 및 선진 벤치마킹 프로그램 마련

- 대표시설로 금고동 하수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바이오에너지센터, 환경에너지종합타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설, 자연생태공원, 시민체육공원, 그린타워 전망대, 그린캘러리 등
- LID 체험교육장으로 빗물정원 등 샘머리공원의 Rain wi-fi zone,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목재체험관, 대청호 물문화관 등

▢ **기대 효과**

▮ 하수처리 기능의 강화 및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 하수처리시설의 이전 및 고도화로 갑천하류 수질 및 금강 수질 개선
- 악취 등 환경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 국내 최초의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으로 타 시도 사업추진의 롤모델 및 방향제시

▮ 하수처리장 음악회 등 환경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고정적인 이미지 쇄신



[그림 14-1] 싱가포르 베독 뉴워터 팩토리 비지터 센터



[그림 14-2] 지하화 하수처리장 - 용인 레스피아

2) 스마트 폐기물 순환 프로젝트 완성

▢ **배경 및 필요성**

▮ 자원의 고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위협의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필요성 부각

▢ **주요 내용**

▮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문화 조성

- 재활용률이 높은 폐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폐가전제품 집중 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유리병 분리거치대 등)
-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처별 감량대책 추진,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확대 운영
- 자원순환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대 및 신기술 적용
- 음식문화개선 민관협력사업 추진, 잔반저울 대여, 좋은 식단 실천 포장용기 지원

▮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으로 재활용품 공유 및 재사용 기반 구축

- 전광판, 언론보도, 페이스 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재활용품 나눔장터, 재활용품 상설교환 판매장(아름다운가게) 운영

- 매립장, 소각장,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 환경기초시설 시민 견학
- 찾아가는 재활용교실, 1회용품 감량 교육, 재활용 실물 전시관 운영

▮ 현 제1매립장 매립 종료시점인 2025년 전후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제2매립장 조성

▮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신기술 적용

-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자원화시설의 도입

▮ 제2매립장 조성

- 현 제1매립장 매립 종료시점인 2025년 전후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 수행

▢ **기대 효과**

▮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 2030년까지 순환자원 이용률 80% 달성

▮ 대전광역시 발생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변환 및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확보로 폐기물 유출 제로화



[그림 14-3] 덴마크 코펜하겐 폐기물 에너지발전소



[그림 14-4] 미국 펠라델피아 스마트 쓰레기통

3) 먼지 먹는 하마 플랜 확대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

▢ **배경 및 필요성**

▮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기존 노면청소차 활용 확대 및 분진흡입차 신규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 주요 내용

▮ 분진흡입차 신규 도입 운영 및 노면청소차 활용 확대

- 2019년 추진된 분진흡입차 시범운영의 효과 검증 후 점진 확대 추진

▮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사업 확대

- 전기차·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확대

▮ 도시 바람길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문제에 대응

- 대전 센트럴파크와 연계하여 바람길 분석 및 주요 단절지점에 대한 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 야생조류의 원활한 이동 유도
- 위치 : (가로방향) 갑하산~한밭대로(약13km)~정부청사~유등천~계족산 일원, (세로방향) 갑천~대덕대로(약16km)~한밭수목원~시청~월평공원 일원
- 기간 : 2019~2023년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공기청정기 보급(어린이집, 경로당 등),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필터 설치, 취약계층 보호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

▮ 도시 생활공간 내 대기오염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비상저감 조치 및 대중교통의 날 시민참여 확대 유도

▢ 기대 효과

▮ 도로 재비산먼지의 직접적인 제거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기대

▮ 시민 및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의식전환 및 미세먼지 저감 체험

▮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영향 최소화



[그림 14-5] 대전광역시 먼지 먹는 분진흡입차



[그림 14-6]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시행 - 독일

4)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생활에 있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합류식 하수관로의 노후화는 씽크홀 발생,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씽크홀의 발생 등이 나타나 하수관로 정비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질학적 특성으로 라돈 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실정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라돈관리 방안이 필요함
- 환경성질환(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천식 등)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에 취약한 노인·어린이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환경보건 및 사고대책 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 내용**

-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개인정화조 폐쇄, 오수/우수의 분류화, 노후 하수관로의 보수, 침수 우려지역의 대비 등의 사업 추진
- 대전광역시 라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 라돈정밀조사 : 단독주택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농도 현황 조사
- 라돈 노출현황 파악 및 대상 시설별 라돈 저감방안 시행 : 라돈 노출

취약지역 시설개선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연차별 시설 개량 사업 시행

- 라돈에 대한 인식증진 및 건강피해 방지대책 마련 :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별 건강피해 방지대책 등의 매뉴얼 마련, 라돈 관리체계 구축 등

▮ 환경성질환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의 마련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라돈, 석면 및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등 건강유해물질 노출 최소화 방안 마련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화
-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방안 : 노인·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생환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측정·진단 및 개선사업” 추진
- 생활불편을 유발하는 환경 개선 : 소음지도를 활용한 교통소음 심각 지역 소음저감대책 시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조명관리구역 설정
- 화학물질관리계획 수립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배출 및 사고 시 접촉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및 매뉴얼의 준비
- 관거파손 대응계획 수립 : 하수관거, 하수관거, 열수송배관 등의 지하매설 관거의 파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 **기대 효과**

▮ 기능이 없는 정화조 폐쇄로 하수악취의 근원적 해결 및 하수관로 정비로 지반침하/침수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안전 확보

▮ 대전시 하천의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도모로 쾌적한 도시의 수환경 조성

▮ 라돈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량 사업 추진, 효과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실내공기질, 환경성질환, 화학물질, 소음, 빛공해, 이상기온 등)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 모범도시 구현

5) 악취환경 개선으로 상쾌한 대전 만들기

▢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단지, 합류식관거 지역, 녹조 발생지역 등 악취영향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새롭고 쾌적한 대전 마련

- 시설별 악취 저감대책 추진으로 악취 없는 살기 좋은 대전 조성

▢ **주요 내용**

▮ 시민 중심의 악취관리 정책으로 악취 패러다임 전환

- 악취영향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개선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시민대표, 관련부서, 사업장(대표) 등으로 구성 악취저감 방안 모색
- 민·관 합동 악취순찰반 운영 : 대전광역시 주요 악취 관련 3개 감시단체(목상동환경감시단, 송강환경교육협의회, 북대전 악취해결촉구 주대위)
- 대전광역시 및 구의 「24시 악취종합상황실」 운영 : 하절기(6월~10월) 집중으로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악취 배출사업장 경각심 제고

▮ 악취 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적 악취개선대책을 추진

- 대전광역시 주요 악취발생원의 위치 추적 및 자료 취합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악취지도 작성
- 악취 모니터링으로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악취오염도 측정
- 분야별(폐기물, 폐수, 하수) 악취개선대책 추진으로 악취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시설 밀폐, 악취 포집 등) 추진

▮ 악취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설별 악취 저감 개선 실적 및 계획 논의

- 악취 저감을 위한 TF팀 운영으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 추진 실적 등 협의

▢ **기대 효과**

▮ 악취 배출원 관리 및 시설개선으로 악취 없고 상쾌한 대전 만들기에 일조

▮ 악취 배출시설 개선 실적 공유와 시민 의견 수렴·반영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



[그림 14-7] 악취해결 촉구 기자회견



[그림 14-8] 오수관 악취 발생

6)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 도시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다양한 방향의 친환경에너지 보급 필요

▮ 국가 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 **주요 내용**

▮ 아파트단지 미니태양광 2만호 도입 및 시범마을 조성

- 일조량이 확보되는 공동 및 다가구 주택 대상 미니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시민참여의 활성화
- 미니태양광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의 지원 및 시범적용

▮ 공공청사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 설치대상 공공시설 전수조사 후에 예산을 반영

▮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 활성 도모 및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

- 산업부 공모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정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되어 국비지원 신재생에너지 거래체계를 구축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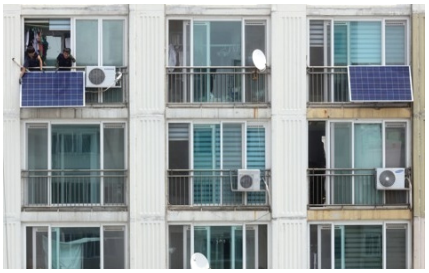
▮ 아파트 미니태양광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의 구축

▮ 국가 전략사업인 수소산업의 경쟁력 확보

▮ 국내 신재생에너지 거래체계 기반 마련 및 산업의 육성



[그림 14-9] 런던 Bedzed, 탄소중립 복합개발단지



[그림 14-10] 대전광역시, 태양광 에너지 설치

7) 촉촉한 친환경 물순환선도도시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기후변화의 진행 및 불투수면의 증가로 수질악화, 하천건천화, 지하수 고갈, 도시침수 등 건전한 도시 물순환의 왜곡현상 발생

▮ 물순환 회복을 위해 불투수면을 줄이고 빗물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대

▢ **주요 내용**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추진 및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둔산·월평 일원 2.56 km2에 저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등 도심지내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물환경 개선사업 실시
- 주요 저영향개발(LID) 시설인 식생체류지, 투수성포장, 침투화단, 식생수로 등으로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조례의 사전협의제 시행에 따라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LID기법 시설적용을 유도
- 도심 공원에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집중 배치로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의 효과 증대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촉촉해지는 도시의 이미지 강화

▮ 시민의 참여, 홍보, 계몽을 위한 물 축제 개최

- 물순환선도도시 완료지역에 빗물축제, 물순환 박람회 등 개최

▮ 빗물을 모아 활용하는 빗물저금통의 설치 확대

- 민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둔산, 월평 일원에 설치

▢ **기대 효과**

▮ 도심하천의 건천화 완화 및 비점오염 저감으로 수질개선

▮ 빗물침투 향상 및 녹지공간 확대로 인한 증발산량 증가로 도시열섬현상 완화

▮ 빗물의 하천 유출저감으로 홍수(침수) 등의 재난 예방

8) 자연 속 생태도시 만들기

▢ **배경 및 필요성**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갱신이 의무화 되며,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종 증가로 지역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시 중심에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복원하여 도시 열섬화 등 이상기후 현상 저감, 공원 이용율 제고, 도시 숲의 생태기능 회복하 및 공원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도시생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현존식생도, 분류군별 주제도가 포함된 도시생태현황 조사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및 주제도별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무기환경과 생물상의 변화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연환경조사로써 야생동·식물 현황 파악, 법정보호종 및 깃대종 분포 파악

- 환경모니터링센터의 설립으로 대전광역시 생태, 하천, 대기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기능 부여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생태도시 그린 네트워크로 센트럴파크의 활용

- 공원 특성화 사업으로 이용행태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차별화하며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및 「경관 및 이용개선」과 연계
  - 생태녹지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길 조성, 녹지축 연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바람길숲(생태녹지 네트워크), 미세먼지 차단숲(입체형 도시숲) 조성과 연계

▮ 녹색 복지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둘레산에 산림휴량, 치유 인프라의 기능 확충

- 전국 최고의 힐링타운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태산 자연휴양림, 만인산 자연휴량림, 계족산 황톳길의 기능을 강화하고 치유의 숲 및 목재문화 체험장으로 식장산 숲 정원을 재조성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통한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공용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의 여건을 보려한 보전과 개발용지를 구분하여 적극적 산지이용을 수립

▢ **기대 효과**

▮ 대전광역시 도시생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환경계획을 도시계획과 연동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개발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 대전광역시 전역의 무기환경 및 야생생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환경변화 양상 및 야생생물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향후 관리방안 마련

▮ 대전형 센트럴파크 조성으로 랜드마크 역할 및 도심 녹지공간 확보로 녹색도시 이미지의 제고

▮ 심각한 환경문제를 그린인프라 및 화이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열섬현상 저감과 같은 삶의 질 개선



[그림 14-11] 스톡홀름, 도심 속 충분한 녹지공간



[그림 14-12]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주거공간 속 녹지

9) 하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는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를 중심으로 총 116개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이 346.15 km에 달해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음

▮ 도시의 매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대전광역시를 지탱하기 위한 하천의 재평가 및 관리방안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생태계, 시민들의 동선, 일반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도심하천, 함께하는 행복하천, 배려하는 생태하천의 3가지 공간분리와 더불어 특성별로 하천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하천환경 개선방안 마련

- 도심 불투수층 감소를 통한 투수능력 확보, 중수도 및 하수처리장 유출수 이용 등을 통한 하천수량 확보
-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불명오염원의 모니터링 및 제거, 합류식하수관거의 월류수 제어, 도로 오염물질의 유출 제어, 갑천가동보 등 하천지장물의 관리방안 개선

▮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동하는 도심하천 공간의 마련

- 시민들의 활동시설로 캠핑장, 수상무대, 자연학습장, 마라톤코스, 물놀이장, 친수계단, 세월교 등의 도입

▮ 시민들이 생태계와 함께하는 행복하천 공간의 마련

- 산책로, 관찰데크 등의 소극적 하천활동을 하며 생태계를 보호 및 환경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하천공간의 마련

▮ 보호받아야 하는 생태계를 위해 배려하는 생태하천 공간의 마련

- 감돌고기, 미호종개, 수달, 맹꽁이 등과 같이 보호종이 서식하는 하천공간의 접근 최소화 및 서식환경 마련

▢ **기대 효과**

▮ 하천 일부 공간이 아닌 전체 하천 및 연결에 특성을 부여하여 대전광역시 대표 랜드마크로 인식을 제고시켜 살기 좋은 대전광역시의 이미지 상승

▮ 지금까지의 생태하천 정비사업 중심의 하천살리기에서 사람과 생태계가 함께 하는자연형 하천으로 재탄생



[그림 14-13] 갑천, 생태계와 함께하는 행복하천



[그림 14-14] 유성천, 시민들이 활동하는 도심하천

10) 광역형 자원순환센터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 수거·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공간에 방치, 불법

매립, 불법 소각, 불법 처리,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해 생활공간이 오염되는 문제가 나타남

▮ 폐기물 처리 문제 및 대처방안과 관련된 대전, 충청권 지역의 주요 뉴스

- 조명래 장관 “올해 자원순환정책 통한 폐기물 감량에 역점 (서울신문, 2020.01.22.)
- 생활폐기물 10% 못줄인 수도권 시군구, ‘쓰레기 대란’ 당한다 (연합뉴스, 2019.12.29.)
-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개정조례안“공포·시행 (중도일보, 2020.03.17.)
- 청주시의원 :외지 쓰레기 불법처리 업체 철저히 단속해야 (연합뉴스, 2019.12.20.)
- 폐기물 1000톤 불법 보관한 처리업체 대표 집행유예 (뉴스1, 2020.02.17.)
- 증평 주민들 “음식 폐기물 무단 매립 청주 업체 폐업하라” (연합뉴스, 2019.10.31.)
- 계룡시 “음식물 쓰레기 더는 안돼” (충청일보, 2019.11.28.)
- 지방의원 운영 김치공장 수년째 폐기물 불법 매립 (연합뉴스, 2016.12.28.)
- “방치된 불법폐기물 소각장 시·군에서 직영해야” (중부매일, 2019.09.05.)
-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충남 2만7900톤, 충북 1만4300톤 (중도일보, 2019.02.21.)
- 세종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중점단속 나선다 (충청뉴스, 2020.03.12.)
- 대전시 수백억들인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외지폐기물 반입 (연합뉴스, 2017.09.26.)
- 대전시, 28일부터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 (뉴스1, 2018.05.27.)
- 대전시, 불법 영업한 폐기물처리업체 6곳 적발 (연합뉴스, 2019.07.03.)
- 대전 충청 광역자치단체, 음식물 폐기물 폐수 공동 대처 (뉴시스, 2008.03.25.)

▮ 정부의 불법폐기물 단속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폐기물을 순환·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위탁처리업소의 불법 폐기물처리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폐기물에 대한 공공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상수도 및 하수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관로설치의 어려움으로 광역화하기 어렵지만, 폐기물은 주로 차량으로 수거하는 특성으로 광역화가 비교적 용이함

- 국민들의 건강 및 청정환경을 위해서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협력 체제가 필요함

▢ **주요 내용**

▮ 대전·세종·충청권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파악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폐기물별 집중 처리센터 구축 및 공공처리의 확대

- 음식물류, 축산분뇨, 플라스틱 등 지자체별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공동처리
-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집적화하여 처리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발생 가능시설의 수를 축소

▮ 대전·세종·충청 지자체간 폐기물 공동처리 MOU 체결

- 반입수수료, 반입제한, 소재지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의 신설(개정)

※ 추가적으로, 대청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광역하수처리 시스템의 고려

- 상수원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되도록 대청호 하류의 시설에 유입·처리
- 충북 옥천·음성 공공하수처리장 2곳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적발 (주시스, 2018.11.16.)

▢ **기대 효과**

▮ 대전·세종·충청권의 청정이미지 상승

-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따른 수질, 토양오염 및 악취, 시각적 불편함 해소

▮ 배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미처리에 따른 민원의 감소

DSI

안전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2. 안전 부문 정책 아젠다
3. 안전 부문 정책과제

15장

15장 안전 부문

1. 대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과 미래전략

▢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구현 미래상)**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일류도시 대전」구현에 매진

시민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위기에 강한 안전도시 구현

▮ 지역안전지수개선을 통한 시민안전도시 구현

-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 및 3대 취약분야 사망자 수 감축
- 시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체계적 관리로 안심도시 조성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분석 등 신속한 초등대응 능력제고를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복잡 다양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전략 필요성 증대
- 신속한 재난관리 구현을 위한 「지능형 재난관리체계 구축」추진

* 1단계 GIS기반의 '지능형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18~'19)

2단계 eSOP기반의 '지능형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20)

3단계 빅 데이터 IoT기반의 '재난분야별 분석시스템' 구현('20~'22)

▮ 기후변화 대비 방재성능목표 상향과 자연재난을 대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마련

* 市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우수유출저감 대책수립 용역 추진 중

▮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로 선제적 지진 대응 및 지진 피해 저감

- (공공시설물) '19년 내진성능평가 196개소 실시(성능 확보 122) / 31억원

* 1,236개소 중 776개소 내진성능확보 / 내진율 62%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의무적용

* 134,161동 중 20,107동 내진성능 확보 / 내진율 17.5%

*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 지원 : 2019년부터 지원사업 추진

- (지진방재 연구용역) 지역 맞춤형 지진방재대책 마련 위한 용역 추진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토대로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사업 추진

- (범죄예방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안전브랜드 사업 추진

* (사업비) 20억원 / 시 2개소(10억원), 자치구 5개소(10억원)

- (시민제안사업) 아동폭력 방지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 (사업비) 2억원/ '20.1 ~ '20.12 (내용) 비상벨, CCTV, 쏠라표지병, 고보조명 등

▮ 소방안전인프라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 (인프라 조성)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 상시 소방훈련시설 설치(3개 소방서) 및 70m 굴절식 사다리차 배치

- (대응역량 고도화)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소방차 7분 현장도착률(83.1%) 및 심정지 소생률(11.7%) 향상 등

▢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수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구축

선제적 대응 기반의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문화·인프라 구축완료의 안전도시 실현

▮ 범죄 및 교통사고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조명조도 및 안전인프라 개선

- 위해지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혁신사업 발굴·집중투자 등 안전지수 중·상위권 진입 목표

- 범죄 및 교통사고 분야 (사망율 10% 감축)의 감축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 개선사업추진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심지 침수 대응 시민안전 지원기술개발과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 기 구축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를 대전시 지능형 재난관리체계사업의 지속성 유지
- 도심침수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도심지 침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침수 예측·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통상황과 연계한 대피·우회 경로 안내시스템 및 신속한 실시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러한 침수 대응 시민안전 지원 시스템 일체를 실증 구축·운영하여 침수 발생 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원하는 재난 트라우마치유 서비스 제공

- 재난에 따른 피해는 단지 경제적 피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함. 재난 생존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비롯하여 우울증,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물질관련질환 등 매우 다양한 정신질환들을 겪을 수 있음. 재난 생존자들에서 PTSD의 발병률은 대략 10~20% 정도로 추산되며, 단기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은 만성화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초기에 신속한 개입과 예방이 중요함
-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대응에 비해 재난 시 PTSD 등 정신건강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인프라는 미약한 수준으로 재난 이후 국가 차원의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선재적 대응의 5G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지진/붕괴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

- 행정안전부의 지진대응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진(S파)이 도착하기 전 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를 통해 지진발생 초기에 대응
- 건물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진동, 기울기 등 실시간 시설물 진단을 통해 붕괴 또는 균열 위험징후를 사전에 감지·포착하여 시설관리 담당자 및 안전진단 전문가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시설이용자 대피 유도

▮ 고밀도 도시공간의 대형화재대비를 위한 소방헬기도입 및 소방국가직 전환에 따른 업무 협업화 제고

- 고층건물·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력 투입과 지원을 위해선 소방헬기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구조·구급, 산불진화 등 소방임무 수행을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으로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가 줄어들어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 가능
-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난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 책임, 권한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동으로 재난대응 가능

▮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인프라 형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범죄예방 정책수행을 위한 제도정비, 각종 범죄 및 재난에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범죄율이 높은 다가구나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고성능 방범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인증된 제품보급
- 선도적으로 범죄예방 모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함께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을 기대

▮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교육의 효율화 추진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안전교육의 기관들이 건립
- 시민 스스로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교육 추진체계 마련 및 정책추진이 필요
- 안전문화 교육은 시민 스스로가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난의 이해 및 지역 공동체의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지원활동 등의 안전공동체 조성

[표 15-1] 민선 7기 안전분야의 기대되는 미래상과 향후 정책수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사업	기대되는 미래상	향후 정책수요
안전지수 향상 등 안전사고 감축 총력	안전지수 중·상위권 진입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조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감축을 통한 안전지수 개선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재난관리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	eSOP기반의 '지능형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예·경보시스템 보강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마련	도심침수 발생시 신속대피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도심침수에 적합한 재난 데이터 기반 실시간 도시 침수 분석 기술
지진 피해 저감을 위한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보강과 지진대비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진에 강한 도시조성	디지털 트윈 기술적용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마련
안전인프라 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 화재 차단	고밀도 도시공간의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헬기도입 5G 기반의 드론을 활용한 소방관제 시스템

2. 안전 부문 정책 아젠다

▢ **선제적 예방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 (야간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대전시의 지역안전지수는 2년 연속 전국 하위권 수준임. 2019년 경우는 감염병(3등급)을 제외한 5개분야(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에서 4등급을 받아 안전 全분야에 걸쳐 낮은 등급을 받았음. 특히 교통사고와 범죄 분야의 경우는 야간에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 안전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지역안전지수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야간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위해지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고층건축물 화재대비의 소방헬기 도입의 필요성) 복잡한 도시공간 안에서

고층건축물이 늘어가면서 도심의 화재는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최근에는 헬기를 통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역할이 제고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로는 자체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밀도 도시공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거점교육기관 확충의 필요성) 최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내·외 각 도시에 시민이 필요할 때 안전교육을 상시로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상설 거점 전문기구들이 있으나, 대전시는 없는 실정임.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전시민대학을 활용하여 별도의 시민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기보다 이미 시민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전시민대학을 시민안전 거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다운 ICT 접목의 스마트안전 관리체계 구축

- (도심침수에 적합한 재난 데이터 기반 실시간 도시침수 분석 기술의 필요성) 2018년 8월 대전 호우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계획 설정 이상의 폭우 발생은 도심의 도로 침수로 인한 교통정체 및 주택, 상가의 침수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함.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침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대응 기술이 필요함. 집중호우시 시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및 기상변화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지진, 화재대응 기술의 필요성) 다중이용시설 화재나 대규모 지진발생시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적인 안전관리 정보제공은 어려운 상황임. 화재/폭발, 대규모 지진,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모델링(5G기반의 디지털 트윈)해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긴급상황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함

▮ (5G 기반의 드론을 활용한 상황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체계확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최근 공공시설물·화재현장 등의 상황관리를 위하여 ICT가 접목되는 바디캠, CCTV, 드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드론의 자율주행 기능과 드론을 통해 확보된 고화질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CCTV 설치나 사람의 접근이 힘든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안전관제가 진행되고 있음. 보다 효과적인 화재현장·공공시설물 관제 등을 위해서는 5G기반의 드론 활용이 필요함

▢ **안전행정 제고를 위한 거점**

▮ (국가직 전환의 소방 협업)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였으며, 소방조직이 국가직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에 대한 대전시의 재난대응 정책과 협력해야 하는 정책적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대전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대전소방본부와 대전시의 재난관리 부서, 관계기관, 민간기관 등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시민안전 공간조성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시민지원센터) 한정된 경찰력으로 늘어나는 범죄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음. 최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강화되고 있고 관련 기관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시민들에게 CPTED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거공간 조성시의 범죄예방진단이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사업 도입의 필요성) 범죄자의 검거는 경찰의 역할이 크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인 CPTED의 경우는 지자체의 역할이 큼. 많은 선진국의 인증제도와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인증 건축물이 범죄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된 만큼 국토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강화된 시점에서 방범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함

▮ (시민의 안전과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거점트라우마센터 설립의 필요성)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라 국가에서는 권역트라우마센터를 4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전은 없는 실정임. 또한 권역트라우마센터는 재난위주의 외상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해 직·간적 외상자들의 치료는 한계가 있음. 사회구성원의 불안과 고통을 표출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치유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음

3. 안전 부문 정책과제

1) 24시간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기준 대전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 범죄, 화재, 자살, 생활안전에서 4등급을 받아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전지역의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는 연속 3년 4등급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낮게 평가받음

[표 15-2] 2017 ~ 2019 특·광역시 지역안전지수 현황

시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서울특별시	1	1	1	2	2	2	5	5	5	2	2	2	2	2	1	3	2	4
부산광역시	2	2	2	4	4	2	4	4	4	2	1	1	5	5	5	5	4	4
대구광역시	4	3	3	3	3	4	3	2	2	1	2	2	4	4	4	4	5	5
인천광역시	2	2	2	3	1	3	2	3	3	2	4	4	4	4	3	2	3	2
광주광역시	4	5	3	2	3	1	3	3	3	4	3	3	3	2	2	4	4	1
대전광역시	3	4	4	1	4	4	4	4	4	3	4	4	3	3	4	3	3	3
울산광역시	3	3	4	4	2	3	2	2	2	4	3	3	2	3	3	2	1	3
세종특별자치시	5	4	5	5	5	5	1	1	1	5	5	5	1	1	2	1	2	2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범죄의 경우는 야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LED조명 및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여 야간환경을 개선할 필요

- 지역 맞춤형 개선사업으로 조도개선 안전사업 추진: 도로, 공원, 하천, 범죄취약지 등 전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을 통해 안전확보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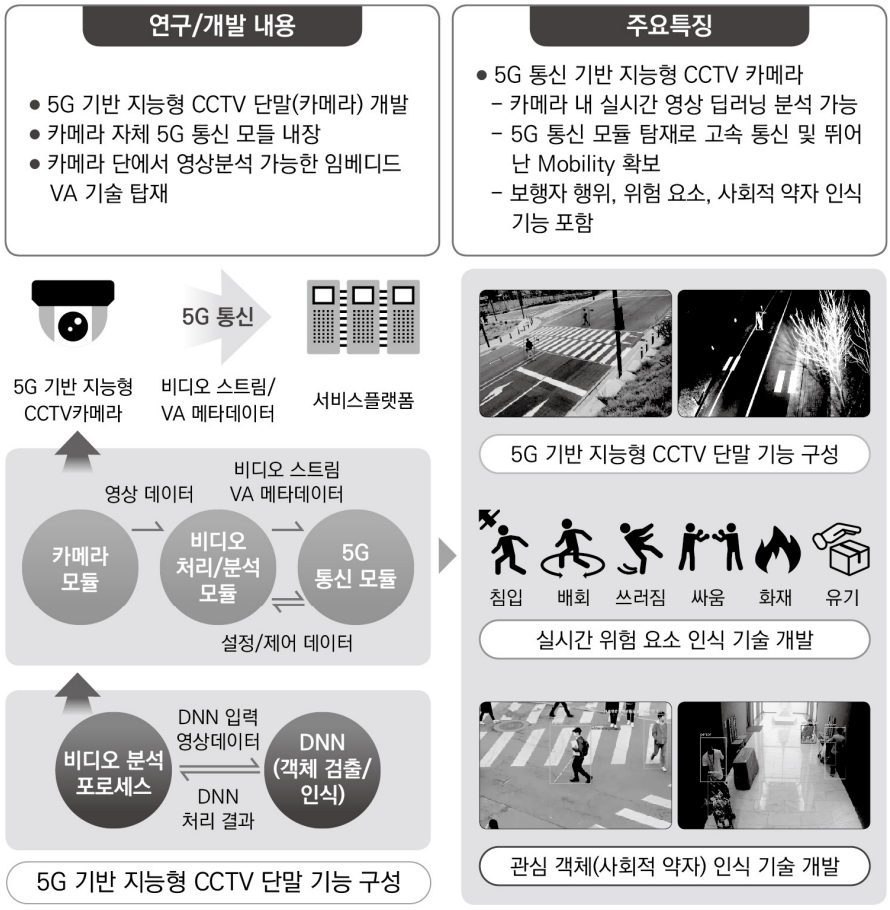
▮ 무선 CCTV기반 지능형 야간도로 안전지원 서비스 : 신규 가로등 및 CCTV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 5G기반의 지능형 CCTV를 기존 도로변 기구물에 설치하여 야간의 도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 무선 CCTV기반 지능형 야간도로 안전지원 서비스 : 신규 가로등 및 CCTV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 5G기반의 지능형 CCTV를 기존 도로변 기구물에 설치하여 야간의 도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 무선 CCTV로부터 수집되는 대용량 영상을 지능형으로 실시간 분석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각 상황에 따라 모바일 엣지구간에서 실시간 대처를 위한 제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5G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한 주변의 보행자, 차량 및 환경센서 기반 상황감시
- 모바일 엣지구간에서 지능형 CCTV를 통한 야간도로의 안전을 위한 지원서비스
- 무단횡단 보행: 무단횡단 보행자를 실시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시인성 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 표시, 차로 바닥에 무단횡단 보행자 위험 알림, 주변 사이니지를 통해 전방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 알림
- 사회적 약자의 횡단 보행 : 보행자 숫자, 보행자 속성을 인지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 확보를 위한 정보 표시 제공
- 지능형 CCTV를 통한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대처: 영상 및 센서기반 특정 객체 출현 및 위험 상황감시, 위험 상황인지 시 관제모니터에 위험 상황 정보제공, 위험 상황인지에 따른 5대 연계서비스 이벤트 제공



[그림 15-1] 5G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

▌서비스 주요설비

- 시티 센서 : 이동형 5G 지능형 CCTV : 지능형 CCTV, 지능형 환경정보 센서, 스마트횡단보도(그림자 표시기), 사이니지
- 네트워크 인프라 : 5G기반 대용량/저지연 전송 및 제어 기술
- 지능형 분석 기술 : 관심객체인식, 상황분석, 주변 환경정보 분석, 보행자 속성인식
- 무선 CCTV 연동 야간 도로 안전 서비스 제어 : 위험상황 인지, 상황에 따른 조치명령 및 위험알림 재현장치 표출, 위험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처를 위한 자동 연계서비스

▢ **기대 효과**

- 5G 지능형 무선 CCTV를 이용한 설치 용이성 활용으로 사고 사각지대 및 음영지역 문제 해소 지원
- CCTV 단말 내 지능형 영상인식 기능과 무선 엣지구간 내 위험상황 실시간 인지와 대처 기능을 통한 지능형 도로 안전지원 서비스 제공
- 시민의 보행환경 안전지원을 통한 사고예방 및 위험상황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의 효과
- 교통과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상향 추진효과 발생

2) 고밀도 도시공간의 화재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방헬기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헬기를 미보유한 상황으로 필요시 민간업체로부터 헬기를 임차하여 구조·구급 및 화재진화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 출동의 신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시·도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살펴보면 제주도와 세종시, 대전시 3개 지역이 미보유한 상황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의 특별성을 감안하면 대전시의 소방헬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대전시는 2017년 민간업체로부터 헬기를 임차하여 대전119특수구조단 내 운영 중에 있었으나 '19년 12월 임차계약이 종료된 상황

- 대전시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한 화재진압 장비의 경우는 현재 18층 이하 고층건물에 대응 가능한 상황으로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대응능력 미흡한 상황

* 2020년 현재 대전시 보유한 고층건물 대응 장비는 고가차 6대/52m, 굴절차 3대/33m, 5대/27m로 18층 이하 건물까지 대응이 가능하며, 2023년까지 70m 굴절사다리차 배치 예정

- 최근 대전지역에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밀도 도시공간의 화재대비를 위한 소방헬기 도입을 통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소방헬기 도입을 통한 고밀도 화재발생의 신속 대응 추진 전략마련

- 구매예산 및 운영유지관리비 마련을 위한 국비확보 계획
- 헬기 계류장 마련 계획

▮ 도입을 위한 소방헬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최대 4시간 이상 연속 비행 가능한 헬기 도입을 통해 대전지역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 수행 가능
*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은 2,000리터 이상으로 담수능력을 극대화하여 대형화재 진화 가능
*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탐재하여 환자이송 중 응급처치 가능
* 인명구조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 가능

▢ **기대 효과**

▮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대응능력 강화

▮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산불진화와 최고층 건물 등에 신속출동 확보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이송시간 단축 등 신속성을 확보

▮ 응급환자의 병원 전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예상하며 시민의 응급의료 수혜

3)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키는 시민안전 교육거점기관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 스스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량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2017.5.30.)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의 6대분야 23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 대전시민들은 타광역시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시민안전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높은 인식을 하고 있음

* 대전시민은 대전시의 안전을 긍정적(67.6%)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시민안전교육 또는 훈련이 필요하다(88.2%)는 인식이 높음

▮ 시민안전교육을 상시로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가를 양성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안전 교육 거점 기관 도입 필요

▢ 주요 내용

▮ 시민안전교육 거점 기관 지정 : 시민 대상의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중 지정

* 접근성, 교육과정의 다양성, 시민의 참여성, 교육 전문성, 공익적 교육 운영 경력, 교육운영을 위한 강의공간・편의시설・문화공간 확보 등 고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 운영 내용: 시민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오프라인 시민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시민안전교육 전문가 풀(DB) 운영

▮ 운영 전략 : 대전광역시 - 민간시민안전교육기관 - 시민안전교육 거점 기관간 상설 협의체 운영

▮ 맞춤형 안전교육 : 연령별·계층별로 특정 지역 또는 직장에 따라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른 안전교육 수행

▢ 기대 효과

▮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시 대응역량이 향상되어 좀 더 안전한 도시 대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시민들에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안전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공간에서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음

▮ 시민안전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대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대전 전반에 시민안전교육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음

4) 시민의 안전과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대전광역시 안전통합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은 교통의 중심역할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국가 중심의 통합트라우마치유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 폭력,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등은 그 사회 구성원 전체에 직·간접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정상적인 복귀를 위해 다각적인 치유과정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
-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관심저조와 전문적인 치유기관 부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
- 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역할이 필요

▢ **주요 내용**

- 인력구성

* 센터장1명(총괄 및 대변인역할), 부센터장1명(업무지휘 및 대회협력), 팀장2명(사업팀장, 연구팀장), 직원 11명(일반사업2명, 교육담당2명, 지역사회 상담요원2명, 자원연계담당1명,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담당2명, 대상자 추적 및 관리 담당 2명)

- 기능 및 수행업무
  - 정신건강서비스 구축 및 활용 : 트라우마 심리상담전문가 인력개발, 필수정보 및 홍보 관련 자료 구축 및 자료 제공, 인터넷 기반 정보지원센터 구축 및 활용
  -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체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향상 : 트라우마 심리상담전문가 교육 및 관리, 전문가 풀 위촉 및 관리. 트리우마치유 활동 네트워크 구축(자문운영회의, 간담회 등). 정책, 임상 지침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연구, 교육, 훈련: 정책, 임상 지침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트라우마에 대한 기초, 임상연구, 치유 및 성장 방안 모색과 공론화. 심리적 치유 등 정기교육, 치료프로그램 워크숍

▮ 대상 및 적용범위

- 재난 피해자 및 봉사•구조활동자, 국가공권력 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아동 폭력 피해자, 위험업무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직·간접 외상자

▢ **기대 효과**

▮ 대전시에서 직·간접 외상자들의 외상을 다루는 통합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한다면 향후 지자체 단위의 모델로 자리매김 가능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 등에 심리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설립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접근성 등 강화 가능

5) 도심지 침수 대응 시민안전 서비스

▢ **배경 및 필요성**

▮ 기상이변 등으로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 수해(침수)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 및 저감 방안 모색 필요

*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이 시가지를 관통하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문제가 자연재난의 92%를 차지

▮ 국지성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 재난 상황에 대한 예측·대응 시스템의 한계로 도심지 침수 예방·대응이 어려워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침수대응 기술개발 필요

* 빅데이터 기반의 침수 예측 시뮬레이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침수 우려시 신속한 대시민 알림체계, 침수지역 우회경로 안내 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능형 침수 대응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필요

▢ **주요 내용**

- (빅데이터 기반의 침수 위험지구 선정 및 중점관리 방안 마련) 대전지역의 지역별 과거 강우 이력 및 배수역량 등을 분석하여 침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침수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
- (도심지 침수 재난대응 표준절차(eSOP 수립) 침수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침수상황을 고려한 시민안전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수 재난대응 표준절차를 수립하여 운용
- (과학적인 침수 위험분석을 위한 도심지 침수 시뮬레이션 기술 도입) 대전시 침수 위험지구에 대한 침수 위험인자 도출 및 해석 모형을 개발하고,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하여 침수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예측하는 침수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
- (위험지역 침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강우 및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영상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신속한 시민 대피 지원 및 침수시 우회경로 안내 시스템 구축) 침수가 예측되는 지역에 시민과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전시 교통데이터의 분석과 연계를 통한 대피 우회경로 안내 시스템 구축
- (도심지 침수 대응 시민 지원 서비스 제공) 침수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침수 상황전파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시민의 안전대응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위치서비스 기반의 지역별 침수 대응 서비스 등 체계적인 시민 지원 정보서비스를 제공
- (대전광역시 도시 침수 시민안전 서비스 플랫폼 구축) 대전광역시 도시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 외부 시스템 및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



[그림 15-2] 도시침수 시민안전 서비스 플랫폼

▢ 기대 효과

▮ (대전광역시 침수대응 체계 혁신) 침수 예측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실시간 현황 정보 기반의 신속한 침수 상황관리 및 입체적 상황전파 체계 마련 등 도심지 침수 예방 및 대응체계 혁신으로 행정효율 증진

* 旣 구축된 대전광역시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전광역시 재난 안전 지원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 (침수 피해 저감 및 시민 안전 향상) 침수 위험 발생 전 사전 경보, 교통연계 침수대응 서비스(우회 대피 경로 안내)등 체계적인 침수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

▮ (재난대응 시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재난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빅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기반 과학적 분석 기반의 재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계기를 마련, 재난 전달체계 고도화 및 시민참여 증진을 통한 민·관협력 협업 기반 마련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침수 안전도시 구축) 빅데이터, IoT, GI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심지 침수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모니터링 등으로 위험 상황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시민 안전 증대

6)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는 공공 및 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대전광역시는 노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시설의 화재·붕괴 등 안전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음

* 대전 건출물 노후화 심각. 재난 땐 사고 위험 노출 (중도일보/2018-04-25), 대전 건출물 절반, 30년 이상 노후화 (충청신문/2018-07-22), 대전서 하루 사이 건물 붕괴 잇따라 (굿모닝충청/2019-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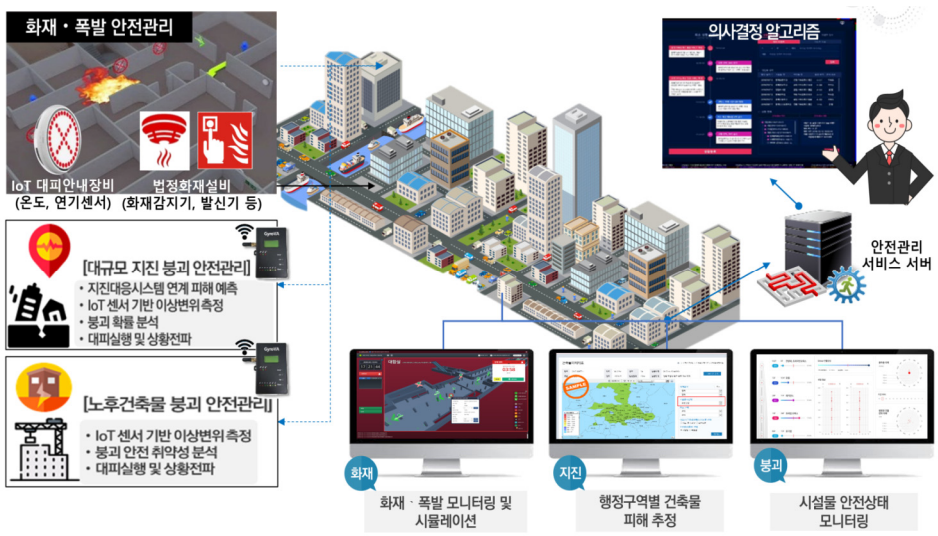
▮ 대형재난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주요 라이프라인이 집중되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재난정보를 디지털트윈공간에 통합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능동 대처가 가능한 재난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이 요구

▮ 또한, 최근 5G 상용화 기술 및 기반 인프라 확보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원천 기술과 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국민 생활 안전 관련 서비스 구축이 활발함

▢ **주요 내용**

▮ 디지털트윈기반 시설물 안전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시설물별 안전취약성 분석 기술 활용, 화재·폭발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행정구역별 건축물 피해 추정, 시설물 안전 상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관리 위한 의사결정 알고리즘 제공



[그림 15-3]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5G기반 SW 신기술 융합 플랫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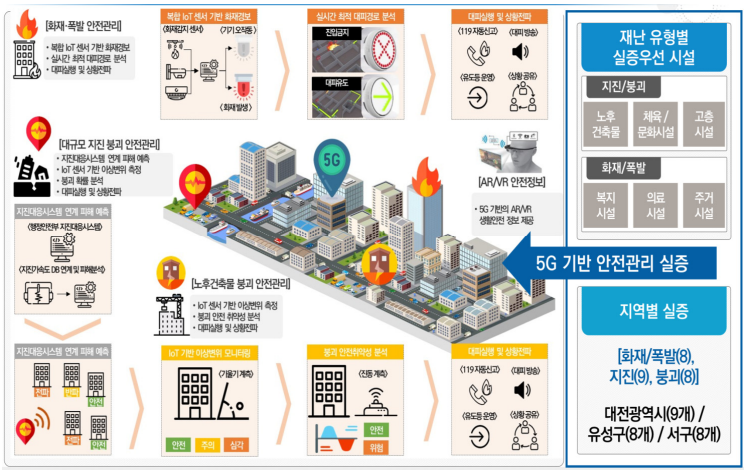
- 5G기반 안전관리 취약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배포 체계 시스템을 구현하고 표준 재난 상황인지 전파시스템에 맞추어 지자체 실증건물 안전 서비스 제공, IoT 센서 · 내장 가변형 대피 안내기기·5G 통신 모듈 · LPWA 무선중계기 연계를 통하여 실시간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



[그림 15-4] 디지털트윈 통합 플랫폼

▌ 5G기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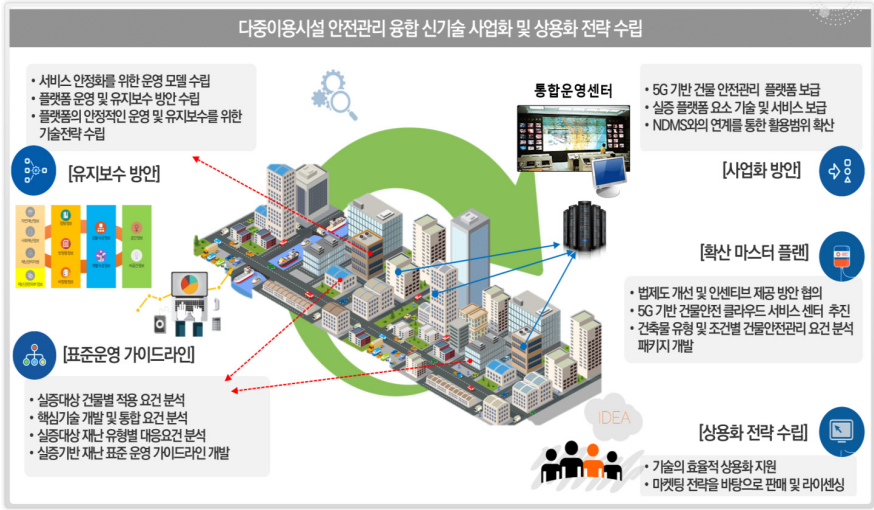
- 재난 유형별 실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총 25개 실증시설 선정, 안전관리 융합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공간정보 DB와 3차원 공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구축, 다중이용시설 5G 안전 통신망 구축, 실증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인프라를 화재·폭발과 지진·붕괴로 구분하여 구축하며 5G 기반 AR·VR 생활 안전 대민 서비스 실증



[그림 15-5] 5G 기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증시스템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융합 신기술 확산 체계구축

- 5G기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증을 통한 표준운영 가이드라인과 플랫폼 서비스 안정화 운영·유지보수 방안 수립, 공공건축물 대상 5G 기반 안전관리 융합 신기술 확산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민간 건축물 대상 5G기반 안전관리 융합 신기술 사업화 방안 수립



[그림 15-6]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융합 신기술 사업화 및 상용화 전략

▢ 기대 효과

▮ 대규모 지진 발생과 붕괴 위험 사전 인지에 따른 알람 및 최적 대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명피해와 대피시간 최소화 가능

▮ 신속한 고립구역 안내를 통한 구조 계획 수립 지원과 AR 원격협업을 통한 능동적인 대응 지원 및 재난 관리 효율화 달성

▮ IoT 센서기술, 디지털 트윈기술, AR/VR 기술, 5G 통신기술 융합 및 실증을 통한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기대

▮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제공으로 후발 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제공으로 후발 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7) 5G 드론기반 화재현장 지원 및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

▢ **배경 및 필요성**

▮ 사람이 접근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5G 통신망을 활용하여 드론의 자율주행 및 영상기반 정밀 원격 제어를 통한 공공시설물 관제 서비스 제공이 요구

-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로 확보, 화재현장의 상황 모니터링, 요구조자 구조, 화재 진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생생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고화질 저지연의 영상 전송 기술 및 다양한 각도에서의 촬영 수단이 필요

▮ LTE기반의 드론을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한계

- LTE기반 드론을 이용한 공중 모니터링은 유효하나 지휘본부까지 영상 전송 시 전송지연과 영상화질 저하로 지휘본부에서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에 한계
- LTE망 이용 드론의 경우 영상전송 지연으로 전송된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 원격지의 드론 실시간 수동조종에 한계

* 드론을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서 구조자가 드론을 직접 조종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영상 관점에서는 현장 파악 필요

▮ 화재 발생 현장의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

-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로 확보, 화재현장의 상황 모니터링, 요구조자 구조, 화재 진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생생하게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고화질 저지연의 영상 전송 기술 및 다양한 각도에서의 촬영 수단이 필요

▮ LTE기반의 드론을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한계

- LTE기반 드론을 이용한 공중 모니터링은 유효하나 지휘본부까지 영상 전송 시 전송지연과 영상화질 저하로 지휘본부에서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에 한계
- LTE망을 이용한 드론의 경우 영상전송 지연으로 전송된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 원격지의 드론 실시간 수동조종에는 한계 내포

- 드론을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서 구조자가 드론을 직접 조종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영상 관점에서는 현장 파악 필요

▢ 주요 내용

▮ 드론의 자율주행 기능과 드론을 통해 확보된 고화질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원격제어를 통해 CCTV 설치나 사람의 접근이 힘든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안전 관제 지원 서비스



[서비스 구성도]

[그림 15-7] 공공시설물 안전 관제 지원 서비스 구성도

▮ 5G기반 드론을 이용해 자율주행을 통한 드론 감시 구역 확대 및 고화질 영상의 실시간 전송, 제어를 통한 원격 관제 모니터링

▮ 5G기반 드론을 통한 공공 시설물 관제 적용 분야

* 예) 철교/교각 공사, 송전탑/고압선 안전상황 모니터링, 주요 문화재 감시, CCTV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강/저수지 등), 치매노인 /미아 찾기, 산악지역 실족 등산객 찾기, 폭우/폭설로 인한 도로 침수/폐쇄 상황 모니터링

▮ 실시간 정밀 드론 제어 및 모니터링

* 드론으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영상정보와 이를 통한 저지연 드론 원격 제어



[그림 15-8] 5G 드론 통한 공공시설물 관제 적용 분야

▢ **기대 효과**

- 드론의 5G 네트워크 연결기능 강화로 소방드론 통합 운영관리를 통한 소방드론 자산 이용성 강화
- 5G드론의 선출동을 통한 빠른 현장 상황 파악 및 출동시간 단축
- 중앙 지휘본부의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휘체계 효율화
- 요구조자 구조활동, 구조자의 화재현장 진압 작업능력 향상 효과
-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절감의 효과

8)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난협력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협의체가 요구되고 있으며, 중장기 관점에서 대전시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변화해야 하며, 확대되는 재난관리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전방위 대응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 행정 전문가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
- 오늘날의 사회 위험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하기 힘든 상황

이며, 재난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우리시의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 재난관리 관련 기관이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발생 이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어 재난발생을 완화하는 시민공동체의 협의체 마련

▮ 재난관리 책임기관 협의체 구축

- 구성 : 시청,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군부대, 보건소 등 공공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5호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 내용 : 재난관리의 체계구축,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재난상황 전파 등 재난발생 공동대응 계획
- 주기 : 매년 2회씩 주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현안 과제 논의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재난안전점검, 인적·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기대효과**

▮ 실질적인 민관협력기구의 활동으로 관 중심에서 벗어나서 협력적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전분야에 시민의 참여율 제고

▮ 협의체를 통하여 사전적 위험요소 제거하여 재난발생 위험을 완화

▮ 사전에 재난대응 절차 마련과 훈련 통해 재난대응 능력 제고

9) 시민안전 공간조성 지원을 위한 범죄예방시민지원센터

▢ **배경 및 필요성**

▮ 대전시민의 범죄 두려움 수준이 높고, 최근 사이버 성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급증함으로써 대전시민에게 범죄예방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범죄예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준법지원센터, 시민 봉사단체 등 사이에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관계, 비공식적 사회통제활동은 집합적 유효성(Collective Efficacy)를 증대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시민 간 신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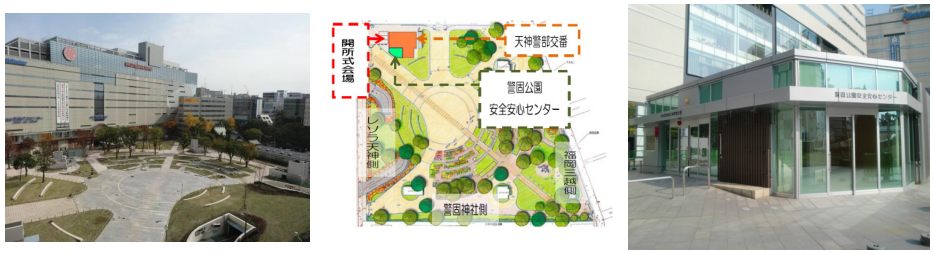
▮ 한정된 경찰력에 범죄예방을 분장시켰으나, 늘어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참여는 필수조건이 되고, 관련기관들의 협업이 필수임. CPTED의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진단, 그리고 범죄예방 거버넌스 체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대시민 접촉 소규모의 기관이 필요

▢ **주요 내용**

▮ 센터설치: 대전시민들이 자주 모이고 교통이 편리한 공원 또는 도심지에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에 기초하여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도록 함

* 일본 후쿠오카 케고 공원 안전안심센터 : 후쿠오카는 텐진역 뒤의 케고 공원에는 안전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단체들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과 자주 발생하는 범죄예방조치 등에 관한 상담창구로 활용. 또한 청소년 비행예방, 폭력 배제, 교통 안전, 도덕적 예절, 자율적 재난예방, 환경 미화 등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위해 활용. 생활안전전문원(퇴직 경찰관으로 자원봉사)이 상주하여 안전안심마을만들기의 상담을 하여 주는 창구 역할 수행



[그림 15-9] 후쿠오카 케고공원과 위치하여 있는 안전안심센터 모습

- 설립위치: 범죄취약지역인 기성시가지 내 공공기관의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신시가지에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역사, 공공기관 등)에 상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활용
- 운영인력 : 운영인력은 상주인력과 자원봉사인력으로 구성하고, 상주인력은 대전시 공무원, 대전지방경찰청의 파견인력, 퇴직 공무원 및 경찰관 등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인력은 변호사, 범죄예방 전문가, CPTED 전문가, 법교육 강사,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구성
- 범죄예방 시책 홍보 : 범죄예방시민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책을 홍보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과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민들이 CPTED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및 홍보 동영상을 활용하며, 범죄예방 동영상 시청 및 범죄예방 홍보물을 전시
- 범죄예방 진단 신청 : 시민 및 상가들로부터 범죄예방 진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시민안전센터가 관할 경찰서 CPO와 함께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권고함
- 죄예방 교육 :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범 사이버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
- 범죄예방 상담 : 범죄피해 가능성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예방 상담을 시행하며, 범죄예방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피해 가능성의 진단지원

-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시민들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전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실시

▢ **기대 효과**

-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두려움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범죄예방활동에의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범죄예방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범죄예방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범죄예방시민안전지원센터가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과 시민안전협의체의 거점기관으로도 역할을 기대

10)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사업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 및 기준 강화에 따른 선제적·실천적 전략 마련

* 2019. 7. 1자 개정·시행에 따른 법규적용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고시의 의무적용 확대 및 출입문·창문의 범죄방어성능 강화

- 시설물의 범죄예방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준적용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방안이 필요(영국 SBD(Secured by Design)인증, 일본 아이치현 범죄예방인증)
- 대전시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시설물의 인증사업을 추진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제도 운영' 의 조항의 삽입하여 개정

* 「건축법」 상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의무적용방침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준의 실제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의 부재로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음
* 개정 범죄예방 기준고시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화하여 출입문 · 창문의 방어성능은 기존 정하중, 동하중 시험에서 망치·도끼·드릴 등 주요 침입도구를 직접 충격하여 외부 침입에 버티는 내구성 시험으로 전환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용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을 거치도록 규정

▮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인정 및 인증 주체 설정

* 인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인정기구와 실제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한 기준의 적용여부와 수준 등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을 분리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제도'의 인정기구는 대전광역시, 인증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학회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평가서를 제출받아 건축심의 또는 허가에 반영

▢ **기대 효과**

▮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마련된 지 7년이 지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건축기준의 실질적인 적용방안은 전무하여 선언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으므로, 대전시에서 '범죄예방 시설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면 향후 지자체 단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가능

▮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

참고문헌

국가트라우마센터(2019), 일본재난심리지원체계 자료집.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김세련·이현성·이재규(2020), “스마트병원의 의료 서비스스케이프 디자인 특성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아산병원 병동 내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호 1권, 168-180.

김정득 外(2015), 〈2014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대전복지재단.

김지영 外(2019),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대전복지재단.

노진철, 이동훈, 김세경(2016). 재난 대응시 심리지원 체계의 국내외 현황. 놀이치료 연구 20(1), 117-133.

대전광역시(2016). 〈2030 대전 그랜드 플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018a),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018b),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019), 〈2019년도 2/4분기 민선7기 약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020a), 〈2020년 주요업무계획〉

대전광역시(2020b), “제60주년 3·8민주의거, 다채로운 기념사업 추진: 대전시, 3개 부문, 15개 세부추진과제 마련.”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보도자료 (3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201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2022년〉,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2019),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2020), 〈2019년 대전관광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201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2022년〉,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

류유선(2019), 〈대전지역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박선권(2019),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입법정책보고서 28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2019a),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9b). 〈2019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과위원회(2018).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보건복지부.

송지현·김동기(2018),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대전복지재단.
양성욱 外(2019), 〈대전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 대전광역시청.
염인섭·한상헌·윤설민·이정범·이은재·지남석(2020), 〈대전·세종 걷기여행길 장소브랜딩 강화방안〉,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유병선(2018),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과 정치〉 1(2)
유병선(2018), "민선6기 대전광역시 시민소통정책 평가와 활성화 방안." 〈지역과 정치〉 1(1)
유병선·김덕진(2019), 〈대전광역시 인권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윤설민(2018a), 〈2019 대전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대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윤설민(2018b), 〈대전의 관광 이미지 평가를 통한 (리)포지셔닝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윤설민(2019a), 〈'대전 Ex(Exciting experience) 10'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윤설민(2019b), 〈대전형 국내여행 연합관광상품 도입여건분석과 향후 운영과제〉,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윤설민(2019c),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티투어의 개선방안〉,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윤설민·염인섭(2019), 〈시민의식조사를 활용한 대전의 도시 브랜드 정립 방안: 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7030)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윤설민·한상헌·염인섭(2019), 〈고암 이응노를 활용한 대전의 예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
이동훈·강현숙(2015). 미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 및 재난위기상담의 실제와 시사점. 상담학 연구, 16(3), 513-536.
이동훈, 강지윤, 강현숙, 이혜림(2016).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심리지원체계 고찰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73-90.
전북연구원(2020), 〈2020 10대 아젠다〉
정경석(2018), 〈대전 마을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진단 및 활성화 방안〉.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정백근(2018). 지역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 보건복지포럼, 6, 50-61.
정종호 外(2017),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조규현·이영광(2018),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 (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2006),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공공병원 운영모델〉, 진보정치연구소.
최길수·유병선(2019), 〈새로운 대전 그랜드 플랜: 시민주권·공동체〉 (미간행)
최현수 外(2018),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관광공사(2018), 〈2017 MICE참가자 조사〉, 한국관광공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2019), 〈2018 MICE참가자 조사〉, 한국관광공사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 "사회적 약자가 겪는 코로나19와 극복을 위한 제도마련 시급."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87호
허현희(2018).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 접근. 보건복지포럼, 6, 62-77.
Liu Y., Shi L., van der Mei H.C., Wu W., Ren Y., Busscher H.J. (2020) Perspectives on and Need to Develop New Infection Control Strategies. In: Li B., Moriarty T., Webster T., Xing M. (eds) Racing for the Surface. Springer, Cham

매일경제(2020.3.29.), '대전=성심당' 지역 찾은 관광객 방문·추천장소·음식 1위
미디어붓(2020.3.29.), 대전지역 찾은 관광객 방문·추천장소·음식 1위는 '성심당'
박동천(2020), "살롱문화와 사회자본." 〈대전일보〉 (3월 9일)
이승준(2020), "투표는 처음이지만." 〈한겨레21〉 No. 1303
에이블뉴스(2014.9.26.), 뉴스포츠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장재완(2017), "대전학생인권조례, 또 다시 유보.. 재추진 불투명." 〈오마이뉴스〉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2020.3.4.), 여행자와 현지인이 꼽은 최고의 먹거리 여행지는?
한겨레신문사(2020), "팬데믹-민주주의=공포." 〈한겨레21〉 No. 1305
한국경제(2020.3.29.), '대전=성심당' 지역 찾은 관광객 방문·추천장소·음식 1위

e-나라지표 홈페이지, 〈www.index.go.kr〉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